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2014

2014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4 Annual Report

발간에 즈음하여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환경 보전 및 관리정책, 토지·주택정책,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 건설산업의 육성, 국토인프라 공급,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토분야 정책수립에 기여해왔으며, 나아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 한반도 공간정책,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과 국민행복 향상, 국토자원 보전·관리 등의 책무를 다하고, 국토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新국토정책의 선도적 개발’을 연구사업 목표로 정하고, 국토분야 전반에 걸쳐 총 222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정책 지원’, ‘미래창조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 창출’의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그 세부목표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을 위해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방향 연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 방안 연구’,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 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 창출을 위해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연구’,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 SOC 정책방향 연구’,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2014년도 한 해 동안 국토연구원 연구진들이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열망으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들의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연차보고서 발간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정책고객 및 국민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에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구결과들이 각계각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고객지향의 연구상품을 창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상품들이 국민행복을 향상시키는 정책들로 직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토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국토연구원장 김동주

김동주

앞으로도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고객지향의 연구상품을 창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ONTENTS

Chapter I.

일반현황

- | | |
|------------------|----|
|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 8 |
| 2. 연혁 | 9 |
| 3. 조직 및 인원 | 10 |
| 4. 2014년도 예산현황 | 11 |

Chapter II.

주요 연구사업

- | | |
|------------------------------|----|
| 1. 2014년도 연구사업 및 2015년도 연구방향 | 15 |
| 2. 분야별 주요 연구 | 19 |

Chapter III.

국제협력사업

- | | |
|-------------------------|-----|
| 1. 국제학술교류 | 90 |
| 2. 개도국 대상 국토정책 지원 및 컨설팅 | 96 |
| 3. 연수프로그램 | 101 |

Chapter IV.**연구지원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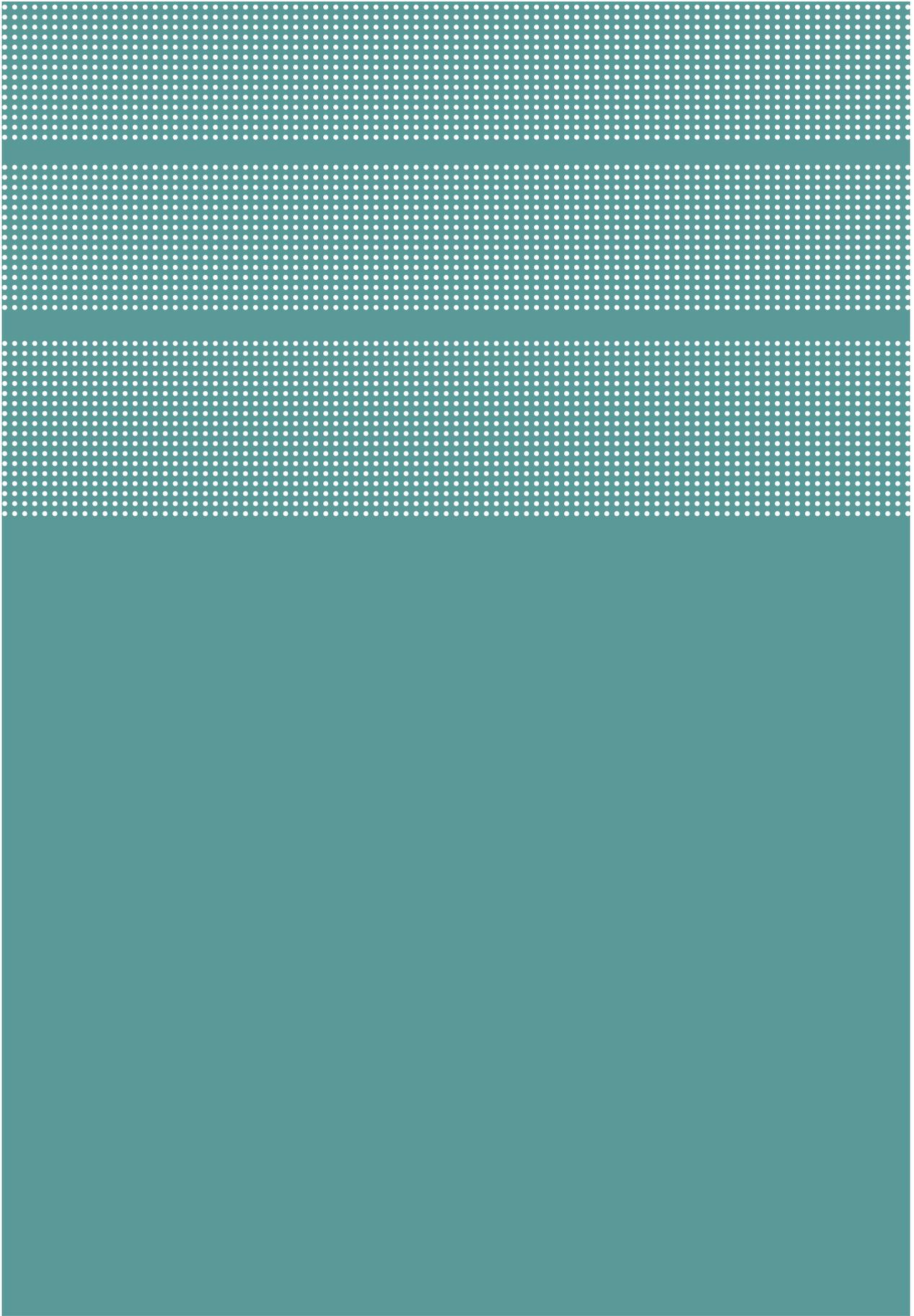
- | | |
|---------------------|-----|
| 1. 연구지원활동 | 110 |
| 2. 연구 관련 주요 행사 · 교육 | 117 |

Chapter V.**정기간행물 발간**

- | | |
|---------------------------------|-----|
| 1. 국토(387호~398호) | 132 |
| 2. 국토연구(80권~83권) | 138 |
| 3. 국토정책Brief(448호~495호) | 139 |
| 4. 도로정책Brief(75호~86호) | 141 |
| 5. 건설경제(76권~78권) | 142 |
| 6. SPACE & ENVIRONMENT(58호~60호) | 143 |

Chapter VI.**부서소개**

- | | |
|-------------|-----|
| 1. 부서별 업무소개 | 146 |
| 2. 부서별 인원현황 | 149 |
-





C h a p t e r

I

일반현황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8
2. 연혁	9
3. 조직 및 인원	10
4. 2014년도 예산현황	11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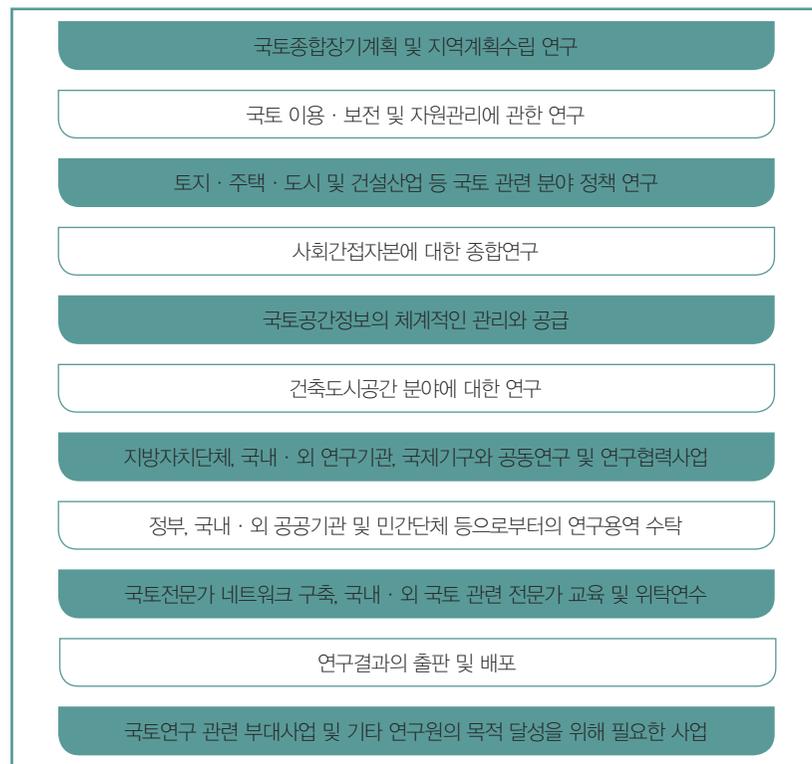
설립 목적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GIS,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연혁

1970's

- 78.04.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 78.09.13 초대 노용희 원장 취임
- 78.10.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설립자: 대통령)
- 78.12.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 공포
(법률 제3140호)

1980's

- 81.06.0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흡수·통합(정부출연기관정비계획에
의거)
- 81.12.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 84.12.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 88.08.09 제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90's

- 92.05.09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93.03.30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 93.09.07 제6대 이진영 원장 취임
- 94.04.27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안양시 평촌
소재)
- 97.03.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 97.07.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 99.01.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99.12.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2000's

- 02.12.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 02.05.10 2001년도 경제사회연구회 최우수 연구
기관 선정
- 05.05.26 '경제사회연구회 2004년도 평가결과'
최우수연구기관상 2회 연속 수상
- 05.12.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 06.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06.07.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 선정
- 06.12.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07.06.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 07.07.17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
- 08.04.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08.04.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
기관 선정
- 08.06.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 08.10.01 새 C.I. 선포 및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09.05.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0's

- 10.02.10 '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
(단체) 수상
- 10.12.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
ment Partnership Center) 설립
- 11.06.18 제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 11.12.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
출연·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 12.08.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 13.08.19 제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 15.06.30 제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3. 조직 및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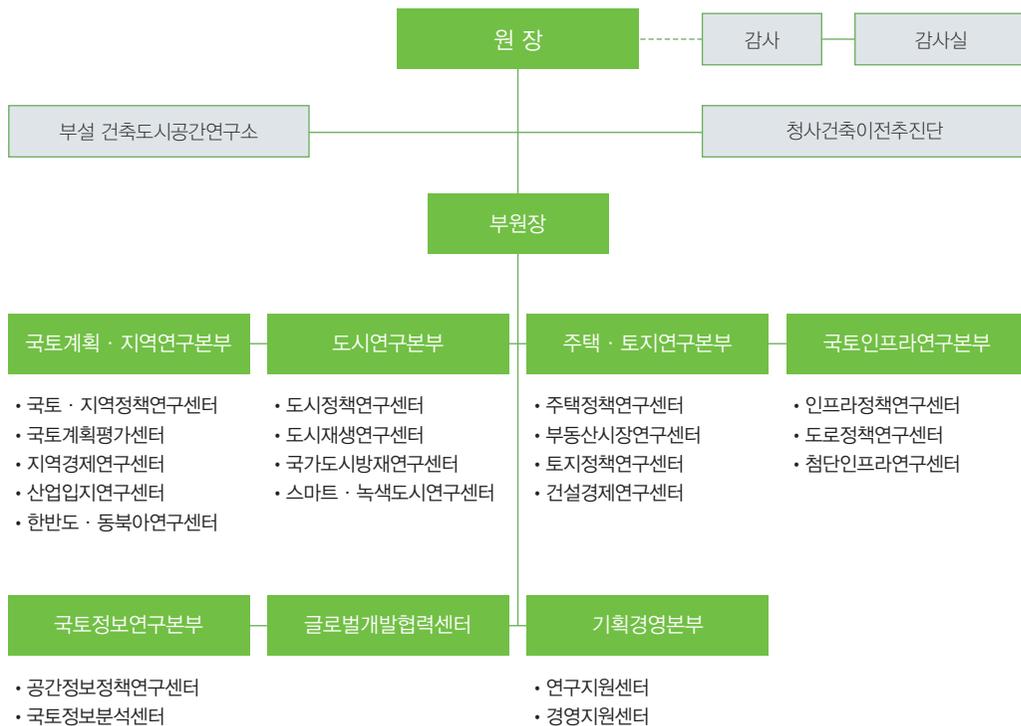
인원

2015년 9월 기준 현원은 162명, 정원 218명으로 연구직이 137명, 비연구직이 24명이다. 연구직은 다양한 전문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력별로는 박사 97명, 석사 38명, 학사 2명이다.

계	임원	연구직			관리·전문직	
		박사	석사	학사	관리직	전문직
구성	원장	97명	38명	2명	19명	5명
162명	1명	137명			24명	

조직구성

국토연구원의 조직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국토정보연구본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등의 연구본부와 행정부서인 기획경영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보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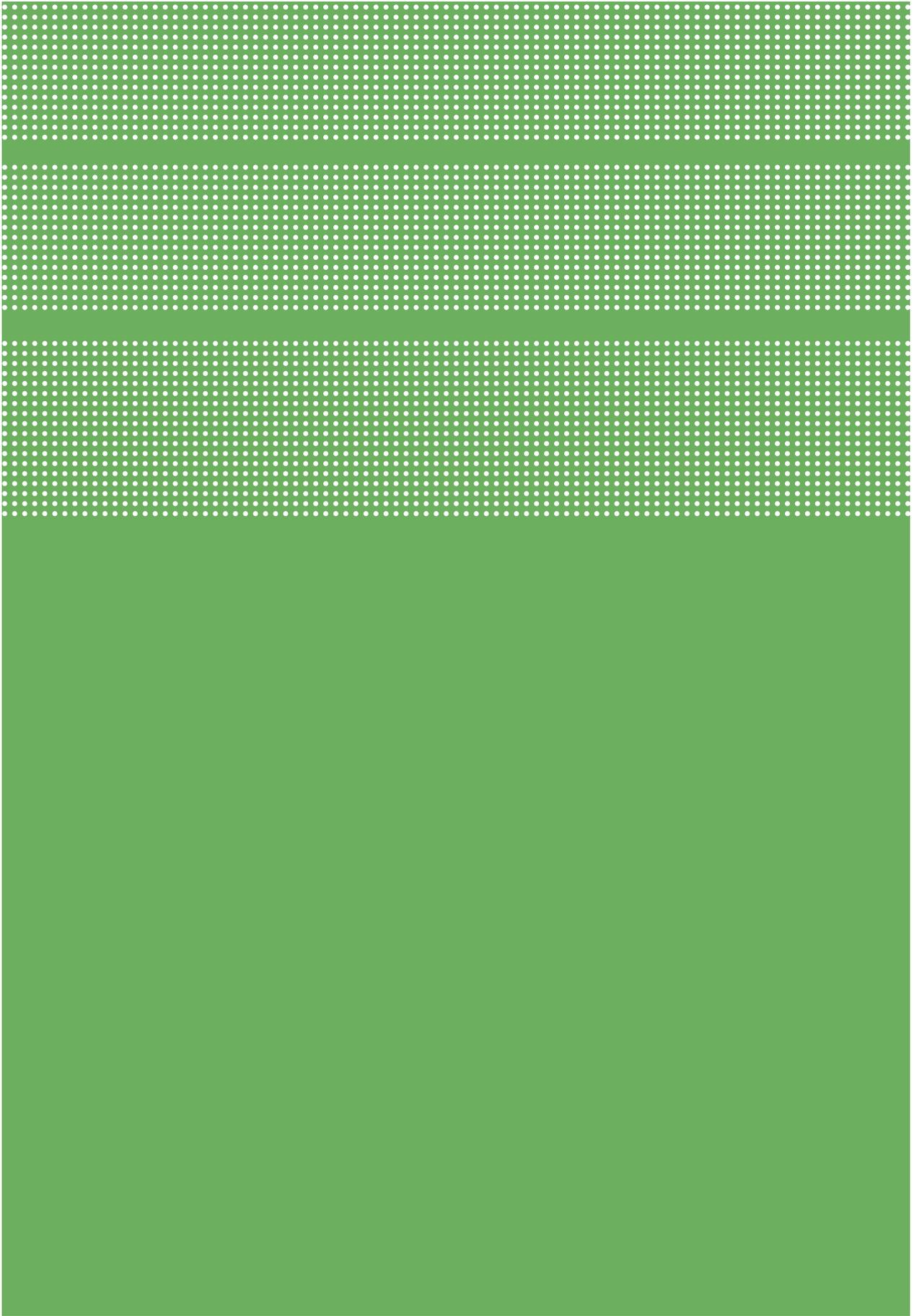
원장		김동주	
부원장		김종원	
본부장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이용우	국토정보연구본부	사공호상
도시연구본부	김태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정일호
주택·토지연구본부	천현숙	기획경영본부	이원섭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이상건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김대익

4. 2014년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수입		지출	
구분	예산	구분	예산
1. 정부출연금	19,046	1. 인건비	14,328
2. 자체수입	23,403	2. 연구사업비	21,889
3. 전기 이월금		3. 경상운영비	1,393
4. 차입금		4. 시설비	4,807
		5. 차입금 상환	
합계	42,449	합계	42,417

※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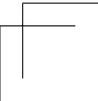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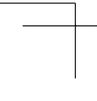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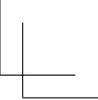


Chapter

II

주요 연구사업

1. 2014년도 연구사업 및 2015년도 연구방향	15
2. 분야별 주요 연구	19



C h a p t e r . II

1

2014년도 연구사업 및
2015년도 연구방향

2014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2014년도에는 연구사업 목표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新국토정책의 선도적 개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정책 지원’, ‘미래창조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 창출’이라는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과제 유형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등 33건의 기본연구과제,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등 25건의 수시연구과제, ‘낙후지역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164건의 수탁과제 등 총 22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기본연구과제 33건, 수시연구과제 25건 및 수탁연구과제 105건을 완료하였고, 수탁연구과제 중 59건은 2015년으로 이월되었다.

2014년도에는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본부별로 다음의 다섯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의 성쇠, 지역 간 관계, 공간구조의 유형 등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발전을 장기적 관점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각 시나리오별 기회 및 위협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화 및 회피전략 등 실천전략을 마련하였다. 둘째,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재생 과정에서 민간 참여 여건과 현황,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도방안 연구’에서는 임차시장이 전세 위주에서 월세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세밀한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전세 및 월세 변화의 양상 및 특징을 가격대별, 주택유형별, 세대주 연령대별, 주택규모별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에서는 우리나라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적·심리적 내부요인과 공간적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교통사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교통사고 취약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교통안전 개선방안 및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에서는 국민공감 국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의 삶터·일터·쉼터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현장중심, 수요자중심 정책에 국토체감지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생산 및 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015년도
연구사업목표**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기관의 운영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개발’로 선정하였다. 이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사업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 둘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 정책 지원, 셋째, 미래지향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 창출이다. 2015년도에도 이러한 세부 연구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하여 국토분야의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으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2015년도
중점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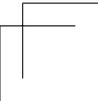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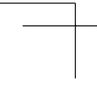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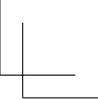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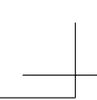
2015년도 수행과제 중 국정기조와 정책현안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국가정책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각 연구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는 그간의 국토종합계획 운영 실태분석과 함께 주요국의 국토종합계획 사례 및 동향을 분석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법률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토지정책 방향 연구’는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의 토지구유화·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중국, 베트남 등 체제전환 국가와 통일의 경험이 있는 독일의 토지제도 및 문제점을 고찰하여 통일에 대비한 토지소유·토지관리·토지이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는 가구실태조사에 기반한 현 교통수요 예측방법의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통관련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현황 및 특성,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여 교통수요 예측과정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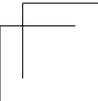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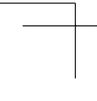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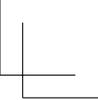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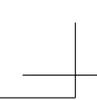
넷째,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는 현재까지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구축 및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분야별 주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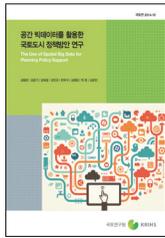
1 국토계획 · 지역연구	21
2 도시연구	45
3 주택 · 토지연구	55
4 국토인프라연구	69
5 국토정보연구	75
6 색인	83



1 국토계획 · 지역연구

National Territorial & Regional Research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22
-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23
-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비교와 정책과제 24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25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26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27
-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방향 연구 28
-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 제고 방안 29
-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30
- 인구감소기 읍면 중심의 농촌지역 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31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32
-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33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34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35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36
-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7
- 지역보행환경 평가모형 구축연구 38
-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연구 39
-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40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41
-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42
- 혁신 ·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43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The Use of Spatial Big Data for Planning Policy Support

김동한, 강혜경, 김준기, 한우석, 박준, 강민규, 성혜정, 김은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민과 기업의 각종 활동에 대한 방대한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의사결정과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포괄하고 있어,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국민체감형 국토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간 빅데이터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토도시 분야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보다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도시 정책 변화 동향과 내용적 범위를 살펴본 후, 국토도시 정책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공간 빅데이터 구축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국토도시 분야의 활용가능성과 현안문제 등을 진단하고,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연구를 수행한 뒤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국토도시 분야에서 공간 빅데이터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토도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 수행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 안정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토도시 정책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관심사항 등을 보다 더 자세하게 반영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는데 공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생활밀착형, 증거기반, 데이터 추동의 국토도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때, 공간 빅데이터를 국토도시 정책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와 기능의 분석방법과 분석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빅데이터를 국토도시 정책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각화-분석-시뮬레이션' 기능을 지닌 공간 빅데이터 통합분석 활용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를 실험

개발하였다. 그리고 건물에너지 데이터, 휴대폰과 신용카드 데이터 등과 같은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수도권과 제주도 등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건물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건물별·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자원절감형 국토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휴대폰과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맞춤형 국토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도시 분야에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메타 데이터 구축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과 구체적 실천수단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개발 등 기반조성에서 더 나아가 공간 빅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분석 활용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수요가 견인하는 공간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에너지사용 분석, 지역활력도 분석,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통행패턴 분석 등 국토도시 분야의 공간 빅데이터 활용선도과제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국토도시 정책 담당부처, 공간 빅데이터 기반조성 담당부처, 전문 연구기관 등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2014. 3. 1~2014. 12. 31

서지사항: 158면, 국토연 2014-19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The Study for Developing of Flood Analysis Approach Considering Territory Changes

한우석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하여 2011~2012년 서울, 경기권의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홍수피해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미래에는 그 발생 빈도 및 강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등 다양한 홍수 분석방법 및 정책이 수립·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 변화 및 토지이용별 공간분포 고려, 미래 국토변화 데이터의 불확실성 저감, 유역단위의 홍수분석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후변화 홍수분석방법 및 정책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사례유역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먼저, 기후변화 시나리오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저감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RCP 시나리오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례지역인 안양천 유역을 대상으로 30년(1975~2005년)의 장기 강우 관측값과 RCP 8.5의 과거값을 비교해 본 결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7, 8월)에 RCP 8.5 자료가 강우 관측값보다 약 100mm/월 정도 낮게 나타났다. 과거 관측값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기후 특성 및 일기 발생에 필요한 매개변수인 규모매개변수, 형상매개변수, 천이확률(NR, RR) 등을 산정하여 RCP 미래 데이터를 보정했다. 미래 세 개의 시간대별(Future 1: 2011~2040, Future 2: 2041~2070, Future 3: 2071~2100)로 돌발홍수, 장마 등 다양한 홍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보정된 RCP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시간대별로 1일과 5일 강우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했다. 또한, 미래 토지이용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토지이용변화 예측 모델인 Dyna-CLUE 모형의 서브 알고리즘에 과거 토지이용 변화 추세선, 개발제한 지역 및 입지 특성 등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특성 등을 적용하여 세 개의 토지이용변화 시나리

오별, 시간대별 토지이용변화 데이터를 산출했다. 보정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데이터, 미래 토지이용변화 데이터 등을 분포형 강우-유출 모델인 S-RAT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시간대별, 강우지속시간별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별 유출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미래로 갈수록, 그리고 시가화율이 높을수록 최대홍수량은 증가했다. 하지만 최대홍수량 변화는 토지이용변화보다는 기후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홍수분석 결과인 최대 홍수량이 그 지역의 홍수위험은 아니지만, 현재 대비 미래의 최대홍수량 변화는 홍수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과거 토지이용 변화추세, 유역의 특성,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 등을 활용하여 시간대별 미래 토지이용변화 및 토지의 공간적 분포 데이터를 구축하여 홍수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미래 홍수분석 시 기후변화 시나리오 데이터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 및 검증단계를 통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 등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을 수행할 때는 미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역단위의 홍수분석을 수행하고 현재의 유출 특성과 비교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 등을 현행 기후변화 홍수 관련 분석방법 및 정책에 포함하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향후 정량화된 홍수위험을 분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기간: 2014. 9. 1~2014. 11. 30
 서지사항: 90면, 국토연 2014-13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비교와 정책과제

A Study on Comparing Institutions on Spatial Planning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Policy Issues

이상준, 박태선, 박세훈, 강호제, 이백진, 전성제, 배은지

본 연구는 남북한의 국토분야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양측 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통일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남북 간 국토분야 제도통합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부분야별 제도통합 방안이 단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할 국토분야 관련 제도는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도시관련 제도, 주택관련 제도, 산업입지 관련 제도, 교통관련 제도, 수자원 및 환경관련 제도, 관광관련 제도 등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관련 법령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향후 남북한의 국토분야 제도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통일 및 국토분야 전문가 2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5명이 응답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원내 연구진 외에 각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과 원고위탁 형태의 협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남북한 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성장, 환경에 대한 가치 등이 대울로기적 요소가 비교적 적은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제도적 수단과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 법제는 사회주의 법을 기반으로 한 주체사상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법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국토분야의 제도통합은 결국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동일한 투자여건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의 계획수립 절차나 개발절차 가운데 북한지역의 현실에 맞게 일부 시행을 유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의 개정을 통해 탄력적인 시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남북한이 국토분야의 제도통합을 추진해 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의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국토기본법을 점진적으로 이식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국토분야 전문가들이 학술적 연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이식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국토기본법 실행에 따른 긍정적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분야 제도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과 국토관련 각 분야별로 남북 제도통합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간의 제도통합에 대비해 국토분야의 전문 기술용어 통일을 위한 남북협력과 국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기술분야의 각종 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주민들에게 기존 제도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작업을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래 남북한의 국토분야 제도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4. 8. 13~2014. 12. 31

서지사항: 217면, 국토연 2014-36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The Strategic Suggestions on Cross-Border Projects in Tumen Region

김천규, 이상준, 임영태, 이백진, 이건민

본 연구는 두만강유역에서 남·북·중·러 4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초국경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향후에도 후속 협력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두만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사업으로 두만강유역 교통·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사업,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 공동개발사업, 두만강 국제관광지대 개발사업 및 두만강유역 국제환경협력사업을 선정하였다.

두만강유역 교통·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사업은 주변 국가들의 국제물류 증가, 중국 동북지역의 급속한 성장, 북한의 개방, 극동러시아지역의 경제발전 등을 감안할 때, 이 지역들을 자유로이 연계소통할 수 있는 교통물류네트워크 기반의 확보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 개발사업의 실천과제로 나진항 배후지역에 항만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다자협력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으며 나진-하산 도로망 신설 등을 통한 단거리물류의 연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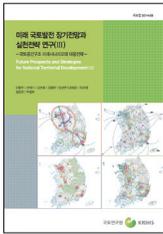
나선 국제복합산업단지 공동개발은 1단계 국제산업복합단지, 2단계 국제업무복합단지, 3단계 국제자유침단산업 및 교역도시로 계획·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나선 국제복합단지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 국내 기업의 제조업 중심 산업복합단지 개발참여가 필요하다. 중국, 러시아와도 이 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력방향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정부 간 협의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 지방정부 간 교류증진, 해당지역 진출기업 지원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두만강유역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은 역내 초국경협력의 초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추진 용이성과 실천 가능성 측면에서 1단계 ‘두만강 관광벨트’ 구축

사업과 2단계 ‘두만강 대삼각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다자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망 확보의 물리적 인프라와 국경통과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만강유역의 국제환경협력사업의 중장기적 추진을 위해서는 두만강유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우선협력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국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관해 초기에는 초보적인 거버넌스 구조로 출발하고 점차 남·북·중·러 4국의 다자협의체의 초국경협력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함께 다자협력사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다자협의체 설립과 GTI 활용 등을 주요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Future Prospect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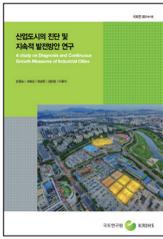
이용우, 손학기, 김선희, 김동한, 임상연, 윤영모, 임지영, 강은진, 박정호

2040년경 우리 국토의 모습을 미래예측기법을 활용하여 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국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를 2012~2014년까지 3개 년에 걸쳐 진행하였다. 2014년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의 성쇠, 지역 간 관계, 공간구조의 유형 등 국토공간구조의 미래 모습을 시나리오기법을 통해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자원 및 경제성장의 배분체제’와 ‘경제발전 및 제약요인’ 등 2개 핵심 변인을 활용하여 메가도시권 성장, 자족적 분립, 분산적 집중, 다중심 초연계 등 4개의 국토공간구조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보다 바람직한 미래 국토를 창조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별로 예견되는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화 및 회피전략을 제시하였다.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의 세계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산업·인프라 및 정주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및 도시권 회복력 제고 등의 전략이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족적 분립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생산지대 조성 및 1차산업 및 지역자원 중심의 재지역화를 추진하면서, 공동화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재도시화 전략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분산적 집중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안전 서비스 중심의 생활권 재편 및 다차원적 국토관리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국토 재생 및 인구희박지역의 기능유지 전략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중심 초연계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첨단 지능형 공간 조성 및 이중(dual)의 국토공간구조 형성을 추진하면서, 국토이용의 유연성과 복원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체계 및 주체, 관련 법·제도 개선, 자원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토공간구조 미래 시나리오와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을 토대로 국민행복과 국토경쟁력이 제고되는 바람직한 국토를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Diagnosis and Continuous Growth Measures of Industrial Cities

장철순, 서태성, 류승한, 김진범, 이윤석

특정산업으로 전문화된 산업도시가 도시의 안정적 성장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지속적 성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산업구조(전문화 또는 다각화)와 도시환경(생활·생산·혁신기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도시의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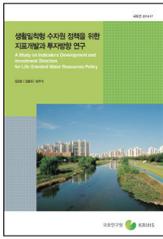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울산, 포항, 거제, 아산, 당진, 구미, 여수, 광양의 8개 산업도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계량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산업도시의 특화 및 다양화 수준, 산업구조와 고용불안정성과의 관계, 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특성, 주력산업의 생산감소가 해당 도시의 산업·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산업도시는 취업자수 변동이 시차를 두고 인구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수 변동과 인구 변동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주력산업 집중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울산, 여수, 광양 등 구산업도시의 집중도는 변함이 없거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제조업 특화도는 낮아지고, 산업구조의 다양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넷째, 산업도시의 주력산업 고용창출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산, 당진 등 신산업도시의 주력산업 고용창출률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전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고용불안정성 간에는 상관성이 있으나, 제조업의 다양성과 고용불안정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산업도시 진단 결과 주민생활과 관련한 생활기반은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기업의 연구기반인 혁신기반과 생산기반인 경제기반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 혁신기반과 경제기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도

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한 핵심분야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키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재편 추진,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의 주도로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산업구조 재편전략(단절전략, 절감전략, 보존전략 등)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과 지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는 지역·기업 통합형 산업도시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산업발전 및 도시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도시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간 산업도시에 대한 연구가 산업구조적 측면에 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산업구조적 측면과 도시 전체적 측면(생활, 생산, 혁신기반)을 함께 고려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현재를 돌아보는 물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간: 2014. 3. 1~2014. 12. 31
 서지사항: 204면, 국토연 2014-14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방향 연구

A Study on Indicators Development and Investment Direction for Life Oriented Water Resources Policy

김창현, 김종원, 한우석

본 연구는 국민행복시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의 진단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자원 정책 진단·평가 체계를 마련하며, 수요자 중심의 수자원 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활주변의 근린환경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제고되면서 하천공간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 나아가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하천공간에는 수자원 관련 투자·정책의 성과가 고스란히 투영된다. 국민생활복지의 수준이 정부정책의 성과를 가능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하면서 수자원 정책 역시 지역주민 나아가 온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성 혹은 생활체감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밀착성 혹은 생활체감성을 수자원 관련 투자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천이라는 정책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생활밀착형 만족도 평가지표, 수자원 투자·정책 평가지표 체계, 양 지표체계를 연결하는 상관성행렬로 구성된다.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투자·정책의 주민만족도와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분석한 결과, 산책이나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하여 하천을 조망하거나 경치를 감상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이용으로부터 높은 만족을 얻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민만족도 평가결과를 양 지표체계 간의 상관성 행렬을 통하여 수자원 투자·정책으로 연결한 결과 생활밀착형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휴게·쉼터, 산책·탐방로, 조깅·자전거 길 조성이나 하천 접근성과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친수기반과 관련한 정책추진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의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현행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생활밀착형 주민만족도, 생활밀착형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수자원 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유역과 정주계층, 상·하류 등 지역 간,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집단 간에 수준과 내용에서 서로 다른 특성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수자원 투자·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자연환경(생태), 친수기반, 방재·안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특징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밀착형 만족도를 중시하는 수자원 투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개별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 기능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유역을 단위로 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수자원 투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계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수자원 투자·정책의 계획수립-집행-관리-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는 그 자체로 수자원 투자·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4. 1. 1~2014. 12. 31

서지사항: 337면, 국토연 2014-17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 제고 방안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Place Satisfaction in Software Industry Agglomeration

박경현, 윤영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소프트웨어가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창조경제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를 분석하여 개인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공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산업은 2012년 기준 사업체는 1만 3,418개, 종사자는 18만 480명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0.37%, 0.97%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8~2012년 사이 사업체는 70%, 종사자는 30% 이상이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E-G 지수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리적 집중도를 측정된 결과, 2008년 약한 지리적 집중형태($\gamma=0.018$)를 나타내다 2012년 중간 지리적 집중형태($\gamma=0.026$)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국지화 정도의 변화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산업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국지모란지수를 활용하여 핫스팟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모든 구에서 핫스팟이 관측되었으며, 서울 주변의 수원, 성남, 안양, 용인 등으로 집적지가 확대되고 있다. 넷째, 시군구 차원의 소프트웨어 집적지 고찰을 위해 규모, 특화, 핫스팟, 성장성 등 4단계를 순차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는 강남구·구로구·금천구·서초구·영등포구·마포구·송파구·중구·성동구·종로구·강서구(서울)·분당구(경기 성남), 동안구(경기 안양) 등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 중 2008~2012년간 성장성이 가장 높은 분당구(경기 성남)를 사례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장소만족도 조사결과, 소프

트웨어 산업 종사자는 고학력, 낮은 연령, 짧은 근속기간의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판교라는 장소에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은 깨끗하고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판교테크노밸리의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기업입장에서는 업체 운영의 효율화, 집적경제의 효과, 인력의 수급 및 관리를 위해 판교 입주를 결정하였으며, 판교테크노밸리의 문제점으로 취약한 공공의 역할을 들었다.

산업의 성장에 장소의 명성이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산업정책은 종사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산업정책으로 인하여 장소적 명성을 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공공지원이 공간전략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Value and Cost Bearing of Safety

안흥기, 김혜란

본 연구는 선진국 수준의 예방적, 선제적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식의 전환과 함께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선진국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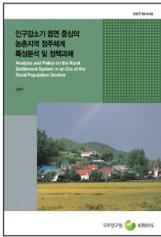
첫째, 안전 및 안전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국민안전 의식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안전에 관한 국민 의식과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은 대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조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의식변화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간이 경과해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안전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전관련 비용지출과 안전 수준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위한 비용지출은 절대규모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사망·사고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양적,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건수 및 보행 중 교통사고건수 등도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많다. 재해예방 관련 투자는 최근 사후복구보다는 예방투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진국 수준에 비하여 낮으며, 선진국의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재난·재해 안전관련 R&D 투자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안전의 사회적 가치 평가방법과 구체적인 사례로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국제비

교를 통해 알아 본 결과, 우선 공공투자평가 시 안전의 사회적 가치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의 사회적 피해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회적 편익으로 평가하는 피해비용 환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1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국은 약 5억 원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101억 원, 영국은 31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안전의 가치에 대한 선진국과의 격차가 표면적으로 소득수준의 격차보다 훨씬 큰 것은 인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안전에 관한 지불의사를 보험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우선 정부에서 부담하는 정책성 보험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안전에 대한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손해보험 시장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전에 대비한 비용지불용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민간부문의 손해보험 시장의 증가는 비용의 지불주체와 편익의 수혜주체가 일치하지만 공공부문은 비용의 지불주체와 편익의 수혜주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인구감소기 읍면 중심의 농촌지역 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Analysis and Policy on the Rural Settlement System
in an Era of the Rural Population Decline

김광익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정주체계를 통근통행 연계구조 및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 등을 통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해외 농촌지역 정주체계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2000년대 인구가 감소한 읍·면이 전체의 88.6%에 해당하는 읍·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의 인구규모별로 보면 5천 명 미만의 읍·면은 90%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난 반면에 인구규모가 클수록 감소한 읍·면 비중이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읍·면의 인구감소로 인해 읍·면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난다. 읍 중에서도 특히 군청 소재지 읍도 인구규모가 작아지고 대부분 지역이 인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군중심지에 비해 도농복합시 중심부는 전체 52개 지역 중 50%가 넘는 28개 지역에서 인구증가를 보인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과 관련하여 통근통행 연계구조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통행중심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은 인접한 주변 시·군지역과 연계가 높은 구조를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천안시 동부, 제천시 동부 등 일부 통행중심성이 높은 지역도 자체 시·군 이외에 주변 1개 시·군 지역을 연계지역으로 포함하나, 이들 2차 중심지는 자체 시·군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들 이외의 대부분 시·군들은 대체로 시·군 수준에서 중심지와 주변지역으로 연계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일부 시·군의 경우 2차 통행중심지가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중심지계층 구조 및 중심지계층 배열양상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위중심지의 상대적 저발전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더 두드러졌다. 중위중심지의 공간적 편재를 고려하면, 중위중심지와 하위중심지의 상대적 비율 문제는 지역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두 사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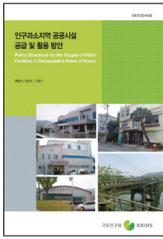
의 지역행복생활권별 중심지계층 배열관계를 분석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지역행복생활권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는데, 심한 경우 중위중심지와 하위중심지 간 비율이 1:14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 행복생활권도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촌지역 정주체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농촌인구감소현상에 대응하는 선별적인 중심지 육성이다. 향후 인구감소기에 처한 농촌지역 정주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종전과 같이 상당수의 일반 읍·면소재지를 육성하는 정책에서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선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영국 잉글랜드의 마켓타운이나 독일의 하위중심지 육성 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행복생활권 내 중심지 간 연계협력 강화다. 사례지역으로 본 우리나라 통행연계구조는 자체 시·군 내에서 중심지와 주변지역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일부 시·군에서는 중심지 외에 부중심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이들 시·군 중심지 및 부중심지의 역할이 아직도 매우 크고 중요함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도농연계생활권이나 농어촌생활권의 경우 구성된 시·군 지역들이 별도의 독자적인 소생활권을 형성하게 되는데, 구심점이 약하기 때문에 권역 결속을 위해 중심지 간 연계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셋째, 농촌지역 중심지계층상 중위중심지 육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중위중심지가 담당해야 할 필수서비스 공급기능 중에 결핍된 기능들을 찾아내 적절히 배치하는 서비스공급 정책이다. 다른 한 가지는 경쟁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개발거점 역할을 하는 중위중심지 자체를 육성하는 방법이다.

연구기간: 2014. 9. 1~2014. 11. 30
서지사항: 106면, 국토연 2014-33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Policy Directions for the Supply of Public Facilities in Depopulated Areas of Korea

변필성, 김명수, 임상연

본 연구는 인구과소지역의 공공시설 이용실태와 공급·활용 실태를 고찰하고 시설 공급자와 이용자 입장에서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의 과제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고려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하여 공간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인구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인구과소지역 시·군은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재정력이 취약하며 일자리(근무 취업인구)도 빠르게 줄어들었고 노년층(65세 이상) 인구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군 또는 인구과소지역 외 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공공시설 관련 정책동향을 법령, 예산회계 지침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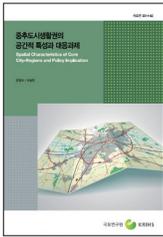
셋째, 인구과소지역 중 선정된 사례지역 5개 군(괴산군, 봉화군, 서천군, 순창군, 청송군)을 대상으로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시설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대한 사례지역 지자체의 대응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실태 고찰 결과와 관련하여 중심지 체계변화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변화는 사례지역 내 읍·면별로 인구수와 비중의 변화, 중심지 기능에 밀접한 산업 부문인 도매 및 소매업의 종사자와 그 비중의 변화를 통계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지역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도출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

설 공급·활용 과제는 ① 마을로부터 군청소재 읍 등 지역 내 주요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② 마을단위 기초서비스 공공시설(예: 경로당)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 증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 ③ 중심기능 쇠퇴가 우려되는 면소재지에 주민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시설 설치·확충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 필요, ④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넷째, 인구감소 또는 과소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온 독일과 일본의 관련 제도 및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 주정부가 균등한 생활여건, 기초서비스, 주민의 생존배려를 보장하기 위해 주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중심지와 그것에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배후지를 설정하고 중심지 위계별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제시하며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인 작은 거점 만들기 및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에 관한 시책, 그리고 주민 참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작은 거점의 조성·운영과 공공시설의 다기능화 사례, 공익성을 갖춘 역외기업 유치 등을 통한 공공시설 재활용 사례를 고찰하였다.

다섯째, 사례지역 설문조사 및 현지면담으로부터 도출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 독일 및 일본의 관련 제도와 사례 고찰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종합하여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 과제에 관해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마련, 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기능보강·다기능화와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대책 마련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14. 3. 1~2014. 12. 31
 서지사항: 258면, 국토연 2014-23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re City-Regions and Policy Implication

윤영모, 박경현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중추도시 생활권 등 지역생활권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추 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추 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종 지원정책 및 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구조 특성 분석을 토대로 정부가 표방한 중추도시생활권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과 공간 구조 이론 및 분석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중추도시 생활권의 공간구조를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즉, 중추도시생활권의 다핵성(집중성), 구성지자체 간 기능적 연계, 경제·사회적 활력 수준, 일자리 등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권역별 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20개 중추도시생활권별 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고용 집중도 및 통근 집중도 측면에서 광역시 중심의 권역은 대체로 단핵형, 지방중소도시 중심의 권역은 대체로 다핵형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성 지자체 간 기능적 연계성이 가장 높은 권역은 원주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인 반면, 가장 낮은 권역은 세종공주권, 홍성예산권, 울산권 등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사회·경제적 활력 수준을 인구성장 추세를 통해 분석한 결과, 11개 권역은 성장형 권역, 9개 권역은 쇠퇴형 권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심 도시 및 주변지역의 인구성장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추도시생활권의 일자리 증가량은 대체로 중심도시의 일자리 증가량이 주변지역 일자리보다 큰 중심도시 성장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개 권역 중 12개 권역에서 인구 및 일자리의 공간적 불균형성이 완화되는 추세이나, 일부 권역에서는 오히려 불균형성

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가화지역의 확산 추세를 살펴본 분석결과에서는 대체로 광역시 중심의 중추 도시생활권에서 도시적 용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중심도시보다는 주변지역의 도시적 용지 확산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개 중추 도시생활권을 단핵연계형 6개 권역, 단핵독립형 4개 권역, 다핵연계형 5개 권역, 다핵독립형 5개 권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장단점을 강화 및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0조)에 규정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지역생활권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체계 재편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가 표방한 중추도시생활권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Metho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Sustainable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민성희, 김선희, 남기찬, 박종순, 박정호

본 연구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토계획 평가 기법을 검토·적용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토계획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기법을 검토하고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국토계획 수립지원에 활용가능한 평가기법을 도출하고, 국토계획 사례에 적용하여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국토계획의 특성 및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라는 국토관리 기본이념별로 적용 가능한 평가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조사에서 도출된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14개 평가 기법(시나리오 분석, 참여기법 및 주민의견 수렴, 다기준 분석, 인과사슬 분석, 전문가 판단, 비용-편익 분석, GIS 분석, 환경용량 분석, 네트워크분석, 생태발자국 분석, 지속가능성지표, 트렌드분석, 사회계정행렬기법, 투입산출분석)에 대한 평가기법의 개요, 목적, 필수요소, 장·단점 및 예시 등을 통하여 국토계획평가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국토계획별 적용 가능성, 기본이념별(효율성, 형평성, 환경성)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판단, GIS분석, 지속가능성지표는 다양한 계획유형 및 모든 기본이념에 적용 가능한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생태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계획에 적용 가능하나 주로 환경성 평가에 적용가능한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 참여기법, 트렌드 분석, 모델링 분석은 다양한 계획 및 모든 기본이념에 적용 가능하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기법이다. 환경용량분석, 생태발자국 분석은 주로 환경성 평가에 적용 가능하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기법이다. 비용·편익 분석, 사회계정행렬 기법은 주로 효율성 평가에 적용 가능하나 충분한 정량적 자료가 필요

한 기법이다. 투입산출분석은 주로 효율성 평가에 적용 가능하며 투입의 양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에 적용 가능한 기법이다.

다양한 평가기법을 실제사례에 적용해본 결과, 전문가 판단에 의존해오고 있는 현재의 정성적 국토계획평가와 병행하여 정량적 평가기법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정량적 평가를 위한 자료구축과 시간 및 비용 소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보되어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토계획(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확대 도입하고자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평가가 정착되고 국토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토계획 특성에 알맞은 정성적·정량적 평가기법이 좀 더 다양하게 개발되고, 다양한 계획유형에 따른 평가기법 적용 사례를 많이 축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제가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xamin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gional Resil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하수정, 남기찬, 민성희, 전성제, 박종순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정성의 시대에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 증대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회복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회복력에 대한 지표 및 지수 개발 사례와 정책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및 해외의 사례,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회복력 진단지표를 인적, 물적, 혁신, 경제, 사회·문화자본 등 5가지 영역으로 설정하고 제시된 주요 지표들을 활용하여 1997년과 2010년 지역 회복력 진단 지수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지역 회복력 진단지수가 높아졌으나 강원도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서울 등의 진단지수는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진단지수 순위가 낮은 지역들은 강원도, 서해안,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해당되었다.

이와 더불어 취약성 지수, 회복성 지수, 회복력 종합 지수, 회복시간 지수 등을 통해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의 지역 회복력을 분석하였다. 회복력과 취약성 수준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진단지표의 평균값 비교를 통하여 취약성이 높은 지역들과 회복력이 높은 지역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취약성을 낮추고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인적자원과 고용확대, 기반시설의 충분한 공급, 지역의 토지가치 향상, 지식기반 제조업 확장 및 다각화, 제조업 및 생산자 서비스업의 특화도 강화, 지자체 재정자립과 안정성 증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의 다양성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회복력 제고를 위한 국토 및 지역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 회복력 강화로 제안하고 5가지 영역별 정책방향(인적자본 확충 및 노동시장

의 유연성 강화, 물적 인프라의 지속성 유지, 혁신능력의 업그레이드, 경제구조의 안정성 확보, 사회적 네트워크 및 자본의 강화)을 설정하여, 각 정책방향별 전략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상과 같은 5대 정책방향과 전략들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 과제들로 회복력 수준 관련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 회복력 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강화, 지자체별 지역 회복력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활용, 위기대비 및 위기 이후 대응 계획·제도 도입, 주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소통 활성화,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중장기적인 국토 및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The Policy Directions to Relieve the Inter-regional Cultural Disparities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20세기가 개발과 성장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는 개인의 지적·정신적·행위적 소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엔총회에서 '문화와 발전'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을 국정기조로 삼을 정도로 문화의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문화융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문화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이른바 문화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국토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를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격차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의 지역 간 문화격차 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와 문화향유 만족도의 격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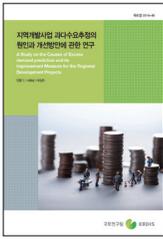
연구결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문화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별 이용빈도와 이동거리, 편의시설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지에 복합문화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

자체별로 유사한 문화시설들을 설치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과의 문화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문화콘텐츠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문화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를 도시재생이나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나아가야 한다. 문화시설의 합리적 관리와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문화시설의 위탁관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관련법률 및 계획들 간의 위계를 정립하고, 관련 용어정의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이제 바야흐로 전 세계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를 삶의 깊은 곳까지 끌어들이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국토공간 어느 곳에서나, 국민 누구나 문화를 통해 윤택하고 품격 있는 삶을 끌고갈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4. 3. 1~2014. 12. 31

서지사항: 206면, 국토연 2014-12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of Excess Demand Prediction and Its Improvement Measure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안홍기, 서태성, 박경현

본 연구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수요추정의 왜곡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또한 실증분석이 어려운 정치·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그룹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회통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원인이 사실인지를 알아보았다.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 추정의 주요 원인별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래인구자료’의 전국적 정합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광역시도 장기발전계획’상의 2020년 기준 목표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치에 비하여 약 14.2%(15개 광역시 평균), ‘시군 장기발전계획’의 경우 26.4%(133개 시군 평균) 과다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계획의 기준이 되는 장래 목표인구가 과다추정되어 있으므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은 물론 지역개발 관련 정책이나 관련연구의 결과를 왜곡하는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요추정 공간범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지역 간 이동 범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2002~2012년 기간 중 시도 간 이동한 제조업체가 3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커서 강원, 경북, 전남의 경우 시도 간 제조업체 이전비율이 60%~77%에 이르며, 9개 도의 평균도 50.3%에 이르러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조업체 입지수요의 공간범위가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산업단지공급계획’이나 산업입지 정책은 주로 시도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시도 간에 수요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도단위로만 계획하면 수요추정의 왜곡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시도 공간단위의 수요추정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셋째, 수요추정 시 인접지역의 유사사업과 경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상위계획의 목표인구를 기초로 인구 및 가구를 배분하는 top-down 방식의 수요추정이 이용되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인접지역의 유사사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미분양을 초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사례 등이 있다. 관광단지 사업의 경우에도 주로 시도별 장래관광객 추정치를 유사한 관광사업의 관광객 점유율을 곱하여 추정하는 방식이 이용되며, 명시적으로 유사 개발사업과의 경쟁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실패에는 정치·경제적 원인이 가장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지만 실제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으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그룹의 설문조사 결과 주로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계적 실증분석 결과가 아니고 설문응답의 신뢰성에 대한 한계 등은 있지만 관련업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사실과 어긋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보행환경 평가모형 구축연구

Walkability Evaluation Model for Local Walking Areas

이미영

최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의 보행안전과 보행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및 도시재생, 재개발 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특히 중요하다.

국내에서 시행 중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나 보행우선구역 조성제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행환경의 개선점 및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개선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정량적, 정성적인 측면의 보행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특히 현장조사가 아닌 계획 또는 예측 가능한 보행 및 보행수요에 기반을 둔 이동성 등 정량성에 대한 평가기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역보행취약지역 보행의 안전성, 쾌적성, 이동편의성과 같은 보행성을 강화하도록 보행인프라를 확충 및 정비하기 위한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의 정성적 평가와 보행수요기반 통행배정모형(Assignment Model)의 정량적 평가가 통합된 보행환경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권의 개념과 관련법제도 추진현황을 검토하였고 국내·외 지역보행환경 개선 및 평가사례 분석, 보행불편도 조사를 통한 안전이동 체감계수 도출, 공간구문론과 보행통행배정기법 기반의 보행환경 평가모형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 대안설정 및 사례지역 중심의 효과평가 시행, 국내 보행환경개선 및 평가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로 구성된다.

실증평가를 위해 사례지역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보행 환경 개선지역으로 선정된 부평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3개의 시나리오, ① 신호횡단보도를 보행친화적으로 개선, ② 보행친화적인 신호횡단보도 추가설치, ③ 버스 정차역 추가설치를 통한 대중교통환승 강화를 중심으로 효과평가를 시행했으며, 통합평가모형의 활용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행환경 효과평가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평가모형은 현재의 보행상황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고, 향후에 필요한 보행시설 투자 및 개선대안의 마련에 대한 비교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안된 모형은 향후 ① 도시재생, 지역 및 지구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상시 평가시스템, ② 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민·관 간 협의 시 지원시스템, ③ 보행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 실효성 및 성과를 제고하는 틀, ④ 정부의 지역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다양한 운영조직 및 추진체계의 일관성 있는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향후 정부정책이 지속가능한 실무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나 경제활동 인구를 반영하는 연령구성현황, 지역경제력, 토지이용, 지역낙후도 등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지역 간, 지역별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부문은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Provision of Cultural Services for the HOPE Area's Residents

이순자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존재함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차원의 문화서비스 공급 여건 분석과 외국의 사례조사를 통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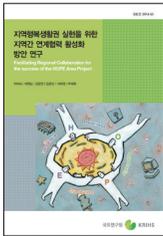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별 문화서비스의 수요자 특성, 지역행복생활권 내 주민들의 문화서비스 향유수준과 문화시설 분포현황,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 공급에 관한 전문가 의견 및 신청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목록 중 문화서비스 관련사업의 특징 등을 통해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정주자립권 형성협정을 통한 문화서비스 공급사례와 지역연계사업을 통한 공급사례로 구분하여 외국의 유사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역행복생활권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예시들과 함께 공급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문화서비스 공급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 공급은 우선 그것을 제공받는 수요자(주민, 생활권 등)의 특성과약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단순 관료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서비스 공급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지역행복생활권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넷째,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시설의 활용 및 기능 재배치를 통해 문화서비스 공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 관련인력 및 단체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들 기본방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몇 가

지 예시들과 함께 공급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문화시설의 공동운영 및 기획이다. 농어촌생활권에 유용한 방안으로 ‘(가칭) 죽어가는 문예회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살리기 사업’ 등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전문인력 및 단체의 활용이다. 도농연계생활권 또는 중추도시생활권에 유용한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가칭) 도시선생, 농촌제자 사업’과 ‘(가칭) 농촌선생, 도시학생 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다양한 협력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이다. 도농연계생활권과 농어촌생활권에 유용할 ‘(가칭) A시에서 빌리고, B군에서 반납하고 사업’, 중추도시생활권에 유용할 ‘(가칭) 행복생활권 문화통화제 사업’,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모두에서 유용할 ‘(가칭) 행복생활권 예술대여점 사업’ 등이 개발될 수 있다. 네 번째 방안은 광역적 이벤트 및 축제의 개최다.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모두에 유용할 방안으로 ‘(가칭) 행복생활권 예술올림픽, 동호회페스티벌 개최사업’ 등을 고안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는 지자체들이 향후 문화서비스 공급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Facilitating Regional Collaboration for the Success of the HOPE Area Project

차미숙, 이원섭, 김창현, 임은선, 이미영, 박재희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의 활성화 방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 간 연계협력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기본생활 서비스가 충족되어 행복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재원, 인력, 자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활용 및 사업”을 총칭한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연계협력 정책의 논리적 기반을 검토하기 위해 이론적·실천적 모형을 살펴보았다. 이론적·실천적 모형을 통해 지역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 원인과 효과, 작동·추진 요인을 도출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본의 정주자립권, 영국의 지방기업협의체(LEP), 미국의 지역 간 협력정책 등 선진국의 지역 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심층면담 및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내 지역 간 연계협력 추진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지자체 정책실무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약 85%에 달하였으며,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추진단계 중 “사업발굴·기획단계”와 “사업선정·계획수립단계”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간 연계협력 추진사례 조사에서는 연계협력 추진동기와 공감대, 제도적 지원 및 성과의 공유 경험이 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 내지 지속케 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행복생활권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수요와 연계협력 잠재력 분석을 통해 정책의 성과 도출 및 가시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및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업효과에 대한 체감도 제고·성과 공유를 촉진토록 한다. 둘째, 지자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지역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생활권 유형별 목적과 생활권 내 지역 간 연계협력 잠재력(실태)을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시행토록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네 가지 제도개선 방안과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제안하였다. 첫째,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기획·발굴 및 계획수립 지원의 강화다. 이를 위해 사업기획·발굴 시 사업수요 조사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컨설팅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체계의 개선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및 생활권협의회의 기능·역할 개선을 제안하였다. 셋째, 생활권 연계협력 예산운용체계의 개선이다. 생활권 연계협력계정의 별도 마련, 생활권 단위 연계협력사업 공동예산 편성·집행제도 도입, 사후 사업관리운영·지원예산 강구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성과관리 및 추진절차 제도개선이다. 연계협력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지표·운영방식 개선, 연계협력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및 지침(매뉴얼) 마련, 모니터링 및 컨설팅·교육 상시화 등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연구기간: 2014. 3. 1~2014. 12. 31

서지사항: 232면, 국토연 2014-50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 전략 연구

A Study on Urban Development Mode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Selective North Korean Cities

이상준, 박세훈, 남기찬, 이건민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요 거점도시의 미래발전 전망과 체제전환국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토대로 주요 거점도시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북한 도시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남북협력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체제전환을 추진해가고 우리와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이루어가는 상황전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반도의 장기발전과 남북협력 측면에서 북한 내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은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발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 사례조사 결과 독일과 중국의 도시발전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유치 여부가 성공적인 도시발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참고할 때, 향후 북한 도시의 발전전략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탈공업화 이후의 도시발전을 주도할 성장동력산업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육성하는 것과 성장동력산업을 통해 도시발전을 이끌어갈 재원의 마련과 이것을 주도할 적절한 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시발전 모형은 저개발 상태에서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한 도시산업 발전방향과 개발주도 추진체계를 유형화한 것이다.

5개 거점도시의 발전모형을 종합해 보면, 남포는 첨단부문 중심의 복합형(+교육관광/무역서비스)/민간자본 주도형 발전모형(A모형)이 적합하고, 청진은 첨단부문 중심의 복합형(+교육관광/무역서비스)/민간+공공 복합형 발전모형(B모형)이 적합하며, 신의주, 나선,

원산 등 세 도시는 교육관광서비스 중심의 복합형(+물류/가공)/민간자본 주도형 발전모형(C모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5개 거점도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 및 정부지원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지역발전에 미칠 파급효과이고 그다음으로는 북한의 역량과 의지, 마지막은 도시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르는 개발비용 및 채원조달 가능성이다. A모형(첨단부문 중심형+민간자본 주도형)에 해당하는 남포의 경우, 민간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진출이 적합하다. B모형(첨단부문 중심형+민간/공공 복합형)에 해당하는 청진의 경우,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C모형(교육관광서비스 중심형+민간개발 주도형)에 해당하는 신의주, 나선, 원산의 경우, 독일의 글라이스펠트나 하벨의 경우처럼 서비스부문의 민간기업 진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북한의 도시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의 방향성을 우리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Agent Based Urban Simulation Model

김동한, 서태성, 구형수, 강민규, 성혜정, 김은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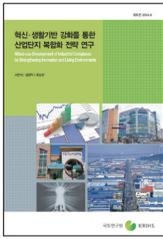
국토변화 발전의 동인이 다양화되고 미시화됨에 따라 향후의 국토도시 정책변화 어젠다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에 기반한 도시모형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미시적이고 동태적 관점에서 국토 및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도시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지리학 등의 분야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행위자 기반 모형(Agent Based Model)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때 행위자의 입지선택을 위한 기반이론으로는 계량경제학의 입지이론을 적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 가구, 기업 등 개별적인 행위주체가 유발하는 공간변화를 사전에 파악해 볼 수 있는 행위자 기반의 도시모형 방법론을 정립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그래밍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작동 가능한 시험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모형의 성능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모형 구동에 필요한 변수와 계수선정을 위한 기초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례지역은 도시 내부의 고밀복합개발과 도시 외곽의 개별 난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부산권(부산, 양산, 김해)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개발자(Developer)와 개별산업(Manufacturing Firm)을 각각 고밀복합개발과 개별산업입지를 유발하는 행위주체로 상정하고 로짓분석을 통해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모형에 반영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현 추세연장 시나리오와 정책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 추세연장 시나리오하에서는 부산시 내부에서는 해운대 등 부동산 투자가치가 높은 곳 위주로 산발적 고밀개발이 진행되고 김해시, 양산시 등에서는 개별 산업입지 증가에 따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나타나게 되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신규 산업단지

지정 등을 상정한 정책 시나리오하에서는 부산시 내부에 고밀복합개발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감소하고 주요 거점 위주로 복합고밀 개발이 분산적 집중형태로 발생되고 김해시, 양산 등에는 개별 공장 난개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은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발규제완화,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국토공간 변화와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도시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학적 정책지원수단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행위자 기반 도시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정책변화 → 행위변화 → 공간변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통합적 계획지원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도시모형과 계획지원체계 등을 활용한 합리적 분석과 시나리오에 기반한 미래공간구조의 구상 등을 국토도시정책(National Planning Policy)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공간계획체계와 법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Mixed-us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by Strengthening Innovation and Living Environments

서연미, 김광익, 류승한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혁신기반 및 생활기반을 강화하는 복합화 방향을 모색하고, 복합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산업단지 혁신기반 및 생활기반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관점에서 산업단지 복합화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둘째,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복합화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산업단지 특성이나 복합화 정도에 따른 산업단지 혁신·생활기반 여건을 분석하고, 기업·종사자들에게 필요한 혁신·생활기반 요소를 파악한다. 넷째, 산업단지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복합화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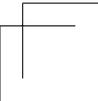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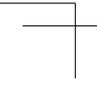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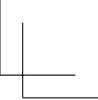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위해 계획체계 개선, 복합화 수단의 개발, 추진체계 정비 및 제도적 기반 구축 측면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계획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산업단지 지정시 검토해야 할 혁신·정주여건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산업 발전계획, 산업집적 활성화계획 등 산업육성 계획과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산업단지 개발과 도시발전 전략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둘째, 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집단화를 추진하는 사업자 및 단체 등에게는 토지를 수의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한다. 셋째, 사전에 기업의 시설수요 및 이용행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혁신·생활기반 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다음으로 복합화 수단의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산업입지법」이 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준주거지역 우선활용 의무 등을 완화하여 대학 캠퍼스 내에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서는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능한 서비스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시 내 소규모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둘째, 각 권역별로 거점산업단지를 선정하여 고차적인 혁신·생활기반시설을 집적하고, 그 외 산업단지는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혁신·생활기반시설을 집적하는 허브-스포크전략을 도입하여 거점산업단지 중심의 고차지원기능 복합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와 공간적으로 이격하여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여 최소 규모의 혁신기반 및 생활기반을 확보할 수 없는 소규모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집단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입주기업 지원과 산업진흥을 주 업무로 하는 산업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단지 입주확대를 지원한다. 둘째, 산업지원시설, 보육·교육·의료시설 등에 대한 용지공급 기준을 개선하여 필수적인 혁신기반 시설 및 생활기반 시설이 산업단지 내에 우선 유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기업지원 분야에 특화된 민간기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2 도시연구

Urban Research

-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46
- 도시계획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연구 47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48
-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49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50
-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 51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52
- 창조산업 ·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53
-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및 정책 과제 연구 54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emi-industrial Zone

이범현, 박은관, 김상조, 장철순, 김유란

최근 준공업지역은 도심보다는 도시외곽에 입지하거나 주거기능이 침투하는 등 주거지와 인접하여 산재·입지함으로써 도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하기보다는 토지이용의 상충과 환경적인 문제 등을 급격하게 양산하고 있다. 특히, 공업기능 이전이 예상되는 지역에 고밀도의 아파트가 입지하여 새로운 토지이용 상충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음 등의 환경문제로 인한 용도간 상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용도지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본 연구는 도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준공업지역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도시의 위상 및 역할을 고려한 준공업지역의 정책적 발전방향을 대안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에 입지하는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능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양면성을 감안하여 준공업지역의 역할 재정립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와 구체적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자체에 준공업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 둘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와 산업적 특성을 살리는 공간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 산업공간 형성이 부족하다. 셋째, 주거·공업 혼재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생활기반의 쾌적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준공업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공장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이 미비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준공업지역은 ① 산업기능의 유지 및 재정립이 필요하며, ② 공공지원 중심의 도시환경 정비, ③ 도시자원을 활용한

거점형 정비, ④ 기타 산업기능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방향의 네 가지 정비방향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한다.

준공업지역은 국가경쟁력을 위한 일자리 관리 및 창출 역할을 통해 그 위상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비수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효율적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해 '준공업지역 정비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는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공업기능의 상실을 막기 위한 준공업지역의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기간: 2014. 8. 13~2014. 11. 12

서지사항: 92면, 국토연 2014-54



도시계획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Improvement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for Non-urban Area Addressing the Change of Urban Planning Regulation System

김동근, 김상조, 김성수, 이병재, 구형수, 이태웅

우리나라의 비도시지역은 전 국토의 83.4%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비도시지역 내에 개발행위가 확산되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토지이용 혼재와 용도간 상충, 소음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기반시설 부족 등의 토지이용관리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도시지역의 개발행태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왔지만, 현행 토지이용규제 체계가 도시지역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용도지역제,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운용되고 있어, 비도시지역의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현재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에서 주된 관리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건수의 폭발적 증가에 비해 관련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2000년 후반 규제개선 추세와 맞물려, 연접개발의 제한 폐지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2009), 성장관리 방안의 도입(2012), 용도지역 건축물 허용방식의 불허용도 나열식 전환(2014) 등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 체계가 새롭게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명확화와 재량행위 근거 마련과 더불어 개발행위허가와 비도시지역 관리를 위한 여타 제도를 연계 운영하는 등 계획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첫째, 비도시지역의 관리방향 및 공간계획의 선체가 필요하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비도시지역의 권역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 등)의 지침 성격 부여가 필요하다. 성장관리 방안의 범위와 내용을 개선하여, 비도시지역 전체에 대하여 성장관리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중관리 지역(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와 명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 관리 기본원칙과 성장관리 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적으로 운영하고, 계획수립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항목별 활용도와 중요도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도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유사용도의 연접개발 유도방안을 도입(소규모 집단화 방안)하고, 농지 및 산지전용보다 기 개발지를 활용한 개발유도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비도시지역 관련 제도의 체계적 연계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재량행위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고, 심의허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Supporting Platform for the Analysis of Climate Change Driven Disaster Vulnerability in Urban Area

이병재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 초기에 지자체 및 분석 수행자의 혼란을 막아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분석결과의 지속적 축적을 통한 장기적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제약 조건으로 인해 재해 취약성 분석이 지연되고,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도시계획수립지침이 2011년 12월에 개정되어 2012년 7월 이후 수립 또는 정비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가 반영되도록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현재 기후변화 6개 재해(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 수행현황 조사, 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 추진상의 문제점을 교육 및 안내 체계 미흡, 체계적인 분석 검토체계 부재, 통합 데이터 관리체계 부재, 협력 네트워크 취약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을 재해 취약성 분석 관련 실무자들이 분석 수행 및 결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자료, 분석 도구, 데이터, 인적자원 정보 등을 손쉽게 공유, 축적하고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협업지원 체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의 비전을 분석 수행자와 분석 연구자의 동반성장형 커뮤니티로 설정하였다.

재해 취약성 분석 관련 플랫폼 사례분석, 기술현황 및 제도 추진현황 조사,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사용자 시나리오 설정을 바탕으로,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의 핵심 기능요소로 교육 지원, 분석 지원, 데이터 관리 지원, 협력 네트워크 지원기능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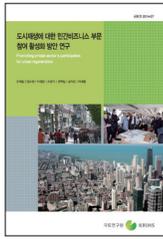
재해 취약성 분석을 위한 온라인 협업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기반 조성(1단계), 플랫폼

구축(2단계), 플랫폼 안정화(3단계)의 단계로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제도의 문제점 해소기능이 우선 구현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지역 상황까지 반영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기능이 고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을 실제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 설계와 이에 요구되는 현황조사(활용 대상자 요구사항 조사, 환경분석, 제도 운영실태 정밀조사 등) 및 활용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과 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가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14. 10. 30~2014. 12. 31

서지사항: 139면, 국토연 2014-16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Promoting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for Urban Regeneration

유재윤, 정소양, 박정은, 조판기, 권혁일, 송지은, 박새롬

그동안 도시재생 연구는 지나치게 공공의 역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역량을 감안한다면 공공에만 의존하는 도시재생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최우선 목적인 공공성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아직 국내 사례가 드물고 이렇다 할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설정에 있어 과거 물리적 정비에 의존하던 방식을 넘어서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 접근을 지향하며, 기존 자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점진적 정비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발성, 다양성, 창의성 등의 덕목이 요구되는데 이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활발한 참여로부터 비롯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재생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도시재생의 근본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국내 참여여건을 제도, 재정,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지역경제 분야의 여건 및 향후 미래전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한 사례에서 도시재생 단계별 민간의 역할과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주요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잠재적인 도시재생의 민간 참여자라 할 수 있는 디벨로퍼, 건설기업, 일반기업, 금융기관, 컨설팅, 소상공인 등 다양한 민간 비즈니스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 및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에 기반한 패러다임 모델을 기본 분

석틀로 활용하였으며, 개념의 범주화 및 범주 간 인과관계 설정과정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인과구조의 결과로서 대응전략이 도출되는데 이를 도시재생의 실제 대상지에 적용해보면서 현장수용성을 검증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책방안은 크게 도시재생의 주체, 계획 및 제도적 기반, 재원확보와 관련되어 있다. 즉 도시재생 디벨로퍼의 육성, 민간의 자생적 조직과 노력의 활용, 장소중심적 통합계획 수립을 통한 민간참여 촉진, 지역자산을 활용한 창의적 기획과 소규모 점진적 정비로의 전환, 국공유지 및 기업 보유 부동산의 활용, 안정적 장기 금융재원 확보, 도시재생 투자상품 및 수익 모델의 구축, 메자닌 금융 등 다양한 금융기법의 도입, TIF 등 혁신적 재원조달 기법 도입을 위한 유연한 금융재정 체계 정립, 민간참여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공공의 선도적 투자, 규제완화 및 공공의 관행 개선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본격적 도시재생 시대를 앞두고 정부,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을 이끌 주역인 민간비즈니스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향후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이 제안되었으나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도출하는 것은 하나하나 별도의 연구 주제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향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이 정립되고 다양한 사례가 축적된 후에는 질적 연구방법론과 함께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분석이 종합적으로 제시된 연구들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연구기간: 2014. 1. 1~2014. 12. 31
 서지사항: 210면, 국토연 2014-7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Rebuilding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Urban Regeneration in Korea
: A Government-Civil Society Relation Perspective

박세훈, 임상연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을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방식의 하나로 이해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및 정부-시민사회 협력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검토하였다.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은 서로 다른 두 조직 사이에서 양자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양자가 직접 관계할 때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중간지원조직은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정보수집 및 제공, 상담 및 컨설팅, 조사연구, 인재육성 및 연수, 활동지원 및 조정, 정책제안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그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에 따라 공설공영(公設公營), 공설민영(公設民營), 민설민영(民設民營)으로 구분하고, 시민사회기반, 정책기반, 혁신기반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중간지원조직은 예산과 조직 등에서 제약여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예산은 대체로 3억 원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수는 2~10명 내외이며,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는 자치행정 담당이 대부분이었다. 운영형태로는 공설민영의 수가 많으며 공설공영, 공설민영을 합하면 10개소에 이르러 행정주도로 운영되는 곳이 절반가량이었으며, 민설민영은 한 곳도 없었다. 분석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대부분의 중간지원조직이 강력한 정책기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비하면 시민사회기반과 혁신

기반은 취약한 편이었다. 요컨대, 정책기반이 강하여 행정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반면, 간섭과 통제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와의 연계는 대체로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시민사회로부터 조직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 자율성이 낮은 편이었다. 혁신기반 측면에서는 사회혁신보다는 좁은 의미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방안 및 도시재생 분야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시민사회 기반 강화, 중간지원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중간지원조직들의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 광역과 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민관협의기구의 구축, 도시재생 분야 활동가 육성 및 시장 확대, 사회적 금융 조성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기간: 2014. 8. 1~2014. 11. 30

서지사항: 117면, 국토연 2014-5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

A Study on the Making Healthy Cities in the Era of Wellbeing(II)
: Developing a Practical Protocol to Implement the Healthy City Guideline

김태환, 김은정, 전해선, 김선희, 박근현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수립 주체(지자체 등)의 입장에서 해당 지역의 근린환경이 건강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지역이 건강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설계 및 제도적 측면의 대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건강도시의 관점에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안 마련에 대한 절차, 대상지 선정, 진단 방법, 결과 해석, 도시계획·설계적 대안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를 포함한 안내서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동시에 최종 결과물이다.

건강도시 진단도구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경기도 안양시의 범계동과 안양4·5동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도시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방법으로는 해당 지역에 대해 건강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와 실천전략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도면·데이터 분석, 현장조사, 주민설문조사 등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세 가지 기법은 도시계획 전문가, 훈련된 조사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차원적 삼각검증을 실시하여 진단도구 개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위에서 개발한 건강도시 진단도구를 더 많은 사례에 확대·적용하여 진단내용 및 방법 등의 보완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대구시를 포함하였고, 특히 개선안 도출의 대상지로는 종로구 창신동 봉제산업밀집구역과 천안시 원성2동 소재 천안여자중학교 인접 가로를 선정하였다.

개선방안 도출의 과정은 첫째, 근린환경 진단 과정에서 실시한 도면·데이터 분석, 현장조사, 주민설문조사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된 삼각검증의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삼각검증 결과 사례지역 내 공통적으로 취약한 구역인 우선처방지역을 파악한 뒤, 셋째, 우선처방

지역에 대해 행태분석, 심층인터뷰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넷째, 삼각검증과 우선처방지역의 정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설계 및 제도 차원에서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최근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 등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건강도시 만들기'의 관점을 도시계획이 달성해야 할 주요 어젠다로 부각시켰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내서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해당 지역의 근린환경이 얼마나 건강친화적인지에 대해 진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실천적인 도구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안내서는 계획 패러다임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 체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안전처 등 주요 정부부처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보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도구를 통해 우선처방지역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발굴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효율적인 건강도시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연구기간: 2014. 1. 1~2014. 12. 31
서지사항: 306면, 국토연 2014-30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Urban Master Plan in the Age of Slow Population Growth

김성수, 김은정, 이범현, 구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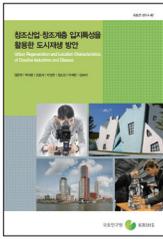
본 연구는 그동안 양적 성장 위주로 수립·운영되어 오던 도시기본계획제도를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재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선과제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도시기본계획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및 토지 수요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토지이용 전략, 정책 중심의 전략 계획으로 그 성격과 역할이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의 여건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가 지향하는 바를 차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인구 증가에 대비한 토지이용물량 산정 위주의 단순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지자체별로 계획수립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해야 한다.

이들 개선과제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계획 인구나 토지이용물량 추정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지자체 특성에 맞게 부문별 계획 항목을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이용물량 추정과 관련해서는 개발가능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및 환경용량, 도시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목표인구의 추정치와 타 계획 항목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으며, 전략적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시정촌 마스터 플랜의 수립 시 계획수립 항목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구상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역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필수부문 계획 이외의 부문별 계획은 선택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른 현 도시기본계획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계획의 역할과 성격 측면에서 하위계획과 개별 부문별 계획에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정책 중심

의 전략계획으로 위상을 정립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지침과 지방지침의 구분을 통해 계획수립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계획의 내용구성 측면에서 맞춤형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유형 구분이 필요하며, 계획의 차별화를 위해 부문별 계획 항목을 선택적으로 수립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 규모가 큰 특별시·광역시 등에서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끝으로 계획수립 방식 측면에서 추정된 인구지표를 각종 용지 및 기반시설 수요산정 등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단순한 물량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상, 계획목표, 주요 정책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계획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창조산업 ·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Urban Regeneration and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Creative Industries and Classes

김은란, 박세훈, 강호제, 박경현, 정소양, 박재현, 김보미

본 연구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소득 및 고용창출 기반으로서의 창조산업 · 창조계층의 역할에 주목하고,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의 입지특성에 기반하여 지역특성별 도시재생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의 소득 및 고용창출 기반으로서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의 위상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둘째, 지역수준에서 어떤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하였으며, 셋째, 창조산업 · 창조계층을 유치하거나 지역의 외부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분석하여 공공부문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년 창조산업 종사자는 118만 명으로 전 산업 종사자의 6.3%, 창조산업 사업체는 12만 5천 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3.5%로, 2008년 3.1% 대비 증가하였다. 2012년 현재 창조계층은 318만 명으로 총취업자의 13.2%이며, 2008년 12.7% 대비 절대규모와 비중이 증가하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을 도출하기 위해 10개 유형의 창조산업과 9개 유형의 창조계층이 도시경제(도시소득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등의 창조산업과 경영금융전문가, 공공경영전문관리자, 과학정보기술자, 교육행정가 등의 집적은 도시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문화적 장소와 오디오비주얼, 창조서비스, ICT디바이스 등의 창조산업이 집적하고, 공공경영전문관리자, 보건복지종교관련직, 과학정보기술자 등이 많이 거주하거나 핵심연구인력, 공공경영전문관리자, 과학정보기술자 등의 일자리가 많으면 도시 전반적인 고용수준이 증가한다. 다만, 보건복지종교관련직은 고용창출효과는 있으나 도시소득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제약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창조적 인력을 유인하는 도시환경 설문분석 결과, 제

주와 파주에 거주하는 창조적 인력은 거주지 결정 시 도시매력과 주거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입주 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와 파주의 경우 유입된 창조적 인력의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도시생활기반 서비스와 직업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생활기반 측면에서 특히 교통과 의료에 대한 불만이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직업환경 측면에서도 임금수준, 취업 및 이직 용이성, 정보 및 네트워크 용이성 등의 향상이 요구된다

창조산업 · 창조계층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첫째, 소득 및 고용 측면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 산업군 · 직업군을 지역특성별로 유치 및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을 위한 창조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에메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 지원, 창업기업 도심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 쇠퇴도심의 공유공간 임대를 통한 소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제고,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등 도시생활 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창조산업 관련 입지정책과 연계하고, 창조산업 및 창조계층 유치와 환경조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기간: 2014. 3. 1~2014. 12. 31
 서지사항: 294면, 국토연 2014-42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및 정책과제 연구

A Study on the Best Practices and Policy Agenda for Environment-Friendly Energy Towns

왕광익, 노경식

본 연구는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일환인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개념을 정립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하여 정부의 추진개념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유사사업 추진현황과 해외 추진동향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로컬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해외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례는 주민생활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부에서 자원, 에너지의 순환성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한편, 친환경 에너지타운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 결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등에 대한 법·제도와 행정적 지원이 일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은 과정상 부족한 점이 있으나,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공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적으로는 현재 ‘에너지’, ‘환경’, ‘도시’, ‘건축’ 등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관한 관련법들의 상호 연계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부문별 관련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통합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시설입지 등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상 절차, 주민지원, 인센티브 등 제도적 개선 및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국토·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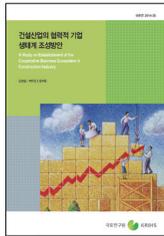
연구기간: 2014. 11. 1~2014. 12. 31

서지사항: 118면, 국토연 2014-56

3 주택 · 토지연구

Housing & Land Research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56
- 공공건설사업의 시공 · 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57
-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58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59
-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60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II) 61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62
-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63
-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64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65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66
-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67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68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A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Business Eco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

김성일, 배유진, 윤하중

건설산업의 생태계는 건설생산체계에 의해 폐쇄적, 경직적 생태계를 형성하여 참여주체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산업이 저성장 기조로 진입하면서 저가 수주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동시에 불공정한 거래도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건설업체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건설산업 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기업 생태계를 유형화하고, 기업생태계 진단평가를 통해,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장은 연구의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그리고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일반적인 기업 생태계 이론을 건설산업에 적용하여 건설생산체계의 틀 속에서 기업 간의 네트워크 방식을 건설산업의 기업 생태계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기업생태계 즉 원·하도급 기반형 기업 생태계(TypeI), 공동이행 기반형 기업 생태계(TypeII), 분담이행 기반형 기업 생태계(TypeIII), 주계약자 기반형 기업 생태계(TypeIV)로 도출하고, 그 적용현황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건설산업의 기업 생태계 진단·평가를 위한 진단항목과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사례조사)를 통해 2장에서 도출된 생태계 유형별로 각 진단항목별로 성과를 진단하였다. 아울러 건설기업 간 협력 관련 제도가 협력에 미치는 중요도와 실제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협력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조사도 수행하였다.

4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였다. 이들 국가는 해당 국가의 산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협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경쟁과 업종별 전문

화를 통해 협력적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파트너링, 공동기업제도(J/V), 협동조합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안적 제도 모색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제도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적인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정책방안으로 현행 건설업자 상호 협력 평가제도와 공동도급제도를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파트너링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공동기업체(J/V) 및 건설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에서는 주요 과제를 요약하였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The Eradication of Unfair Practice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이승복

본 연구는 현 정부 들어 증가하고 있는 공공건설사업에 있어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선도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직·종속적 갑을관계가 아닌 수평적 공생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법·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신속성 확보, 재정의 안정성 증대, 불공정행위 예방·조정 기능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근절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첫째, 현행 개별 법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사업의 계약·시공, 감리 관련 기준이나 내용을 검토하여 ‘협의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이를 위반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간주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당특약이나 내부기준도 시공사에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현재 공공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 의거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 단계로 축소하여 발주·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시공·하자담보책임 부문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케 하는 이원화(two-track) 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결정권한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위원회의 조정사항은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여 향후 예산 편성이나 공공기관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발주처의 예산이 당초 설계비보다 최종적으로 약 20~30% 정도 삭감되어 편성되는데, 향후에는 통상적인 삭감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예산 검토를 건설사업의 담당부처와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기획재정부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행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공공건설사업의 공종·유형·내용별로 최적화된 불공정행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공공건설사업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실제로 집행 관리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법률체계 구축, 분쟁조정기구의 이원화체계 확립,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시스템 정비,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개발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건설업 전반에 만연해 있는 발주처와 건설업체의 종속적 관계를 탈피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A Study on Housing Survey and Housing Policy for Multi-cultural Households in Rural Area

강미나, 유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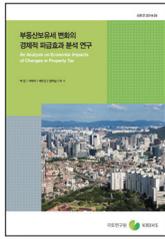
현재 농촌의 변화 중 뚜렷한 특징은 인구·가구 감소와 고령화, 다문화가구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주거여건이 취약한데 인구·가구 감소로 점차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더욱 주거여건이 취약한 가구가 많고 주거·육아·가족관계·소득·지역사회 적응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구가 많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의 실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열악한 농촌의 주거상황 및 다문화가구에 대한 이해 부족은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주택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고찰, 기존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인터뷰와 현지 심층인터뷰, 전문가 설문조사,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문화가구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실태 및 육아와 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나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 통계 및 설문조사자료, 정책자료를 통해 농촌 다문화가구의 실태를 분석해보면 농촌 다문화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주거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다문화가구만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가구의 현실적인 주거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지역 다문화센터 센터장들과 결혼이민자들을 인터뷰하였다. 그 결과 ‘긴급주거 부족’, ‘저렴한 임대주택 부족과 주거비 보증금 부담 과다’, ‘개보수 지원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음’이 종합적인 주거정책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달체계의 모든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협력

체계 구축, 정책의 기준, 지원내용, 전달과정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우선지원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을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읍지역의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해서 보증금 경감과 함께 전세/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거비를 경감할 것을 제안한다. 주택 개보수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가족해체 위기 및 긴급한 상황에 처한 대상에게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이때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을 위한 브릿지센터를 설립하여 상담, 육아, 직업, 주거 등의 복합적인 정보제공과 정책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주택정책 프로그램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상담, 정보제공, 사업 간 연계기능을 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결혼이민자들에게 주거관련 교육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정책방향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책프로그램은 지자체에서 개발하여 정책 전달체계의 개선을 모색하며, 정책지원에 대한 정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건강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통합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나 가족해체나 해체위기에 직면한 다문화가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은 단계적 지원과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An Analysis on 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Property Tax

박준, 이태리, 배유진, 정희남, 최수

본 연구는 먼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실거래가 기반으로 개편될 경우 예상되는 부동산보유세의 변화를 가계 세부담 변화와 지방정부 세입변화 차원에서 자산층위, 소득, 부동산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둘째, 부동산보유세 변화가 민간소비, 산업투자, 정부지출,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셋째, 조세원칙과 부동산보유세의 특성 검토에 기반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부동산보유세 과표의 증가는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가계 세부담 변화 분석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현재의 65%에서 90%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구평균 재산세가 연 54만 원에서 연 78만 원으로 약 45%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연 170만 원에서 연 269만 원으로 약 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의 제고는 세입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실거래가 반영률 자료를 이용한 지방재정 세입변화 분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90%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 건물분을 제외하고 주택과 토지만을 대상으로 적용해도 부동산보유세액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현재 총 9조 5,846억 원에서 4조 8,046억 원이 증가하고, 관련 부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 11조 888억 원에서 5조 9,74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비율을 평균 약 7.6% 상승시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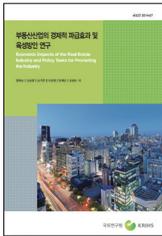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부동산보유세 과표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의 변화가 가계소비, 건설 및 부동산 산업 생산, 정부지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별로 부동산보유세 변화

가 가계소득 및 소비량(효용)에 미치는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부문의 소비량은 자산층위별로 고자산층의 경우에는 감소했지만 중저자산층은 증가하는 등 자산층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부동산보유세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세전 가계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고 정부의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부문의 생산이 0.3~0.8% 감소하였으나 타 산업 등에서 증가효과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GDP는 약 0.03~0.06% 수준으로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 한정하여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는 경우와 부동산보유세 증가액만큼 직접세 및 간접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GDP가 각각 0.03%p와 0.02%p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벡터자기회귀(SVAR) 동태분석에서 부동산보유세 상승으로 인한 충격반응을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토지 및 주택가격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민간지출이 초기에 음(-)의 변화를 보이다가 이후 양(+)의 값으로 변하고, GDP 역시 초기에는 변화가 없다가 이후 양(+)의 값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거래가 기반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과 연계된 가계 세부담 증가와 재정세입 효과 결과를 포함하여 부동산보유세와 연관된 제도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부동산보유세 개편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및 중앙-지방 간 재정 관계, 부동산보유세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주택 및 토지의 차별적 세율적용, 타 세제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14. 3. 1~2014. 12. 31
 서지사항: 194면, 국토연 2014-29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Economic Impacts of the Real Estate Industry and Policy Tasks for Promoting the Industry

정희남, 김승중, 남기찬, 이상영, 장희순, 조병도 외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 산업분야의 양적 및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부동산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는 먼저, 부동산산업의 영역을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을 분석하였다. 둘째,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와 산업별 발전 동향을 검토하고 부동산산업의 육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높다. 예컨대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순자본소득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부동산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다. 부동산산업의 기여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2000년대 이후 자동차, 반도체, IT산업 등 제조업의 산출규모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커서 부동산산업의 역할이 작게 보이는 기술적 통계치의 허상일 수 있다. 둘째,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부동산산업의 역할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부동산 자산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부동산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러한 잠정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동산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였다. 부동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들, 예컨대 부동산산업을 영위하는 개별 업체와 산업체, 부동산산업정책을 입안 및 집행하는 정부, 그리고 학계 및 연구소 모두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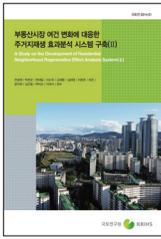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부동산업체 스스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신뢰회복의 전제조건인 윤리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업무역량 제고도 시급하다. 개

별 부동산업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산업체 내 및 연관산업 간의 협업기능을 강화하여 부동산산업에 필요한 직무(제)교육을 통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산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부동산산업 정책도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 먼저, 부동산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에서는 부동산산업을 부동산 임대업, 공급업, 관리업, 중개업 및 감정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부동산산업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 부동산산업을 전통산업, 융복합산업, 연관산업으로 분류할 경우 부동산산업의 영역이 20여 개 산업군에 달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부동산산업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정책은 부동산활동의 객체(subjects)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부동산활동의 주체(objects)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동산산업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 및 국민소득 증가와 관련 있는 부동산산업 활동 주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향후 부동산산업 정책에서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만이 아니라 부동산산업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정책의 기본적인 역할은 부동산산업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기본적인 틀과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부동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부정책 중 하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부동산산업 관련정보 인프라를 구축 및 제공하는 일이다. 끝으로, 과거 개발공급업 중심에서 임대관리업 중심으로 부동산산업 시장축이 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산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보강도 필요하다. 부동산산업의 육성 초기에는 정부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기간: 2014. 1. 1~2014. 12. 31

서지사항: 231면, 국토연 2014-27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I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 Neighborhood Regeneration Effect Analysis System (II)

전성제, 박천규, 변세일, 이수옥, 김재환, 김태환 1, 이준호, 최진, 문지희, 김근용, 박미선, 지대식, 최수

주택보급률 100% 초과,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및 가구구조변화, 성장 기조의 고착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택 관련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거지 재생을 포함한 기존 주택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거지재생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약화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주변지역에 전세난과 역전세난을 야기하고, 기존 거주민들의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사업진행 과정에 관련 주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크게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지재생사업의 원활하고 바람직한 수행에 필요한 주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작년년부터 추진하였다.

작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주택재고 현황과 관련된 제도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주거지재생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과 재정착률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시스템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인 주택시장 파급효과와 재정착률 분석 모형을 실제 현장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주거지재생사업에서 사전적 분석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구축하였다. 사업성 분석 툴은 기 구축된 사업성 분석 툴과 관련 연구 및 논문 등을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구득이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적 사업성 분석이 가능한 툴로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업개요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분석 툴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분석 툴 자체도 용적률 및 임대주택비율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사업성 분석 툴과 차별성을 두고, 본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였다.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 모형은 부동산시장의 주요 요인을 사용자 비용 등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재생사업의 부동산시장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SD 모형을 구축하였다. 2차년도 모형에서는 주택수와 인구 등 수준변수를 새로이 도입하여 주거지재생사업과 다른 정책변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특히 광역단위 파급효과 분석만 가능했던 1차년도와 달리 구 단위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하여 주거지재생사업에 따른 국지적 파급효과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은 주거이동에서 가구의 재정착 결정요인을 검토한 후 이를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행태를 가지는 Agent를 설계하여 ABM 모형을 구축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주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책적으로도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높은 점유형태별 행위자 구분모형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의 주택하위시장을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후 구축된 분석 모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제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의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툴을 마련하였으며 남은 3차년도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주거지재생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14. 1. 1~2014. 12. 31
 서지사항: 203면, 국토연 2014-21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Ways to Improv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for a Safer Society

윤하중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고속성장 했음에도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산재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19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 중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의 26%를 차지하는 재해다발 산업으로 산재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재해 예방이 국가적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결함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안전관리제도 검토를 통해 국내 건설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안전관리비, 입·낙찰제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향을 도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도 및 예방사업을 검토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연구기간: 2014. 9. 1~2014. 11. 30

서지사항: 61면, 국토연 2014-40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Customized Policy Measures Addressing Low-income Household's Rent Burden Responding to Rental Market Change

박미선, 강미나, 손학기

임차시장이 전세 위주에서 월세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지역적인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임차시장 구조변화는 매월 월세지급의 부담을 요구하고 또한 높은 전월세 전환율로 인하여 전세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책수립 시 기초가 되어야 할 현황과 관련하여 임차가구의 주된 임차형태 변화(전세 → 월세)에 대한 세밀한 자료 및 분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임차시장 구조변화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전국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는 양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임차시장 구조변화 시기에 맞춤형 주거안정과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는 시장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의 양상 및 특성에 맞춘 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밀한 자료분석에 토대를 두고 기존 전월세 임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누적된 전월세 실거래자료 전수를 분석하여 임차시장 구조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전체적인 변화의 양상 측면에서는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증가에 따라 임차시장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특히 월세지원 강화정책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었다. 또한 각각의 임차유형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같은 저렴한 전세감소, 고가전세증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전세 부족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그리고 주기적인 시장모니터링과 데이터기반형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월세의 측면에서는 양극화, 국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대별로는 소액보증금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 우위정책에서 월세지원 강화로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액보증금 월세 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나 생애주기별로는 최초 주택시장 진입층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연령대별 임차유형별로 차별화된 양상이 포착되고 있고, 자녀양육기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속성별 맞춤형 주거안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임차유형, 소득수준, 가격수준, 생애주기 / 취약계층, 지역특성 맞춤형 정책으로 구분된다. 임차유형별 정책에서는 그동안 소홀히 다뤄진 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소득수준별·보증금 규모별로 맞춤형 대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소득수준 맞춤형 정책방안에서는 정부의 정책대상이 소액보증금 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서민으로 명확해야 함을 적시하고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액보증금 월세지원 강화, 보증금 마련 저축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가격수준 맞춤형 정책에서는 급격하게 감소 중인 저렴한 전세 확충을 제안한다. 생애주기별 및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으로는 최초로 주택시장 진입층에 대한 지원, 유자녀 가구 우대금리 적용, 퇴거위기가구 등 특수 취약계층 긴급임대료 지원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 맞춤형정책에서는 지역주택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지역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월세과부담 가구지수 개발 등을 제안한다.

연구기간: 2014. 3. 1~2014. 12. 31
 서지사항: 170면, 국토연 2014-3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Welfare Indices

강미나, 진정수, 안흥기, 유미경

본 연구는 보편적 주거복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 주거복지를 정의하고 정의에 맞는 범위, 대상, 방법, 속성을 구체화하고 체감형 주거복지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활용방안, 생산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해외사례, 기존 연구의 결과 검토 및 전문가 설문과 국민의식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주거복지에 대해 일반화된 정의는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토연구원 내부 및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거복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보편적인 주거복지의 범위에서 고려해야 하는 속성은 주택에 관한 6가지 속성(어메니티, 지불가능성, 안정성, 편리성, 보건성, 안전성)과 주거환경에 관한 6가지 속성(어메니티, 안정성, 편리성, 보건성, 안전성, 커뮤니티)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속성의 하위 항목을 구성하여 국민의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국민의식 조사의 결과를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주택방음 상태와 단열상태, 주택가격 및 임대료 부담과 주택관련 대출의 용이성 및 상환능력, 주택 노후정도, 주택 온습도, 주택 내 방범상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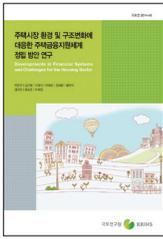
한편, 새로운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선정을 위해 전문가 조사 및 해외의 지표를 검토하여 주택과 관련한 지표 14개, 주거환경과 관련한 지표 11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에 생산되고 있는 지표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생산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다.

주택부분의 평가지표에서 앞선 14개 항목 중 '주택의 단열상태', '주택의 방음상태', '노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공간 및 시설', '주택 내 온도 및 습도상태', '유해한 건축자재 사용 여부', '태풍, 지진, 화재 등에 대비한 주택구조 및 재료의 안전성'은 현재 객관적 자료가 미흡한 평가지표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며, '주택 유지관리의 편리성'과 '주택 내 방범상태'는 현재 적합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평가지표다. 주거환경 부분에서는 11개 항목 중 10개의 항목이 적합한 객관적 자료와 연계되었으나 '주거지 주변 청결상태(쓰레기 처리 등)'는 '집주변의 청소상태 만족도(주거실태조사)'와의 보완 등을 통해 향후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새로운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는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의 주거복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연령, 가구원수, 점유형태, 소득계층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거복지정책의 우선대상을 선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생산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법」, 「통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근거한 기존 조사에 이를 반영 및 보완하여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생산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14. 1. 1~2014. 12. 31

서지사항: 244면, 국토연 2014-41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Developments in Financial Systems and Challenges for the Housing Sector

박천규, 김근용, 지대식, 이태리, 김태환 1, 황관석, 김대진, 유승동, 이희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이 거시경제 및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완화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주택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금융의 주거안정과 효율 증대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주택금융 수요의 특성에 맞는 주택금융지원체계의 구축과 주택금융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금융 포용(inclusion)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으로 주택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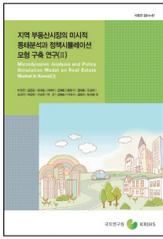
이런 측면에서 주택금융정책은 주택금융지원체계가 갖는 기본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주택금융지원체계의 기본요소는 주택금융시장의 거시적·미시적 건전성 유지, 주택금융시장의 포용성 확대와 주택금융의 효율성 제고, 주택금융소비의 보호를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택금융지원체계의 기본요소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분석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많은 연구가 개별정책 또는 사안별로 접근함으로써 종합적인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를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택금융시장의 기본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주택금융시장의 거시적·미시적 건전성 유지와 관련하여 주택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 가구의 연체 결정요인 분석, 주택금융 규제평가 등을 통해 주택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주택금융시장의 포용성 확대와 주택금융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주택금융의 주거안정 기능을 극대화하고, 주택금융 수요에 맞는 주택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금융 수요특성 분석과 관련 지원정책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외국의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소구 금융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주택금융지원 체계 정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주택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리스크 관리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시장 관리·감독체계에 대해 논하고, 주택금융시장 모니터링에 필요한 각종 도구를 제안한다. 그리고 대출승인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주택금융시장 통계기반 확충,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다양화다. 이를 위해 거주목적형 주택담보대출, 임대목적형 주택담보대출, 임차 후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시한다. 셋째, 주택자산 유동화 방식의 다양화다. 이를 위해 Lease Buyback Scheme을 이용한 주택자산 유동화 방식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모기지 보증의 활성화다. 이를 위해 가구형성단계 가구에 대한 모기지 보증 활성화, 임차가구의 매매전환 모기지 보증 도입, 나아가 전반적인 모기지 보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비교정보 제공, 주택금융상품에 대한 계약해제 권리 부여, 비소구대출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기간: 2014. 1. 1~2014. 12. 31
 서지사항: 198면, 국토연 2014-45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Microdynamic Analysis and Policy Simulation Model on Real Estate Market in Korea(II)

박천규, 김근용, 변세일, 이태리, 김재환, 황관석, 김태환 1, 전성애, 김대진, 제갈영, 전성제, 박준, 김혜승, 지대식, 김영미, 방보람 외

부동산은 이질성, 위치 고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유형별, 점유형태별, 규모별 등으로 세분화되고 다변화된다. 과거에는 수도권, 서울 강남이 부동산시장 변화의 중심지였다면 현재는 시장 변동양상이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7~2008년의 경우 서울 강남지역이 안정되었지만 서울 강북지역의 단독주택은 상승하였고, 2010~2011년에는 수도권이 안정된 반면, 지방이 강세 양상을 보였다. 최근에 주택매매시장은 안정되었으나 전세시장은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택이 강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이러한 변화양상은 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경우 매매시장과 월세시장은 자본환원율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로, 전세시장은 월세시장과 전월세 전환율로 연결되어 유기적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주택시장은 토지시장(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비주거용 건물시장(오피스, 공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거시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의 복잡다기한 작동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은 세분화되면서 여러 부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 및 공급, 정책, 정보 등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전체 또는 다른 부문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되는 풍선효과, 수급불일치, 하우스푸어 및 깡통전세, 소비자 전세 선호, 임대인 월세 선호 등을 통해 인지가 가능하다.

부동산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심리 및 정책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소비자, 공급·투자자,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장에 참여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행태를 반영한 메커니즘의 분석과 덜 위험하거나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규제가 덜 심하고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장행태를 반영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배경하에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의 분화된 양상을 고려하여 보다 미시적인 시각에서 시장참여 주체들의 동태적인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를 보완하는 한편,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구축,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모니터링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세분화되고 있는 시장 분화 양상을 감안한 정책설계 및 시장분석의 기반 마련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Market and the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in Korea

이태리

통화정책이 거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중의 하나로 주가와 부동산 등의 가격을 통한 파급경로인 자산가격 경로가 있다. 그만큼 주택시장은 거시경제변수와 더불어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주택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의 변화는 통화정책 입안 시 주요 고려대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중심의 주택시장 관련정책에서 공급과 수요 모두를 고려하는 주택시장 관련정책으로 정책의 시각이 넓어지면서 금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커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 시점에서,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주택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론 모형과 과학적 계량기법을 통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주택시장에 대한 파급경로를 추정하여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주택시장의 현실적인 반응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택시장을 실물경기 및 금융 전반에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로 인식하여, 주택시장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통화정책의 충격과 이에 반응하는 주택시장과 경제 전반의 관계를 거시적·전국적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택시장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한 단일모형을 구축하여 대상이 되는 많은 관심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미시적·지역적 주택시장으로의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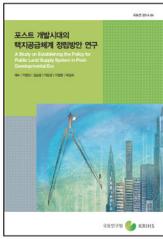
먼저 통화정책과 우리나라 주택시장정책 관련 현황, 선행연구, 해외 비교, 이론 등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효과와 파급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적일반화최소자승법(Dynamic Ordinary Least Squares: DOLS)과 요인활용다변수자기회귀모형(Factor Augmente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FAVAR)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제한된 수의 변수만을 모델 내에 포함하여 폭넓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FAVAR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 효과의 세부적인 주택시장 반응까지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기 변동에 더 가중치를 두면서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며, 주택가격, 금리, 경기에 관한 실증분석을 했을 때 주택가격은 경기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고, 통화정책금리는 경기, 주택가격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론적 모형에서 금리는 주택매매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관련된 실증분석에서도 금리상승 충격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또는 주택유형별로 모두 하락하는 반응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들이 갖는 시사점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결정할 때 금리는 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통화정책의 입안 시 주택시장의 변화를 고려하고 향후 한국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많은 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 다양한 변수들의 반응에 관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FAVAR 모형이 향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14. 11. 1~2014. 12. 31
 서지사항: 83면, 국토연 2014-32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the Policy for Public Land Supply System
in Post-Developmental Era

최수, 이형찬, 김승중, 박은관, 이범현, 이성수

본 연구는 개발시대 택지개발방식의 성과 및 한계와 택지공급환경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분석하여, 개발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개념으로서 '포스트 개발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택지공급체계 정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택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여 왔다. 1970년대까지 민간부문이 주로 환지방식에 의해 소규모 토지를 개발해오다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택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부근에 택지를 단기간에 공급할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공영택지개발사업은 빠른 시일에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한바, 지난 30여 년 동안 증가한 대지의 38.2%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서 인구 및 가구 구조,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구조 등으로 택지공급과 관련한 개발여건이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공급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대량개발,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공급, 전면매수방식, 가격통제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공영택지 개발방식에 의한 택지공급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택지공급체계는 대량공급에서 적지(適地)개발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단기 공급에서 계획적 공급으로, 전면수용방식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발환경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주목하여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포스트 개발시대'라는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개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포스트 개발시대'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택지공급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계획 중심의 택지개발 추진, 공급방식의 다양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택지공급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향후 공급체계, 공급계획, 공급방식 측면에서 개발시대의 공급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유사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스트 개발시대'라는 용어의 개념 정리는 학술적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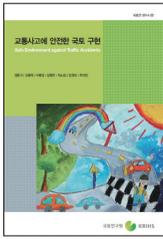
연구기간: 2014. 3. 1~2014. 12. 31

서지사항: 194면, 국토연 2014-34

4 국토인프라연구

National Infrastructure Research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70
-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I) 71
-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SOC 정책방향 연구 72
-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연구 73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74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Safe Environment against Traffic Accidents

김준기, 김종학, 박종일, 김동한, 최소림, 임영태, 류재영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제언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성 향상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공간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구·지가 등의 사회경제지표,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의 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도출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통사고 취약지점(hot spot)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도로안전사업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심리적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통행주체가 이용하는 수단에 따라 느끼는 위험요인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위험요인을 느끼는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넷째, 교통량 감소, 차로수 증가 또는 도로의 시야가 확보될 때 사람들은 통행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초등학교 100m 주변일 경우, 둘째, 집 주변 또는 도로 주행 시 화물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셋째, 집 주변 또는 도로 주행 시 불법 주정차가 있을 경우, 넷째, 도로 조명의 조도가 감소할 경우, 다섯째, 도로주행 시 신호등 없이 접속되는 이면도로가 증가할 경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경험할 경향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미치는 다양한 공간적 영향요인을 공간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제한속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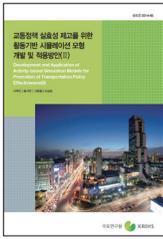
30kph 이하인 도로연장이 증가할수록 교통사고는 감소하며, 지하철역/정류장 등 대중교통 결절점과 제한속도 차이가 30kph 이상인 도로와의 결절점 등 도시공간 내 이동객체 간 상충지점이 증가할수록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통사고 취약지점 분석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부의 도로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기법인 NKDE를 활용하여 중랑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구간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활용도와 교통안전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일상생활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고 개선사례 분석 시 반영하였다. 또한 이를 교통사고 통계자료와 사고 다발지점, NKDE 분석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마련하였다.

인적·공간적 교통사고 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될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선,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조정, 지구단위 교통안전대책 수립, 주차문제 해결방안 모색,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안전과 교통계획의 통합분석모형 개발 등 6개의 교통안전정책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으며, 정책 제안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속도 하향조정,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교통안전 교사 제도 도입, 불법주차 단속의 민간 위탁, '생활도로 구역'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기간: 2014. 1. 1~2014. 12. 31

서지사항: 249면, 국토연 2014-22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I)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ctivity-based Simulation Models for Promotion of Transportation Policy Effectiveness(II)

이백진, 윤서연, 이춘용, 오성호

본 연구는 한국형 활동기반모형의 프로토타입인 ACTOR(ACTivity-based micro-simulaOR) 개발을 위한 2차 연도 연구다. 2013년에 수행한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미국의 SimAGENT(CEMDAP)와 벨기에의 FEATHERS 모형을 활용하여 수도권 대상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2차 연도 ACTOR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SimAGENT와 FEATHERS는 각각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이므로, 다각도의 비교검토를 거쳐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계량경제 기반의 SimAGENT를 선정하여 ACTOR 개발의 기반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해외 모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모형이 기존에 구축된 지역과 한국, 특히 수도권 사이에 존재하는 행태와 지역환경의 차이점을 고려하였다. ACTOR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한 주안점은 첫째,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수도권 행태프로그램 논리구조의 한국화 및 행태모형의 한국화, 둘째, 2천 만 명 이상의 수도권 인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오류수정 및 속도개선, 셋째, 시뮬레이션 수행결과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을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형 활동기반모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안 도출 등이다.

위와 같은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수행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뮬레이션 과정이 가장 복잡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단선택모형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근무지 도착시간, 출근통행 출발시간, 근무 외 활동수행 등 시간사용과 활동 부분은 무리 없는 수준으로 구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ACTOR를 활용하여 유연근무제 정책효과를 테스트해본 결과, 4단계 모형의 시간대별 통행량 예측에 비해 더욱 세밀한 시간단위로 수단별 도착시간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교통체증 완

화 효과를 자세히 도출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개인별 활동과 시간사용에 대한 2차 영향까지 파악할 수 있어 활동기반모형의 정책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프로토타입 모형으로 개발한 ACTOR를 이용하여 기존의 모형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의한 영향을 도출하는 등 활동기반모형의 정책활용성을 검증하였지만, 앞으로 활동기반모형이 실무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행동모형의 추정과 구축에 중점을 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더욱 정교한 행동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둘째, 현재의 가구통행실태조사만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행동패턴에 한계가 있어 향후 더욱 심도 있는 활동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셋째, 시뮬레이션 모형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최근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단위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미래 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SOC 정책방향 연구

Direction of Transportation Policies Corresponding to the Megatrends

조남건, 김혜란, 정진규, 김흥석, 김호정

메가트렌드는 현대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흐름으로 우리의 사회경제환경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교통SOC 또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미래의 교통SOC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등이 2050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메가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메가트렌드가 국가의 장기교통SOC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관련연구를 통해 교통SOC와 관계가 깊은 메가트렌드를 ① 인구구조의 변화, ② 가치관의 다양화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③ 도시화의 진전, ④과학기술 발전, ⑤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⑥ 남북한 경제통합 등 6개로 선정하였다.

메가트렌드와 관련된 교통SOC의 정책적 이슈에 대해 이슈의 중요도를 알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구성 시 6개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24개 트렌드가 선정되었고, 이 트렌드들과 연관되어 장래에 고려되어야 할 교통SOC의 정책적 이슈로 29개를 제시하였다. 이 조사는 해당 이슈가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e-메일을 통해 17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 조사에서 미래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12개의 이슈들이 선정되었으며, 미래의 교통정책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증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립된 우리나라의 법정 장기교통SOC계획 5개를 대상으로 주요 이슈들의 반영 여부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장기국가교통 SOC계획 중에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미흡한 '고령자 통행안전' 등 4개 중점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 교통SOC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볼 때, 본 연구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은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 향상 추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통행안전을 위해서는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는 종합적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자를 배려한 설계기법 적용, 고령운전자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다.

둘째, 노후 SOC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생애주기 비용기반의 자산관리 체계 구축 및 기능에 따른 도로 관리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다.

셋째, 비동력 교통수단 이용 증가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법을 확대적용하여 가로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이 배려된 교통계획의 추진이 요망된다.

넷째, 여가통행 증가에 대응해서는 종합적인 여가교통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주말이나 휴가철의 교통혼잡구간의 개선, 육해공 터미널 간의 연계성 강화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한편 종합적으로 볼 때 장래에 인프라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감축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여 주행거리 기반의 '이용자 비용'을 부과하여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연구기간: 2014. 3. 1~2014. 12. 31

서지사항: 173면, 국토연 2014-51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연구

The Application of Smart Cell in Space Policy

김종학, 고용석, 김준기, 김동한

오늘날 스마트폰은 휴대하고 다녀야 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3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은 인당 1.07대, 스마트폰 가입대수는 3,556만 대로 스마트폰 시장의 69%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 기반의 활동인구 빅데이터로 국민의 일상을 국토공간에 동적으로 표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정보기술과 인간의 융합은 정적 국토의 동적 정보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실시간 공간분포를 공간정보와 연동할 수 있다면 그 활용가치는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데이터와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그 활용가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시험적 연구로 볼 수 있다. 실증 분석 대상은 수도권, 강남구, 서울대공원 등 다양한 공간위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스마트폰 빅데이터로 요일별, 시간대별 수도권 활동인구의 동적 변화를 분석하여 수도권 남부의 인구집중과 북부의 직장집중 현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대학병원,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의 활동인구 동적 변화를 검토해 언제, 어떤 시설의 활동인구가 많은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고 다채로운 실증분석을 통해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빅데이터 연구는 현상의 흐름이나 경향을 표시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는 스마트 셀의 실제 공간위치를 파악하여 활동인구 변화에 현실적인 통찰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MS office의 Powermap을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적용해 빅데이터의 시각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스마트폰 기반 활동인구 빅데이터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시자료의 신뢰성을 거시자료로 파악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향후 다양한 자료로 활동인구 빅데이

터의 신뢰성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교통, 안전, 경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한정되어 분석하였으므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다양한 공간규모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활용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Metropolitan Transportation Governance : Focusing on Network-type Metropolitan Areas

이춘용

지역행복생활권 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시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모색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내 자치단체들이 현안을 해결해가는 광역교통 거버넌스 초기의 틀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상호 연계협력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계획주체로 민간과 지역주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며, 중앙과 지방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광역교통 거버넌스’의 개념은 생활권 내 지방자치단체가 인접 자치단체와 민간부문, 비영리기관(학계 전문가, NGO 등),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교통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계획·건설·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실행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먼저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는 정부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국한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생활권별 발전계획은 5년 단위 시설계획으로 중장기 발전전략 실현에 한계가 있고, 광역교통은 가이드라인 부재로 대상사업이 생활권별로 일관되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생활권 내 자치단체 간에 사업비 부담을 회피하고, 불필요한 경쟁의식 등으로 연계협력이 부진하며 민간과 주민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넷째,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광역교통 인프라에 대한 획일적 지원 기준은 네트워크형 생활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지역이 주체가 되고 자치와 상생협력 기반을 완비할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를 조기에 개선시킬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네트워크형 생활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먼저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에 광역교통 관련사업 조정 및 예산편성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각 자치

단체가 수립하는 개별계획에서 협력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활권별 광역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마스터플랜은 교통, 지역발전, 산업입지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과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는 5년 단위의 한시적 계획에서 교통, 지역, 산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계획 조정, 예산편성 운용 등의 권한 위임을 각 생활권에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하여 지역발전 정책과 국토교통 추진전략이 효율적으로 생활권에 실현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사업을 생활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연구기간: 2014. 9. 1~2014. 11. 30

서지사항: 100면, 국토연 2014-6

5 국토정보연구

Geo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
구현방안 연구 76
-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77
-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78
- 국토정책 수요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79
-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 80
-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81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 구현방안 연구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3.0 through Assessment of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in Public Sector

강혜경

1995년부터 정부주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이 추진된 이후, 정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공간정보와 행정업무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정보 구축·활용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추진된 공간정보사업수는 359개(2,589억 원), 2014년에는 385개(2,964억 원)¹⁾로 정부의 정보화 예산 규모(2013년 기준, 약 3조 3천억 원)²⁾의 약 8.8%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공간정보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목표 실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을 총괄·조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사업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그 한계 중의 하나로, 공간정보사업의 정책평가 측면에서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데, 정작 공간정보사업의 정책기여도 평가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공간정보사업을 정부3.0 정책실현 관점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주된 공간정보사업이 정부3.0 정책실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3.0 정책의 개념과 평가지표를 소개하고, 하위정책으로서 공간정보정책을 기술한 후 공간정보정책의 실현수단으로서 공간정보사업을 기술하였다. 둘째, 정부3.0 정책 평가지표를 하위정책인 공간정보정책에 맞게 수정하여 ‘공간정보 맞춤형 정부3.0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간정보사업의 정부3.0 정책기여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공간정보정책 - 사업(시스템, DB, 서비스) - 산출물의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사업의 산출물(시스템, DB, 서비스)이 공간정

보 맞춤형 정부3.0 평가지표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공간정보사업의 정부3.0 정책실현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부3.0 정책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림공간정보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산림공간정보사업들의 정부3.0 정책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산림공간정보정책의 정부3.0 정책기여는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3.0 정책의 세부부문(‘개방’, ‘공유협력’, ‘소통’)별로 살펴보면 산림공간정보정책의 정부3.0 ‘개방’의 기여도는 70%, ‘공유협력’의 정책기여도는 37%, ‘소통’의 기여도는 42%였다.

공간정보사업은 공간정보정책 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이므로, 사업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기여도 평가중심의 공간정보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3.0 정책 등 공간정보정책이 상위정책의 목표실현에 기여할 때 국가적 중요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3.0, 창조경제 등의 정부정책들에 공간정보정책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산출할 수 있는 정책평가모형 개발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간정보정책이 정부3.0 ‘공유협력’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정부부처 내 확산지원 등 ‘공유협력’을 촉진시키는 제도·기반을 확보·확산하는 것도 향후 추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연구기간: 2014. 9. 10~2014. 12. 10
 서지사항: 56면, 국토연 2014-18

1) 국토해양부, 2014. 2014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54.
 2) 디지털 타임스, 2012. 내년 ‘정부 정보화 예산’ 소폭 감소한 3조 2967억,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01102011160739002.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A Study on Building and Utilization of Spatial Knowledge Platform for Scientific Territorial Planning(I)

김대중, 황명화, 윤서연, 서태성

최근 국정운영에 있어서 개방·공유·소통·협력 정책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면서 국토계획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수의 정책가와 계획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국토계획이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등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부정책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 및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책은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신공항 입지선정 등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사례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고자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앙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생산하고 있는 정보들을 개방하고 있으며, 국가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상관없는 통계자료와 공간자료 또한 개방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형태와 현황에 대한 정보인 공간 정보는 여러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분산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을 2012년에 완료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축된 공간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도 2006년부터 개발해왔고, 2013년부터 지자체에 보급 중이다.

정부의 노력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으나 국토계획이나 국토정책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질적합리성에 기반하여 대안을 제시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소통하고 합의해야 하는 방식으로 국토계획 방법론이 바뀌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국토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

한 분야의 전문가가 융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정부가 애써 구축해온 공간정보와 분석도구는 여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지식플랫폼이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하여 플랫폼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생애주기가 짧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갖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도 단순 정보서비스가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 선순환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때 플랫폼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가 만나서 양방향으로 상호 작용하는 공간 또는 장(場)이다. 국토계획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국토계획전문가, 정보분석전문가, 정책가 등 이해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 정보,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공간지식플랫폼이다.

본 연구사업은 3개년에 걸쳐 수행하는 사업이며, 이번 연구는 그 첫 번째로 공간지식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구상하고, 구축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시스템을 설계하여 구축하였다. 향후 시범시스템을 확대구축하고 안정화 및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융합하여 국토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Developing Territorial Indicators for Place-based and Citizen-oriented Policy Making

임은선, 이영주, 차미숙, 김종학

최근 국토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성장과 개발에서 국민 행복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삶의 질, 행복, 공간복지, 문화융합, 안전안심과 같은 질적 성숙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책목표나 정책 대상이 바뀌면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국토정책지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 지원의 성과 측정 차원에서 총량적이고 거시적인 경제지표 위주다. 둘째, 정책공급 및 시설계획 달성도를 측정하는 목표지향적인 시설지표 위주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국민의 체감도는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셋째, 지표 생산과 활용이 행정구역이라는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국민행복'이 국정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과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체감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의 '현장화', '융합화', '협력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표의 현장화 관점에서는 총량적, 객관적, 시설의 공급지향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별적, 주관적, 이용자의 수요지향적 지표를 개발하였다. 정책지표를 활용하여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부터 정책대상의 타기팅 능력을 제고하였다. 지표의 융합화 관점에서는 국토와 관련한 통계정보를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공간 또는 위치적 특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시간·공간·인간적 요소를 지표에 접목하여 입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표생산의 협력화 관점에서 통계공급기관 주도의 일방향 조사·측정 등 지표생산·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체감도를 지표에 반영하고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지표구축·생산체계를 제시하였다.

국토체감지표 체계는 시스템-오리엔터 기법의 틀을

토대로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삶터, 일터, 쉼터와 관련된 기초적 욕구(needs)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국토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지역사회 안정성', '생활인프라 편리성', '국토이용 효율성', '국토지역 안전성', '국토환경 쾌적성' 등 5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인, 공무원, 전문가들의 설문과 자문회의를 통해 각 영역별로 핵심이 되는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를 선정하고 그 활용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범적으로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 문화·복지시설 이용편리성, 응급의료센터 접근성과 같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착된 객관지표와 각 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에 대한 주관지표를 측정하였다.

향후 수요자중심 정책 발굴에 국토체감지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공감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하고, 생활권에서 광역권까지 국민의 삶터-일터-쉼터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체감지표의 입체적 개발, 자료수집 및 가공 방법의 표준화, 개방형 협력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생산 및 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 및 방법론은 검증·정책화 등 발전적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간: 2014. 1. 1~2014. 12. 31
서지사항: 169면, 국토연 2014-24



국토정책 수요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Model for Integrating Geospatial and Statistical Information

임은선, 이영주, 황명화, 차미숙

국민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 정부는 행정구역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권 중심의 현장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정책도 생활현장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계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인된 행정통계는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공간단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행정통계를 국토정책 분야에 활용할 때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행정구역 위주로 집계되는 통계는 공식적인 공표 또는 발표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생산절차상 시간적 제약, 공간단위의 경직성, 통계조사 대상의 한정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행정구역을 벗어난 다른 공간단위 즉, 더 세밀하거나 새로운 집계기준이 필요한 경우 직접 구축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통계의 공간단위에 관해서는 통계청에서도 다양하게 발전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며 최근 기초단위구, 마이크로 데이터까지 공개하는 등 활용도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용자들에게 가용한 통계자료는 시도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국토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공간정보를 접목한 새로운 통계생산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토정책 분야에 필요한 통계의 공간단위 유연성, 통계구축 대상의 확대, 통계생산의 최신성 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간-통계 융합모델'의 개념과 체계적 생산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정립하여, 국토통계지도의 구축방향과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공간-통계 융합모델'은 국민행복과 안전을 우선하는 생활권중심의 생활밀착형 국토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위치기반의 정밀하고 유연한 국토통계 생산체계다. '공간-통계 융합모델'과 유사

한 데이터 생산이 많아지고, 그 활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문·사회·자연·활동 정보 등과 공간정보를 융합하는 방법에서부터 제작방법의 표준, 배포방식, 가시화 등을 포함한 공간-통계 융합모델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 융합모델이 생활인프라, 안전대책, 보건복지 등 다양한 정책 및 계획수립 과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간-통계 융합모델'의 생산 원리와 방법, 분석방법, 활용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국토교통부·통계청이 협력하여 행정-공간-통계 정보를 유기적으로 융합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업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생활에 밀착된 정책 개발,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 과학적 행정을 실현하는 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간-통계 융합모델'은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 타기팅의 신뢰도를 높여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 국토진단 방법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

Spatiotemporal Analysis of Unstructured Big Data for Public Opinion Monitoring

황명화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국정기조에 따라 수요 및 지역 맞춤형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생산된 비정형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국민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수요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비정형 빅데이터에서 전국적 여론 트렌드를 수시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시기별 여론 트렌드의 세밀한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반영된 국민여론의 시공간적 변화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비정형 빅데이터 시공간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정책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념적으로 비정형 빅데이터 시공간분석 모델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생성되는 비정형 빅데이터에 크롤링, 텍스트마이닝, 사회관계망 분석, 시공간분석 등의 기법을 함께 적용하여,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반영된 국민여론의 시공간적 변화패턴을 분석하는 데이터 중심의 여론 모니터링 방법이다. 궁극적으로 이 모델은 인터넷 소셜미디어상의 국민여론이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수요 및 지역 맞춤형 정책수요 발굴을 지원하고 여론 기반 정책수립의 시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방법론적 구성 측면에서, 비정형 빅데이터 시공간분석 모델은 비정형 빅데이터의 수집, 전처리, 시공간분석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비정형 빅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는 API나 유·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온라인 신문 등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 매체에서 시민들이 논의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한다. 두 번째 비정형 빅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여론 데이터에서 광고성 메시지, 욕설, 중복 메시지 등을 제거하고, 메시지를 관련된 위치·장소 정보와 연계하며(공간정보화 혹은 지오코

딩), 메시지를 정제하여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빅데이터의 시공간분석 단계에서는 공간분포 분석, 시계열 데이터 분석, 텍스트마이닝, 사회관계망분석 등을 융복합 활용하여, 여론의 내용과 형성 주체가 어떤 시공간적 변화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여론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여론 관련 메시지의 작성위치, 단어사용의 시공간 군집지, 여론 토픽 및 감성의 시공간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여론 관련 메시지 작성자의 위치와 사회관계망을 분석하여 여론 형성주체의 시공간적 분포와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석모델은 기존의 여론 모니터링 방법에서 찾아내기 어려웠던 여론 내용의 지역적, 시기적 차이 및 여론형성 주체들의 시공간적 상호작용을 지도와 차트 등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기법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정책적으로,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인프라 성격의 여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면,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4. 11. 1~2014. 12. 31

서지사항: 96면, 국토연 2014-10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Analysis of Trends and Strategies on the Opening of Geospatial Data in the Developed Countries

박종택

본 연구는 새 정부의 정부운영 기본방향인 정부3.0에 부합한 공간데이터 개방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해외사례 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 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 정부의 정부 운영 기조로서 창조경제와 함께 정부 운영방식을 혁신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개방, 공유는 공간정보 정책 부문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개방정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이 당초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공간데이터 개방을 추진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 및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3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을 사례로 하여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을 기초로 하여 민간이 정부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공간데이터 개방은 2009년 오바마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영국의 경우도 새로운 내각의 출범과 함께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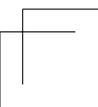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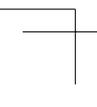
공간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데이터 개방 관련 제도정비가 우선된다. 이들 공간데이터 개방관련 제도 정비는 이전의 정보자유법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정부의 투명성 향상과 정부의 행정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동기에서 출발하였으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방된 공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융합산업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정책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갖고 있는 공간데

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기반의 융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 개방 방식이 진화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개방된 공간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개방되는 공간데이터의 품질향상뿐만 아니라 공간데이터 포맷의 표준화-개방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활용 그리고 오픈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4장에서는 이들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간데이터 개방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부3.0의 일환으로 개방되는 공간데이터는 실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데이터의 최신성과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가공간정보인프라가 고도화되어야 한다. 공간정보기반 융합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공간데이터와 관련통계 등 속성데이터와 연계되어야 하므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공간데이터는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방하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기계해독이 가능한 형태의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개방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데이터 개방에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안전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공간데이터 활용 확산과 융합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의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색인

Index

- 과제명 색인 84
- 연구자명 색인 86

과제명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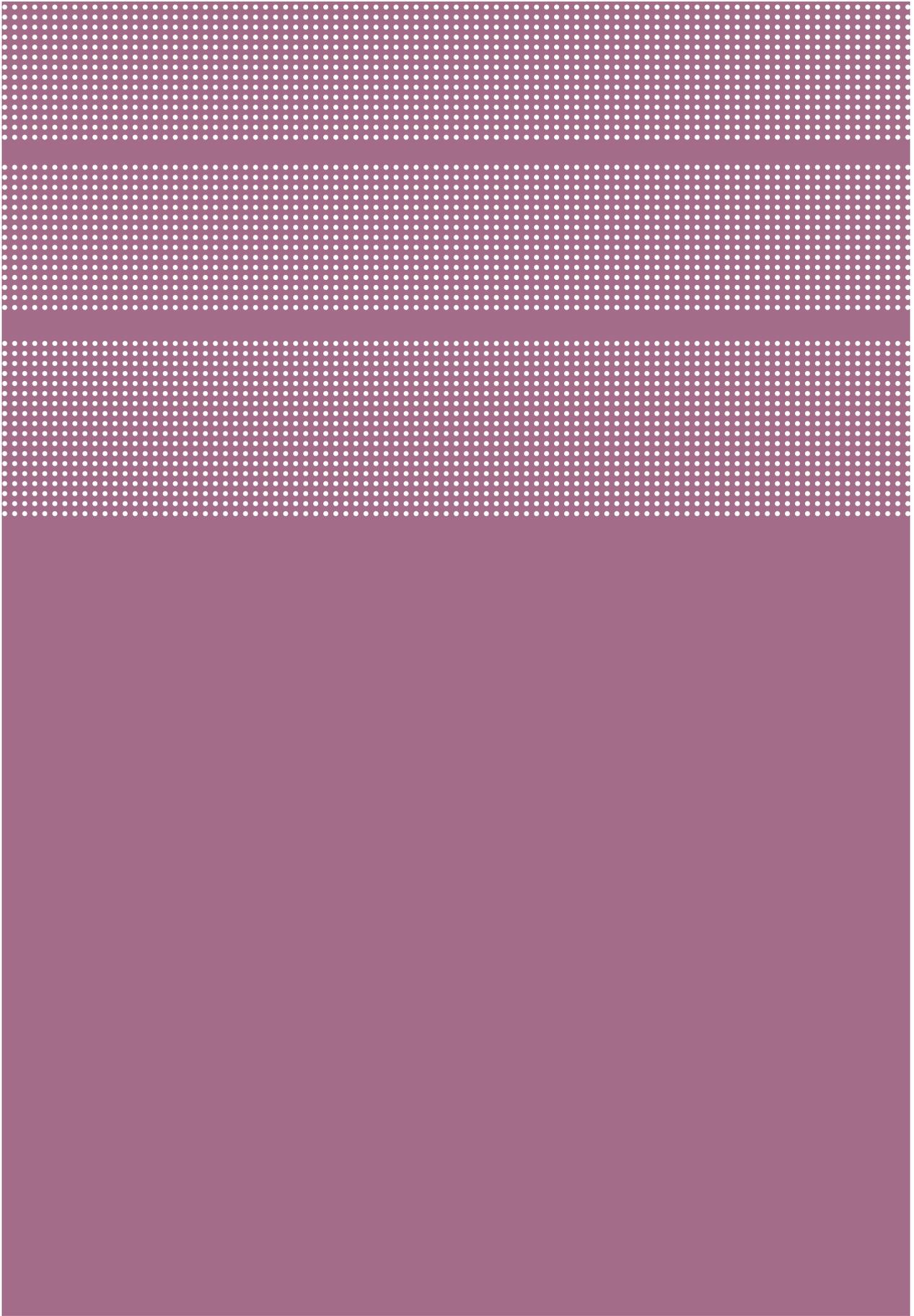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56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22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57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 구현방안 연구	76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77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70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I)	71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78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23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비교와 정책과제	24
국토정책 수요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79
농촌 다문화가구의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58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46
도시계획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47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48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49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50
동북아 평화변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25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SOC 정책방향 연구	72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26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59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60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II)	61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27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방향 연구	28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 제고 방안	29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연구	73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62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30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	80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	51
인구감소기 읍면 중심의 농촌지역 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31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32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63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64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65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33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3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35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36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7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74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66
지역보행환경 평가모형 구축연구	38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연구	39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40
창조산업 ·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52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및 정책과제 연구	53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41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67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68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81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42
혁신 ·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43

연구자명 색인

강미나	58, 63, 64	김태환	51
강민규	22, 42	김태환 1	61, 65, 66
강은진	26	김혜란	30, 72
강혜경	22, 76	김혜승	66
강호제	24, 52	김호정	72
고용석	73	김홍석	72
구형수	42, 47	남기찬	34, 35, 41, 60
권혁일	49	노경식	53
김광익	31, 43	류승한	27, 43
김근용	61, 65, 66	류재영	70
김대중	77	문지희	61
김대진	65, 66	민성희	34, 35
김동근	47	박경현	29, 33, 37, 52
김동한	22, 26, 42, 70, 73	박근현	51
김명수	32	박미선	61, 63
김보미	52	박새롬	49
김상조	46, 47	박세훈	24, 41, 50, 52
김선희	26, 34, 51	박은관	46, 68
김성수	47	박재현	52
김성일	56	박재희	40
김승중	60, 68	박정은	49
김영미	66	박정호	26, 34
김유란	46	박종순	34, 35
김은란	52	박종일	70
김은빈	22, 42	박종택	81
김은정	51	박준	22, 59, 66
김재환	61, 66	박천규	61, 65, 66
김종원	28	박태선	24, 36
김중학	70, 73, 78	방보람	66
김준기	22, 70, 73	배유진	56, 59
김진범	27	배은지	24
김창현	28, 40	변세일	61, 66
김천규	25	변필성	32

서연미	43	이형찬	68
서태성	27, 37, 42, 77	이휘정	65
성혜정	22, 42	임상연	26, 32, 50
손학기	26, 63	임영태	25, 70
송지은	49	임은선	40, 78, 79
안홍기	30, 37, 64	임지영	26
오성호	71	장철순	27, 46
왕광익	53	장희순	60
유미경	58, 64	진성애	66
유승동	65	진성제	24, 35, 61, 66
유재윤	49	전혜선	51
윤서연	71, 77	정소양	49, 52
윤영모	26, 29, 33	정진규	72
윤하중	56, 62	정희남	59, 60
이건민	25, 41	제갈영	66
이미영	36, 38, 40	조남건	72
이백진	24, 25, 71	조병도	60
이범현	46, 68	조판기	49
이병재	47, 48	지대식	61, 65, 66
이상수	68	진정수	64
이상영	60	차미숙	40, 78, 79
이상준	24, 25, 41	최소림	70
이수욱	61	최 수	59, 61, 68
이순자	39	최 진	61
이승복	57	하수정	35
이영주	78, 79	한우석	22, 23, 28, 36
이용우	26	황관석	65, 66
이원섭	40	황명화	77, 79, 80
이윤석	27		
이준호	61		
이춘용	71, 74		
이태리	59, 65, 66, 67		
이태웅	47		



AFRICA

AMERICA

EUROPE

Chapter

III

국제협력사업

1. 국제학술교류	90
2. 개도국 대상 국토정책 지원 및 컨설팅	96
3. 연수프로그램	101

1. 국제학술교류

국토연구원은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토 관련 연구 및 정책 홍보에 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기구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각국의 교수, 연구기관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토 관련 선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서울 메트로랩 국제협력포럼 개최

국토연구원은 서울시·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서울 메트로랩 국제협력포럼(Global Lab on Metropolitan Strategic Planning: Seoul Global Exchange)’을 2014년 4월 28일(월)~5월 1일(목) 서울 글로벌센터 및 서울연구원에서 개최하였다. 메트로랩은 전 세계 대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개발분야 협력강화와 도시계획·거버넌스 혁신을 목표로 세계은행이 2013년 발족, 현재 뉴욕, 브라질 상파울루, 터키 이스탄불 등 세계 각국 대도시 15 곳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및 수도권의 도시개발·관리 경험을 세계은행 메트로랩 회원도시와 공유하고 서울시정에 대한 세계은행 도시 리더들의 인식 제고 및 해외 전파 도모를 위하여 기획되었다. 포럼은 사메 와바(Sameh Wabha) 세계은행 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상범 서울시부시장, 김경환 전 국토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하였



고, 김광중 서울대학교 교수가 ‘불가능에 대한 관리-서울시의 도시변화 경험’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3일간 이어진 포럼에서는 서울 및 아디스아바바, 카라치, 상파울루 등 세계 도시 참가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토연구원-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4년 5월 27일(화)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이하 NILIM)와 ‘한·일 양국의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에 관한 최근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일본 쓰쿠바시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에서 제3차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가나이 아키노리 부소장, 가네코 히로시 도시연구부장, 기우치 노조무 도시계획연구실장, 후지오카 게이타로 도시시설연구실장, 다케야 슈이치 도시방재연구실장, 가츠마타 와타루 도시개발연구실장 등 NILIM의 도시연



구분부 실장단 및 실원, 아카시 다츠오 도쿄도시대학 교수가 참석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김태환 도시연구본부장, 조판기 연구위원, 박세훈 연구위원, 임상연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과제, 한

국의 생활인프라 정책과 일본의 형태규제 운용, 한·일 양국의 광역교통 기반 정비 현황이라는 총 3개의 세션에서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각 세션별 발표 후에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재생의 실행방안 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14 EAROPH 세계대회 참석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4년 8월 10일(토)~12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계획 및 주택기구(EAROPH) 세계대회(World Congress)'에 참석하였다. 국토연구원은 2012년부터 현재(2014년 8월 기준)까지 EAROPH 세계회장직 수행기관으로, 김경환 전 국토연구원장은 세계대회에 앞서 개최된 제45차 EAROPH EXCO Meeting 및 제24차 Council Meeting의 주제를 담당하였다. 상기 회의에는 Ir. Basuki Tjahaja Purnama, M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시장, Noliza Hashim Earoph 사무총장, Ir. Bernadys Djonoputro EAROPH 인도네시아 회장 외 관계자 30명이 참석하여 2013~2014년도 EAROPH 활동현황 및 재정현황 보고, EAROPH 회원국별 지역개발경험 사례를 발표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EAROPH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안내하고 추후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8월 11일(월)~12일(화) 개최된 세계대회 개최식에서 김경환 전 국토연구원장은 Hermanto Dardak EAROPH 차기회장에 회장메달을 양도하고, 뒤이어 명예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세계대회 주요 내용은 6가지로, 스마트 시티·미래 도시(Smart Cities·Future Cities), 다함께 거주하는 도시성(Inclusivity of Cities), 현대 도시에서의 ICT(ICT in Today's Cities), 도시기반시설과 도시성장(Infrastructure Challenges in Cities), 회복가



능성과 도시(Resiliency and the Cities), 도시성과 지속가능성(Urbanism and Sustainability of Our Cities)에 대해 다루어졌으며, 이는 도시발전에서 지속가능성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더불어 현대도시에서 도시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및 ICT의 수준, 이것이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삶과 도시건설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다음 EAROPH 지역대회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스마트국토 엑스포: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공간정보 컨퍼런스가 2014년 8월 26일(화)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국내의 시장 진작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스마트국토 엑스포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미래사회를 향한 빅데이터 기술과 활용'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공간정보 관련 학계, 정보기관,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등 연인원 500명이 이상이 참석하였다.

이날 컨퍼런스는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개회사와 김경환 전 국토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위치정보의 융합(Adding Location to Big Data Analytics)을 주제로 하는 Leonard Jayamohan Esri 아시아 총괄이사의 기조연설로 이어졌다. 이후 정부3.0시대의 공간빅데이터, 공간빅데이터 기술, 공간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주요 주제로 하는 세 개의 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총 8개의 주제발표를 하였다. 컨퍼런



스 마지막 세션인 패널토론에서는 오재인 한국빅데이터학회장을 좌장으로, 송규봉(주GIS United 대표, 성장환 토지주택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장, 최현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홍상기 한국공간정보학회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과학자 양성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국토연구원 개원36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4년 10월 7일(화) 서울시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개원 36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부주제는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정책', '주거급여 도입과 주택정책'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민했던 일본, 독일, 미국, 네덜란드 전문가와 함께 향후 국토공간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1부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정책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가 논의되었다. 카네코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도시계획연구본부장이 '인구 감소 시대의 국토 그린



드디자인'을, 오토 독일 라이프니츠 도시 및 지역환경계획연구소 부소장이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

계획적 대응'을,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령화 시대 한국의 공간정책 및 실천 전략'을 발표하였다.

2부 주거급여 도입과 주택정책에서는 스티븐 말페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교수와 휴고 프리무스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자국의 주택 바우처(주택수당제) 추진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주거급여제도의 개편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연례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 27일(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본부 CR-2 회의실에서 KRIHS-IDB 연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 앞서 김경환 전 국토연구원장과 IDB의 Bernardo Guillamon (Manager, Office of Outreach and Partnership: ORP) 국장은 다년도 연수 및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로의 공동연구 확대 등을 포괄하는 상호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이어진 발표에서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역개발정책을 주제로, 한국 지역개발정책의 변화추이와 최근 지역개발의 화두인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상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 연구본부장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및 중남미 도시 지역의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IDB의 Laura Jaitman (Young Professional, IFD/ICS)은 중남미지역 도시에서의 시민안전문제를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사례발표를 했다.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도시화,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개



발, 도시개발 최근 이슈를 소개하였으며, IDB의 Nora Libertun (Housing & Urban Development Specialist: 주택 및 도시전문가, IFD/FMM)은 대도시의 주택부족 문제를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각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과 중남미지역의 도시 및 지역개발방식의 차이를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이 강조되었다.

제3차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정례워크숍 및 협력성과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 28일(화) '제3차 KRIHS-세계은행 정례워크숍 및 협력성과 워크숍'을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본부에서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세계은행 관계자(Marisela Montoliu 국장, Ede Ijjasz-Vasquez 선임자문, Sameh Wahba 주택-도시전문가 외 다수) 및 국토연구원 관계

자(김경환 전 원장, 문정호 연구위원, 조진철 연구위원 등 8명)가 참석하였으며 이날 행사는 오전, 오후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오전 정례워크숍에서는 김경환 전 원장이 "The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patial and Housing Policies in Korea"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공간계획

및 토지주택개발 정책에 대한 기초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 '주택 및 토지개발 정책'과 '지역공간계획 및 지속가능 개발'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Marisela Montoliu 세계은행 국장의 폐회사가 진행되었다. 오후 세션에서는 세계은행 각 분야 및 지역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 간 최근 협력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진행되었다.

이번 정례워크숍을 통해 양 기관 간 best practice를 소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솔루션을 개도국에 적용하는 프로젝트 발굴 및 지식 공유를 할 수 있었고, 협력성과 워크숍을 통해 현재까지의 협력현황 분석 및 앞으로의 다양한 협력방안 아이디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향후 양 기관 간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KRIHS Reverse Mortgage Forum 국제포럼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2014년 11월 4일(화)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KRIHS Reverse Mortgage Forum'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Thomas Davidoff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 교수, Yongheng Deng 국립싱가포르대학교 교수, 김정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후 준비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역모기지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Davidoff 교수는 '큰 비용이 공적주택연금(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에 대한 낮은 수요를 해명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역모기지의 가능성과 위험 요소에 주안점을 두고 은퇴금융설계에서 주택자산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Deng 교수는 '싱가포르 노령자를 위한 거주지와 주택금융'이라는 주제로 역모기지와 임대환매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미래의 노령자를 위한 거주지와 주택금융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주택 소유자의 재정적 필요 그리고 문화적 전통과 심리적 수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정주 조사관은 'JTYK 프로그램의 위험관리'라는 주제로, 2007년 시행된 한국의 공공 역모기지 프로그램인 JTYK의 위험관리 절차를 되짚어



보고 위험관리를 위해 내부 전문가그룹 조성, 위험측정 모델 구상, 자료의 구축, 다양한 위험감지용 지수 개발, 제도의 실행지표 개선작업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경환 전 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연구소 팀장,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승렬 공무원연금공단 경영개선연구부장, 신성환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성환 한화보험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여 향후 역모기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개진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한중 도시개발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과 중국도시개혁발전센터(CCUD)는 지난 2014년 11월 9일(일) 광저우 량함플레이스에서 ‘한중 신도시·신개발지구의 경험과 도전’에 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이철 중국도시개혁발전센터 주임의 국토연구원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금번 공동세미나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양국 간의 도시화 당면과제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세미나에는 중국도시개혁발전센터의 이철 주임, 심지 계획원장, 풍규 연구원과 황충화 호북 무한 한남신도시 관리위원회 주임, 동안민 바이두 공정계획건설부 총경리, 왕건곤 북경 풍대 과학기술단지투자회사 부총경리 등과



국토연구원의 김동주 원장, 김태환 도시연구본부장, 김성수 책임연구원, 김은란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제23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는 2014년 12월 4일(목) 서울 명동 세종호텔 릴리홀에서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RICE),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3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RICE의 마츠모토 연구자문이사, 후카사와 연구이사, 나카모리 연구원, 스키하라 연구원 및 토요대학교 안상경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국토연구원의 김동주 원장, 천현숙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윤하중 연구위원, 김성일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이승복 연구위원, 배유진 연구원, 이승훈 연구원, 박대근 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홍수 원장, 이영환 연구위원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세션 1에서 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의 건설경제와 전망’, 나카모리 RICE 연구원의 ‘일본의 건설경제와 전망’, 세션 2에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공공시설물 안전제고를 위한 최근 정부 정책과 제언’, 스키하라 RICE 연구원의 ‘일본의 건설기술 인력의 부족과 그 대책’, 세션 3에서 이



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의 공공건설사업 불공정 사례’, 안상경 토요대학교 교수의 ‘서울과 도쿄 간의 공간구조 변화의 차이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표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건설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누었다.

2. 개도국 대상 국토정책 지원 및 컨설팅

국토연구원은 지구촌 공동 성장과 공존 및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지식 격차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토·지역·도시·교통 분야에서의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대한 해외개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셀랑고르(Selangor)주 기술시찰단 내원 기념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4년 3월 4일(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Selangor)주 고위공무원 4인과 ‘한국-말레이시아 주택정책 및 발전경험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말레이시아 시찰단은 한국의 주택정책과 개발 현황 및 최근 이슈를 조사하고, 셀랑고르주 도시구조계획 2020(State Structural Plan 2020)과 말레이시아 주택정책 및 계획 등 자국의 정책현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주택정책 및 개발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한국의 공공주택설립 추진과정 및 성과,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등에 대해 공유하였다. 조춘만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추진성과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안양시 U-City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성공적 스마트시티 운영사례로 도시통합관리시스템 기반 실제 교통·방범·안전 등 현장견학의 기회를 가졌다.



말레이시아 시찰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국토균형발전 및 주택정책 등을 이해하고, 이에 기여한 국토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더불어, 향후 국토연구원과의 국제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포럼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4년 4월 28일(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카자흐스탄 국가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3개의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카자흐스탄 국가정보기술공사, 국가역량개발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번 포럼은 유라시아를 ‘하나, 창조,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가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언(2013.10.18)을 실현



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포럼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축사를 전하였고, 이사에프 카즈백 카자흐스탄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로만 카자흐스탄 하원의원과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 장관, 백주현 주카자흐스탄 대사와 무사리모프 이고르 카자흐스탄 외무부 대변인이 환영사와 축사를 전달하였다. 기조연설 세션에서는 양수길 전 녹색성장위원장이 좌장을 맡아서 ‘한-카자흐스탄 간 유라시아 협력구상과 비전’을 주제로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게르만 카자흐스탄 국가전략연구소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진 경제협력 세션에서는 강혜경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한국의 국토정보화 발전과정’을 비롯하여 국토

정보, 에너지, 국가경쟁력을 부문으로 한-카자흐스탄 협력실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한-카자흐스탄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와이즈만 미팅(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참석)에서는 한-카자흐스탄 협력을 유라시아 공동체의 관점에서 인식, 인력, 지식을 공유·확대해 나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양국 간 공동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오후에 진행된 국토정보정책(NGIS)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과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하여 4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 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라시아 국토정보인프라(Eurasian SDI)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 국토정보 인력양성과 Eurasian SDI 구축을 위하여 한국의 협력지원을 요청하는 ROD(Record of Discussion)를 체결하였다.

국토연구원-에티오피아 정책연구소(PSRC) 도시개발 정책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4년 6월 25일(수) 에티오피아 정책연구소(Policy Study and Research Centre : PSRC)의 장관급 대표단 5명 및 주한에티오피아 공사 참사관 등과 함께 한국의 도시개발 정책과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에티오피아에 실효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3년 설립된 에티오피아 정책연구소의 대표자들과 양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한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 정책과 경험, 사례 등을 공유하며, 에티오피아의 도시개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이원섭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의 ‘한국의 국토개발 계획과 정책’과 김성수 책임연구원의 ‘한국의 도시개발 및 정책’에 대한 강의와 Q&A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에티오피아 산업화 전략과 국토개발계획·지역개발계획의 연계성,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 및 사례, 그린정책, 공공 및 민간주택 정책 및 공급 체계, 토지보상 방



안,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를 포함한 한국의 균형발전 정책, KSP사업 및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베트남 건설법 개정 및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014년 9월 16일(화)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호텔에서 'Vietnam Construction Law 2014 and Other Regulations in Relation to Foreign Investment in Construction'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베트남 건설부 산하 고위공무원 연수원(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 AMC)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오전-오후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오전 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김경일 선임연구위원과 AMC의 Bui Duc Hung 원장의 축사, 조진철 연구위원의 국토연구원 소개, 베트남 건설부·계획투자부·재무부에서 2014년도 개정된 건설법 및 관련정책 발표, 한국의 투자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의 개발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로 진행되었다. 오후 세션에서는 AMC의 Bui Duc Hung 원장을 좌장으로 한-베 협력방안 및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본 워크숍을 통해 베트남 내 건설법 개정을 통한 국가개발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공공개발부 공무원 방한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014년 9월 18일(목)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인도네시아 공공개발부 공무원 방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인도네시아 공공개발부(Ministry of Public Works)의 요청으로 계획된 이번 워크숍에는 Dedy Permadi 공공개발부 서인도네시아 지역계획정책부서장을 포함, 총 8인이 참석하여 1960년 이후 진행된 한국의 국토개발계획 및 정책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의 토지개발상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경환 전 국토연구원장과 인도네시아측 공무원 8인의 접견 후, 문정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국토계획 및 정책 발표 및 정희남 선임연구위원의 한국의 토지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워크숍을 통해 1960~198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기반으로 한국의 국토계획 수립과정을 소개하고 도시



팽창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국토계획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세계은행 · 멕시코 고위공무원과 도시재생 및 공공주택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화)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멕시코 고위공무원 및 세계은행 관계자 등 총 10인과 함께 도시재생 · 재개발, 토지, 주택 및 공공주택개발을 주제로 단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멕시코 측 주요 참가자로는 Maria Paloma Silva de Anzorena 국민주택위원회 국장, Jesús Alberto Cano 연방모기지협회 국장, José Reyes Vocal Ejecutivo 공무원 주택기금 국장, Jesús Sergio Alcántara Núñez 토지보유규정위원회 국장 등으로, 세계은행의 녹색성장 기금(Green Growth Trust Fund)의 지원을 받아 시행 중인 'Mexico-Korea Knowledge Exchange Study Tour'의 일환으로 내한하였다.

본 워크숍은 오전, 오후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오전에는 조진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기관소개, 박세훈 연구위원의 '한국의 도시재생 및 재개발 정책 개요' 및 박준 책임연구원의 '한국의 주택 및 토지정책 개요'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오후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의 채미옥 원장과 심재현 박사의 연구원 소개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더불어 성남 시청 도시개발사업단을 방문, 공영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성남시 정책 및 사례와 실제 성남시 구도심의 순환형 재개발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사례를 공유하였다.

국토연구원-에콰도르 키토 시(市) 국제교류 협력강화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4년 10월 17일(금)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에콰도르 키토시 Anamaria Correa Crespo 투자통상국장, Andres Varela 주한에콰도르 대사관 2등 서기관, Marcelo Pazos 상무관과 에콰도르 키토시의 공공 및 민간 영역 투자유치와 인적자원 개발, 그리고 국토연구원을 포함한 한국과의 국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본 워크숍에서 Correa 국장은 키토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근 국제공항 외곽에 위치할 물류센터 건립 사업과 이와 관련한 상하수도 · 전기공급인프라 조성방안, 키토시의 지하철 건설 비용증가에 따른 최종 소비자의 가격 부담증가 사례, 폐쇄한 기존 공항부지 재개발 사업으로서 혁신센터 조성, 공원 및 박물관 등의 휴식 · 문화공간 확보방안, 그리고 잔여 부지 부동산 개발 등을 도모하는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의 과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 KOICA, 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공무원 역량강화프로그램과 현지 실무교육,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지식공유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Correa 국장은 기획재정부 KSP와 IDB를 통한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토연구원-대만 국가발전위원회 국토개발정책자문 업무협의회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4년 10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Council) 소속 Chen Li-Fen 수석전문가, Wang Hsi-Chuan, Executive Officer, Chen Wei-Chih 전문기술자 3인과 한국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발전과정, 계획 주체, 정책적 변화, 지역 균형발전시도와 최근의 행정수도 이전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의 Chen Li-Fen 수석전문가는 한국의 국토계획체제와 행정구역체제, 신도시 건설 배경과 특징, 광역경제권과 행복생활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등 하위계획과 상위계획 간 조화와 관련기관 및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토지이용계획과 규제 간의 조화로운 운영



방법,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 극복, 토지수용 법령, 절차, 보상법 등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나갔다. 대만 방문단은 국토연구원과의 향후 협력방안에도 큰 관심을 보였으며, 국토연구원의 초청연수 과정 등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중국 국토자원부 재무사 사장 일행, 토지수용 및 보상 및 제도 관련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014년 11월 20일(금) 3층 중회의실에서 중국 국토자원부 재무사 Lai Wensheng 사장, Li Guodong 섬서성 국토자원청 부청장, He Mingyu 국토자원부 재무사 처장, Shen Linye 감숙성 국토자원청 처장, Luo Siwei 산둥성 국토자원청 부처장, Zhao Haixin 국토자원부 토지정리센터 처장, Peng Yanbo 호남성 국토자원청 주임 등 총 7명이 내한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외교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의 내방요청을 받아 개최된 본 워크숍은 한국의 토지수용과정, 토지보상 관련 제도, 분쟁해결 체계, 토지가치 증대 및 분배제도와 토지세제 등에 대한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열렸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조진철 연구위원의 국토연구원 소개에 이어 주택·토지연구본부 정희남 선임연구위원의 한국의 토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발표와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



다. 방문단은 국토연구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방문하여 한국의 토지관련 규제, 제도 및 토지수용 및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3. 연수프로그램

개발도상국의 중견 공무원이나 연수생을 위해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은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 축적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정책사례를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프로그램은 자체 및 위탁연수로 실시되며 강의, 현장학습, 산업시찰, 워크숍, 어드바이저 미팅, 정책보고서 작성, 문화 및 친교 등으로 이루어진다.

네팔 룸비니 마스터플랜 3차 초청연수 실시

국토연구원은 2014년 3월 11일(화)부터 24일(월)까지 2주간 ‘네팔 룸비니 마스터플랜 3차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초청연수는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체결한 수탁과제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한국의 역사지역 보존계획 관련제도 및 정책, 문화재 보호법, 토지이용제도 등의 사례연구와 현장 견학으로 구성되었다. Bharat Raj RAWAT 문화관광민간항공부(Ministry of Culture, Tourism & Civil Aviation) 차관보 등 네팔 실무자급 공무원 7인과 룸비니 개발 트러스트(Lumbini Development Trust) 소속 3인, UNESCO 컨설턴트 1인이 참가하였다.

3월 12일(수) 개회식에는 김경환 전 국토연구원장이 참석, Bharat 차관보와 함께 이번 연수가 박물관 및 유적지 관리, 관련 조직 계획과 연관된 지식 공유의 기반이 될지 희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의는 크게 한국의 국토인프라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관리 등 2개 맥락으로 제공되어, 국토연구원 이상건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의 ‘한국 국토인프라 정책’, 문정



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역계획 및 정책’,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의 ‘문화보존정책 변화흐름 및 사례’ 등이 제공되었다.

이 외에도 환경그룹, 시공테크 등 룸비니 지역 개발 및 문화재 관리 관련 기업 견학, 경주, 영주, 포항 등 한국의 문화유적지 현장 답사를 통해 한국 문화재 보존 정책 및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KOICA 위탁 교육 연수 실시: 중남미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수립 과정

국토연구원은 2014년 4월 7일(월)부터 4월 23일(수)까지 2주간 남미 3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분야에 종사하는 고위 공무원 16인을 대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위탁연수인 ‘국토 및 지역개

발정책 수립과정(2차연도)’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다년도(2013~2015년) 연수프로그램의 2차연도 과정으로 연수의 효과성 및 연속성 증대 및 향후 프로젝트 발굴을 목적으로, 강

의, 현장견학, 산업시찰, 어드바이저 미팅, 최종 워크숍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주요 강의는 한국의 지역체계에 대한 이해 및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개발거버넌스 및 재정, 도시화 및 도시개발정책, 지속가능한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주택복지정책, 지역개발정책 및 지역평가방법론 등으로 각 분야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다. 현장견학은 강의와 관련된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역사박물관, 안양시청, 청계천 문화관 등을 방문하였다. 산업시찰은 2박 3일간(4월 17일~19일) 세종시홍보관 및 국토교통부(세종시), 부산항만공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 포스코(포항), 불국사 및 석굴암(경주)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토계획 전반의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항만 및 인프라 시설, 역사유적 등을 견학하였다. 최종 워크숍을 통해 연수생들은 향후 협력프로젝트(안)을 발표했으며, 온라인 자문, 전문가 파견, 기술협력 등 국토연구원 및 한국국제협력단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이 도출되었다.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및 건설부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국토연구원은 2014년 6월 2일(월)부터 6월 14일(토)까지 2주간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 및 건설부 소속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프라 개발 현황과 역사에 대한 지식공유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2013 KSP 양곤 남서부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국가 초청연수로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였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미얀마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특정 분야에 주목하여 국토연구원 배순석 전 선임연구위원의 '서민주택 정책', 이원섭 기획경영본부장의 '국토계획체계', 정희남 선임연구위원의 '부동산 정책' 및 김종원 부원장의 '수자원 관리 정책' 강의로 구성하였다. 또한, 현지의 개발 수요와 정책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국내 유관시설을 선정하여 안양 U-City 통합관제실, 서남물재생센터, 마포자원회수시설, LH공사의 The



Green 친환경 주택홍보관,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청댐, 부산항만공사, 포스코 제철소 등의 현장방문을 실시함으로써 강의와 견학의 균형을 갖추었다. 서울시티버스 투어, 경복궁, 안압지, 불국사 견학 등 한국의 개발경험과 인프라 구축현황을 체험 및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KOICA 위탁 교육 연수 실시: 알제리 국토개발과정

국토연구원은 2014년 8월 18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2주간 '알제리 국토개발과정' 연수를 시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주최,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의 Souhila Dahim 국장을 포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15명이 참가하였다. 본 과정의 목적은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교통정책 등 국토개발 관련 정책과 지식을 알제리와 공유하고, 알제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액션플랜은 Regional Director, Ali Benseddik의 '알제리 수도의 도심교통혼잡 해소'와 Regional Director, Farida Bourekba의 '알제리 고속도로주변부 개발' 등 총 2건으로 제시되었다. 알제리 측이 제시한 액션플랜에는 강의 내용을 비롯하여, 안양 U-City 통합관제센터, LH공사의 위례신도시 사업단 홍보관, 인천공항, 인천대교 홍보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캠퍼트시티 홍보관, 강남 자원회수시설, 한국수자원



공사의 물관리센터, 세종정부청사, 부산신항만공사 홍보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등 현장 방문지에 대한 내용이 반영·제시되었다.

본 연수를 계기로 한국-알제리 간의 지속적인 국토개발분야 협력, 특히 교통분야 정책에 대한 컨설팅 등이 논의되어 추가적인 협력 활동이 기대되는 바다.

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 실시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발주사업인 개도국 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본 연수는 2013~2014년 건설업계·공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수자를 선발·초청하여 한국기업의 해외건설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한국의 인프라 발전에 대한 해외 발주기관의 이해 및 호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연수는 5회의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연수와 1회의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로 구성되었으며, 총 106명의 연수참여자를 대상으로 국외 인프라 개발경험 및 해외건설 정책 공유, 비즈미팅, 주요 인프라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 참여자를 고려하여, 인프라 전반에 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도로, 철도, 공항, 교통, 신도시, 수자원, 주택,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포괄



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주요 인프라 현장(예: 마포자원회수시설, 수자원공사, 고속도로 교통센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방문 비중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인프라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하도록 유도하였고, 개회식 또는 비즈미팅 시 건설 인프

라 분야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에 관심 있는 고위인사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였다.

구분	기간	참석자	참석국가
제1차 고위공무원 연수	4.28(월)~5.2(금)	12	인도, 콜롬비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필리핀, 쿠웨이트 (총 7개국)
제2차 고위공무원 연수	5.26(월)~5.30(금)	8	남수단, 라오스, 에콰도르, 이집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총 8개국)
제3차 고위공무원 연수	6.16(월)~6.20(금)	10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 코트디부아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총 7개국)
제4차 고위공무원 연수	10.13(월)~10.17(금)	19	러시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앙골라, 카자흐스탄, 케냐, 태국, 필리핀, 이집트, 중국 (총 11개국)
제5차 고위공무원 연수	11.10(월)~11.14(금)	33	인도네시아, 우간다, 미얀마, 케냐,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네팔,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모잠비크, 앙골라, 필리핀, 칠레 (총 15개국)
주한공관원 연수	9.2(화)~9.4(목)	27	인도네시아, 네팔, 리비아, 캄보디아, 미얀마, 가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페루, 인도, 이집트, 르완다, 방글라데시 (총 21개국)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 연수 실시

국토연구원은 2014년 8월 25일(월)부터 9월 5일(금)까지 2주간 글로벌 공간정보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한국기업의 해외 공간정보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자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지리정보 정책 관련 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GIS 구축경험, 기술, 지식 등을 공유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연수참가자로 하여금 공간정보정책 및 법제도 안내,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 인력양성 방안 소개, 공공부문 공간정보화 사례(KLIS, KOPSS, LULIS, UPIS, U-city) 소개를 통해 한국의 공간정보관련 사례를 이해하고 향후 자국에서 필요한 공간정보관련 미래수요를 발굴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대한지적공사 등 공간정보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스마트 국토엑스포를 견학함으로써 한국의 공간정보 활용현황 및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였고, 한국의 선



진화된 토지정보관리 및 활용을 경험함으로써 한국의 공간정보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체험을 통한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도시계획 지원체계 구축사업, IOCC 연계의 친환경적 그린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발굴, 관련기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여국가별 한국의 스마트 도시 인프라 개발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액션플랜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연수사업을 진행하였다.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ADB) 지방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국토연구원은 2014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MOU 체결의 일환으로 11월 24일(월)~28일(금), 총 5일간 인도, 파키스탄, 몽골,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네팔, 스리랑카 등 7개국 8명의 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도시개발, 도시교통, 방재, 수자원처리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 지방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연수생의 관심사와 수요를 반영하여 강의, 현장견학, 한국문화체험으로 구성하고 보다 균형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강의의 경우 한국의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그린인프라, 도시입업, 수자원관리, 고형폐기물 처리, 도보인프라, 스마트시티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안양시청 U-City 종합상황실, 토지주택공사 The Green, 강남 자원회수시설, 중랑 물재생센터, 시화조력발전소 등 관련 현장견학, 동대문,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방문을 통한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 연수자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고 참여국과 한국 간의 네트워킹 강화에 기여하는 발판이 되었다.

본 연수사업을 기반으로 KRIHS-ADB는 다년도 초청연수를 계획 중이다.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도시개발 및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국토연구원은 세계은행 남아시아본부와 2014년 5월부터 Korea Trust Fund 활용 사업인 'Korea-WB Partnership Facility: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ilot Initiative'에 참여를 요청 받고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3개국 대상 초청연수를 기획하였다. 8월에는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연례워크숍을 통해 부탄에 대한 별도 연수 진행을 확정하고, 연수 전 부탄 연수생의 관심사와 수요를 반영하여 강의, 현장방문, 한국의 문화체험 등을 기획하였다.



연수는 11월 26일(수)~12월 2일(화) 5일간 진행되었으며, 부탄 공무원 12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역개발, 도시교통, 그린인프라, 도시임업, 수자원관리, 고품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강의와 강남 자원회수시설, 중랑 물재생센터 등의 관련 현장견학을 진행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의 SAR 사업과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국-세계은행-부탄 간의 개발협력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초청연수에서는 불교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부탄을 고려하여 설악산 신흥사, 속초 낙산사, 창덕궁 등 한국의 불교문화 보존과 세계문화유산 관리를 견학하기 위한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한국의 문화재 관리방안을 부탄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연수자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고 우리나라와의 네트워킹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되었다.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초청연수 실시

국토연구원은 2014년 10월 미주개발은행(IDB)과의 3개년도 공동연수를 수행하기로 최종 합의한 결과, 한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개발경험의 중남미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1차연도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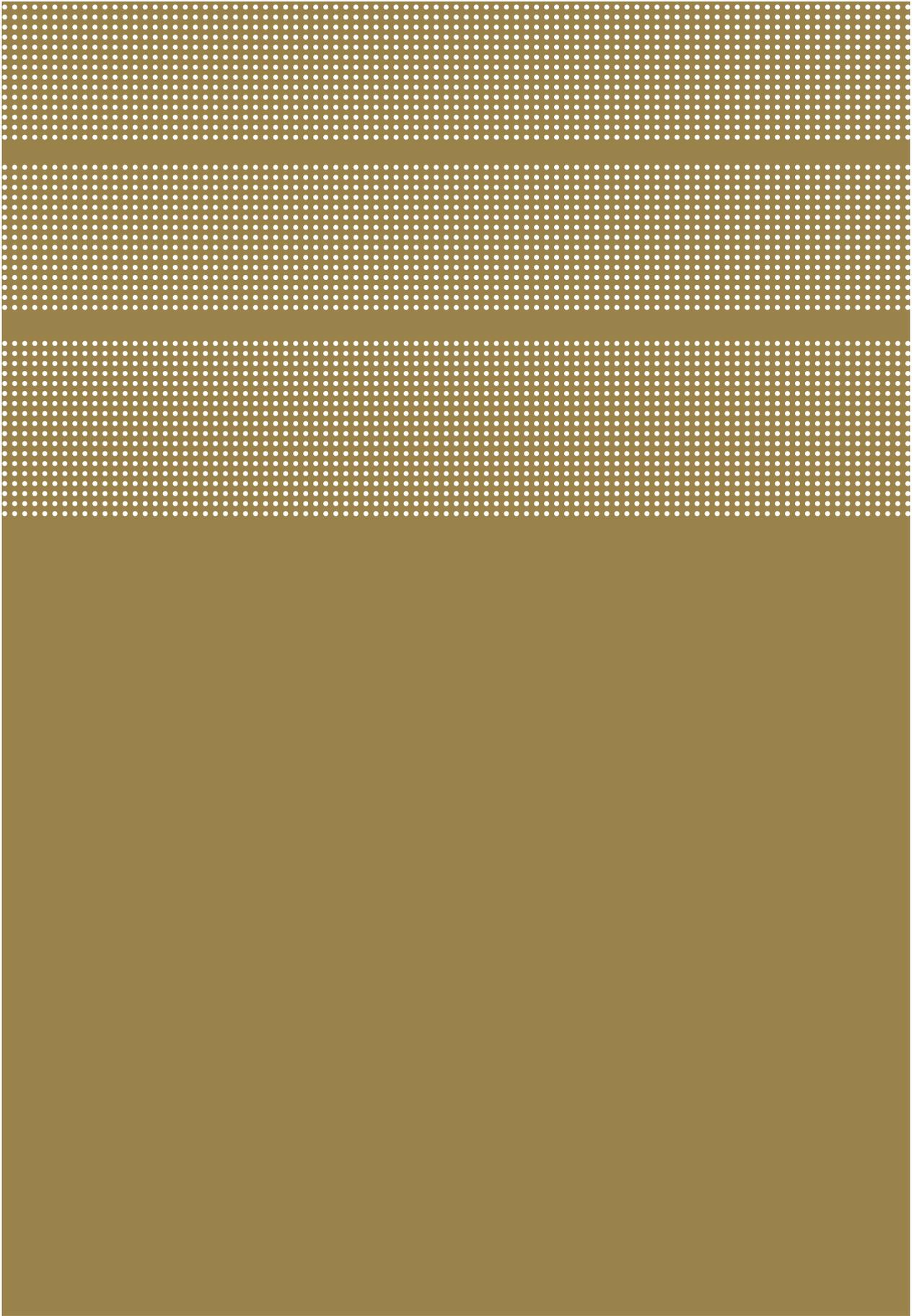
KIUDA 1차연도의 경우 2014년 12월 9일(화)~12일(금) 총 4일간 진행되었으며 연수자는 중남미 9개국 및 IDB 참가자 총 16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사안으로는 한국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신도시, 토지개발, GIS, 도시교통, 방재, 수자원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세미나와 위례 신도시 홍보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종합정보센터, 인천 콤팩트시티 홍보관, 강남 자원회수시설 등 관련 현장견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12월 9일(화) 개최식은 김경환 전 국토연구원장의 환영사, IDB Principal Specialist인 Leon Javier와 연수단 대표 우루과이 Carlos Mendive 교수의 답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



원의 국토연구원 및 센터 소개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국토개발에 있어 국토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였다.

이번 연수는 강의 외에도 연수 참여자와 한-중남미 개발을 모색하고자 공동연구주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강의, 현장견학, 연구주제 논의 등 보다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RESEARCH

AND

EDUCATION

Chapter

IV

연구지원활동

1. 연구지원활동	110
2. 연구 관련 주요 행사 · 교육	117

1. 연구지원활동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도쿄대학교 도시안전국제연구센터 MOU 체결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NUDPRC)는 지난 2014년 2월 5일(수) 도쿄대학교에서 도시안전국제연구센터(ICUS)와의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효과적인 교류활동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 협의 및 MOU 실무 회의에서 심우배 전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과 메구로 기미로 도쿄대학교 도시안전국제연구센터장은 각각 NUDPRC와 ICUS의 설립배경, 연혁, 조직구

성, 주요 연구 분야 등을 설명하고, 자국의 주요 도시 방재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일본의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향후 개최할 공동세미나의 주제, 시기, 인원구성, 진행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메구로 기미로 도쿄대학교 도시안전국제연구센터장, 김재호 연구원, 카토우 타카아키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3년 연구성과 발표회,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생활·안전·미래국토'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생활·안전·미래국토 세미나'를 2014년 4월 8일(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이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행복과 국토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 '미래 국토비전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고, 국토연구원 연구진들이 각 주제별 발표자로 나서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 방향, 재해와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로정책 방향, 기후변화 및 재해에 안전한 도시구현 방안,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의 관련 전문가들이 활발한 토론을 진행, 국민행복과 국토발전에 관한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였다.

제1세션(좌장: 오동훈 한국주택학회장)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활국토'에 대해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발표: 전성제 책임연구원),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방향(발표: 조관기 연구위원),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발표: 김태환 도시연구본부장), ▲생활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발표: 김대중 연구위원) 등 네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김기혁 대한교통학회장이 좌장으로 나선 제2세션에서는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국토'와 관련해 ▲기후변화 및 재해에 안전한 도시구현 방안(발표: 이병재 책임연구원),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발표: 김걸 한국교원대 교수), ▲재해와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로정책 방향(발표: 김준기 책임연구원),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발표: 허수정 책임연구원) 등의 논의가 있었다.

미래지향적인 국토경영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제3세션(좌장: 손일 대한지리학회장)에서는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전략(발표: 이용우 국토계획·지역연구

본부장), ▲문화지향적 국토관리의 과제와 추진전략(발표: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 ▲지속가능한 국토 창출을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융합방안(발표: 박종순 책임연구원),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략(발표: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등의 내용으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카자흐스탄 국토정보인력양성 교류협력을 위한 4자 간 MOU 체결

지난 2014년 4월 28일(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포럼’에서 국토연구원과 카자흐스탄 국가정보기술공사, 유라시안국립대학, 농업과학기술대학은 카자흐스탄의 국토정보인력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카자흐스탄 국가정보기술공사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토정보인프라(National GIS)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는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구축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컨설팅 결과, 카자흐스탄 국토정보화의 성공을 위하여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는 데 양국 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학계와 협력하여 국토정보화를 이끌 인력을 양성하고자 협력양해



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MOU 체결 이후 카자흐스탄 농업과학기술대학은 국토연구원에 초청 특강 및 강수를 요청하였다.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 녹색도시화 워크숍 및 MOU 체결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014년 5월 13일(화)과 14일(수)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녹색도시 지역컨퍼런스(Regional Conference on “Enabling GrEEEn Cities: a Sustainable Urban Future in Southeast Asia”)’에 참가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문제해결을 위해 ADB 도시사업계획 2020을 마련하였는데, 이번 ‘녹색도시 지역컨퍼런스’는 ADB 도시사업계획 2020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시개발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제2도시

군(Secondary Cities) 개발사례를 공유하고 민간기업과의 투자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멜라카 말레이시아 주장관, 마리카나 필리핀 시장, 휴(Hue) 베트남 지방위원회 의장, 미얀마 건설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위인사를 비롯해 에이콤(AECOM), 지멘스 등의 사기업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가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왕광익 연구위원이 도시관리 파트너십(Urban Management Partnerships) 세션에서 한국의 저탄소 계획시스템에 대한 주제로 한국의 녹색도시

계획 시스템 및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환 전 국토연구원장이 폐막세션 패널로 초청되어, 향후 통합 도시 및 녹색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녹색도시 지역컨퍼런스’ 폐막 직후 국토연구원은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와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양 기관의 양해각서는 지역-도시개발 관련 지식 공유, 역량개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수행, 인력 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체결식 이후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의 B. Lohani 부총재, 김길홍 국장 등과 간담회 시간을 마련하여 양 기관 간 3년 협력 어젠다를 마련하고 공동 사업 및 활동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정책기여과제 포상식 실시

국토연구원은 연구원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매년 우수보고서 및 정책기여과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7일(월)에 열린 3분기 전 직원 조회를 통해, 2013년도에 수행이 완료된 약 140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1개의 최우수 기본과제를 비롯하여 총 14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최우수 기본과제로는 배순석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및 부담기준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가 선정되었으며, 강호계 연구위원의 ‘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연구’, 이백진 연구위원과 윤서연 책임연구원이 공동수행한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I)’ 등이 우수 기본과제로 선정되었다.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 수립



을 위한 기초 연구’ 등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한 10개의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그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하였다.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 개최

국토연구원이 주최·주관한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가 2014년 7월 22일(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2011년 3월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개발청,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표, 언론, 학계 전문가 등 2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김경환 전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류승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온영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환용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손재권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장병권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김진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김선태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 오택림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실시

국토연구원에서는 2014년 9월 1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제2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국토상 만들기를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701편의 우수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2

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12편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금강과 한반도 지형’을 출품한 유지훈 씨가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에는 ‘설경’을 출품한 김경환 씨와 ‘낙안 민속촌’을 출품한 반선순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2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수상자

수상내역	수상자	작품명	장소
대상	유지훈	금강과 한반도 지형	충북 영동군 황간면
최우수상	김경환	설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양떼목장
	반선순	낙안 민속촌	전남 순천시
우수상	김기훈	가을동화	전남 장성군 백양사
	박정미	아름다운 섬 소매물도	경남 통영시 소매물도
	허종원	도담삼봉의 겨울일출	충북 단양군 매포음
장려상	강무호	어울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강석화	방화수류정의 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김정숙	동대문역사박물관 야경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박물관
	최정철	동양의 나폴리 통영	경남 통영시 미륵산
	홍성환	새만금	전남 부안군 변산면
	elliott klinger	보성 녹차밭	전남 보성군

제19회 전국 초등학교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제19회 전국 초등학교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이 2014년 11월 22일(토)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주 원장, 이용우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등과 소년한국일보의 문현석 사장, 선성인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시상식에서는 김인우 충주 용산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국토교통부장관상인 개인대상을 수상하였다. 김인우 어린이는 ‘할머니 웃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뇨병을 앓는 할머니와 함께 충주의 자랑인 ‘비내길’을 걷는 손자의 가슴속 이야기를 코스모스 핀 가을길의 정취와 함께 잘 표현하여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도교사 대상 수상자로는 글쓰기를 통해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해온 신은영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교사가 선정되었다. 이 외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총 357명의 학생이 입상하였으며, 단체상으로는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서울 소의초등학교, 창원 안민초등학교, 서울 예일초등학교, 마산 신월초등학



교, 군산 소룡초등학교, 충주 용산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선정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미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국토의 가치를 알리고자 1996년부터 매년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7,490명의 어린이가 응모하였다.

국토연구원-서울시립대-서울연구원 3자 간 MOU 협약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4년 11월 28일(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도시과학 융복합 연구 대토론회’에서 이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김수현 서울연구원장과 함께 융복합 도시연구 협력을 위한 연구교류협정서(MOU)를 체결하였다. 도시 관련 융복합 공동연구 수행, 학술 및 연구인력 교류, 정보공유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공동세미나 개최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MOU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신해 서울연구원 실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정환 전 국토연구원장,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정병윤 국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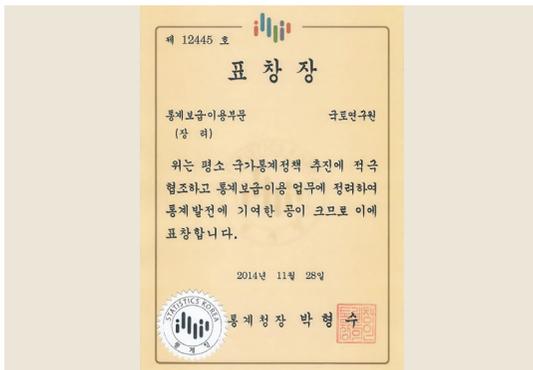
교통부 실장, 류경기 서울특별시 실장, 최근희 서울시립대학교 학장 등이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융복합 연구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통계보급·이용부문 장려상 수상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014년 11월 28일(금) 통계청 주최 '2014년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2014년 통계 개발·개선 및 보급·이용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3개 부문별(개발·개선, 보급·이용, 지역통계) 총 17개 기관의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발표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였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시장참여자의 행태변화

패턴과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 매일 생산하고 있다. 동 지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및 정책수립, 관련 연구수행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매월), 통계청 KOSIS(매월), 보도자료(분기), 계간지인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등을 통해 구득이 가능하다.



국토연구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 12월 18일(수) 서울시 대학로 카페 장(張)에서 양 기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김태환 도시연구본부장, 박세훈 연구위원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한신 예술진흥본부장, 황진수 공공미술T/F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부터 '지역재생+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가도시재생사업을 연구 및 지원하고 있는 국토연구원과 향후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분야의 연구·정책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4년 12월 29일(월) 국토연구원 3층 소회의실에서 제1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 3편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제도로써, 국토정책에 활용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이 기준이 된다.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논문과 수상자는 ▲최우수상: 기업 입지유형 및 규모가 신생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신혜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학부 지역정보전공 박사과정, 김의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학부 교수 및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무연구원), ▲우수상: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지구정책 거버넌스 연구: 부산광역시 또따또가를 사례로(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주유민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리관유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 ▲장려상: 조선시대 서울 경관명소 분포와 인식의 비교 연구: 팔경시, 진경산수화, 풍속지를 중심으로(박수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교수, 이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박사과정 수료)이다.

2. 연구 관련 주요 행사 · 교육

1 워크숍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K-2 공공기지 이전방안 연구 관계 기관 워크숍	1.8	대구시청	K-2 공공기지 이전부지 도입가능 및 활용방안, 토지이용계획(안) 논의
국토연구원 · 대구경북연구원 주최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 연구 시민워크숍(1~2차)	1.10(1차) 1.24(2차)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2차)	대구시 발전방향 설정 및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 모색(1차),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 모색(2차)
중전부동산 활용계획(2) 워크숍	1.20	7층 회의실	국방대학교 중전부동산 활용계획 관련기관 워크숍
KSP-IDB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시 통합관제센터 설립지원 최종 워크숍	1.20~26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시	통합관제센터 설립지원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 및 지식 공유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 도시 기술 개발(3차년도) 연구진 합동워크숍(1차), 합동워크숍(2~3차)	1.20(1차) 3.28(2차) 4.29(3차)	블루문테(1차) 서울연구원(2차) 10층 중회의실(3차)	기관별 3차년도 중간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1차), 기관별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2~3차)
상시 국토종합계획체제를 위한 DB 구축 및 운영방안 워크숍(1,3차), 지식정보 공동워크숍(2,4차)	1.22(1차) 5.13(2차) 6.9~10(3차) 6.13(4차)	토즈 양재점(1차) 3층 소회의실(2, 4차) 호텔 에버리치(3차)	연구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1차), 공간정보지식플랫폼의 공동 구축방안 논의(2, 4차), 과제 진행을 위한 업무 협의 및 토론(3차)
도로관계관 워크숍	1.22	국토교통부	2014년 도로사업 재정집행 및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 논의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구 연구진 워크숍	2.4	7층 회의실	부문별 사업 추진방안 논의
공간정보기술 통합플랫폼 개발 워크숍	2.13	강당	연구 · 교육용 공간정보기술 통합플랫폼 개발방법 및 결과물 심층 분석, 개선사항 및 향후 발전방안 도출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상반기 워크숍	2.18~19	곤지암리조트	2014년 추진사업별 실적점검 및 운영방향 설정
2014년 제1차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워크숍	2.20~21	웅인 소나무숲펜션	개인별 브랜드 발표 및 부분 방향성 정립
서민주택개발정책 톨킷 개발 우간다 현지 최종워크숍(1차), 필리핀 현지 최종워크숍(2차)	2.24(1차) 3.3(2차)	우간다 Jinja Nile Resort(1차) 필리핀 Malabon City Hall(2차)	우간다 서민주택개발 케이스 스터디 결과 발표(1차), 필리핀 서민주택개발 케이스 스터디 결과 발표(2차)
국토관리 · 도시연구본부 상반기 워크숍	2.24~25	평창현대빌리지	본부 연구방향 및 연구그룹별 상세 연구계획 논의, 독서발표회
국토계획연구본부 상반기 워크숍	2.26~27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2014년 본부 운영방향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효율적 연구 수행방안 등 논의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세부 합동워크숍	2.27	3층 중회의실	연구방향 및 기관 간 연구내용 협의
2013년도 주거실태조사 워크숍 (1차), 원내 워크숍(2차)	2.28(1차) 5.9(2차)	엘타워(1차), 9층 회의실(2차)	2013년도 주거실태조사 사업개요, 표본설계, 실사 보고, 통계 처리, 조사결과 발표 및 논의 안건 제시와 토론(1차), 주요 결과점검 및 전문가 자문(2차)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셀랑고르(Selangor)주 기술시찰단 방원기념 워크숍	3.4	4층 ECOLE	한-말레이시아 간 주택정책과 개발현황 공유 및 향후 국제협력 방안 논의
방글라데시 국토지리원장 내원 환영 워크숍	3.27	4층 ECOLE	우리나라의 NSDI 추진성과 및 양국 간 글로벌 협력방안 발표·토론
출판·홍보팀 2014년도 운영방안 및 2015년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	4.2	파주 지지향	2014년도 사업운영 및 일상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2015년 사업 추진계획 논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워크숍	4.5	3층 중회의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관련 논의
2015년 기본과제 발굴을 위한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워크숍	4.7	7층 회의실	기본과제 제안서 초안에 대한 토의 및 수시과제 수행방안 논의
2014년 주택·토지연구본부 워크숍	4.9~10	한화리조트 대전 파로스	2014년 본부 운영방향 및 목표, 장기적인 본부 경쟁력 및 역량 강화, 구성원 역량 및 조직 결속력 강화, 기타 본부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
2014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1차),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 워크숍(2차)	4.16(1차) 5.26~27(2차)	KT인재개발원(1차), 안양 블루몬테(2차)	국가공간정보정책 방향 및 최신 공간정보기술 동향 교육(1차), 2013년도 중앙부처 공간정보사업 사후평가 및 우수사업 선정, 2015년도 중앙부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총괄조정 실시(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연구 워크숍	4.30	강남역 토즈	과업 추진 체계 등 착수보고 준비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ADB) 주최 녹색도시화 워크숍	5.13~14	필리핀 ADB 본부	한국의 저탄소 녹색도시 사례 및 아시아지역 녹색도시 개발사례 지식 공유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 연구 실무워크숍(1~2차)	5.13~14(1차) 6.17~18(2차)	3층 중회의실(1~2차)	새만금MP 변경 소관과제, 경험특구 조성방안 실무 협의(1차), 새만금MP 과제별 변경방안, 경험특구 조성방안,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방안 등 실무진 협의(2차)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워크숍(1차), 참여기관 합동워크숍(2차)	5.14~16(1차) 9.23~24(2차)	제주대(1차) 곤지암리조트(2차)	R&D과제 관련 논의(1차), 1차년도 진행상황 검토 및 2차년도 연구방향 논의(2차)
중국 국토자원과 대표단 방원 워크숍	5.20	4층 ECOLE	한중 양국의 국제교류를 위한 국토 관리 및 정책 현황 지식 공유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산업체계 개편방안 연구 제1차 워크숍	5.30	3층 중회의실	부동산산업의 현황과 특성, 시장 규모와 일자리 규모, 향후 발전과제 등 논의
조지워싱턴대·국토연구원 주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워크숍	6.5	4층 ECOLE	한국의 지속가능한 도시 사례 발표 및 토론
인도 뭄바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진 워크숍(1~2차)	6.10(1차) 9.23(2차)	4층 ECOLE(1~2차)	현재 초빙 중인 인도 현지 전문가와의 연구자료 정보 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1차), 현지 중간보고자료 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2차)
스웨덴 지역개발대표단과의 워크숍	6.17	4층 ECOLE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및 지역개발 관련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례 공유
에티오피아 고위공무원 도시개발정책 워크숍	6.25	4층 ECOLE	에티오피아 국가발전전략을 위한 에티오피아 정책연구소(Policy Study and Research Centre) 방원, 한국의 국토 및 도시 정책간담회 및 협력방안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 특성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숍	7.4~6	제주KAL호텔	주제 1: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주제 2: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주제 3: 중국 환발해지역의 산업발전 특성, 주제4: 중국 환발해지역의 도시와 산업업지와의 관계
한국국제협력단 주최 볼리비아 경제개발정책 과정 워크숍	7.10	4층 ECOLE	볼리비아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의 개발전략 경험과 지식 공유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개선방안 연구 워크숍(1~2차)	7.14(1차) 10.17(2차)	경수고속도로(1~2차)	기존 운영평가 분석 결과 논의 및 민자도로 운영사 의견 수렴(1차), 운영평가 개선안 발표 및 의견 수렴(2차)
국토 라이프라인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용역 제1차 워크숍	7.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착수보고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연구방향 등 논의
2014년도 하반기 본부장 워크숍	7.16	과천 로고스센터	본부별 상반기 업무보고 및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논의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방안 연구 미래 국토발전 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실무단 워크숍	7.1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추진 시책과 미래 국토발전 전략 간 정합성 및 향후 대응전략 논의, 일본의 국토그랜드 디자인 2050 추진 동향 소개 등 논의
U-City 고도화 R&D 세부과제 워크숍	7.31~8.1	곤지암리조트	R&D과제 진행상황 검토 및 추진계획 업무협의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 컨설팅 사업 합동워크숍	8.5	강남 토즈타워점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진행사항 논의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워크숍(1,3차), 연구진 워크숍(2차)	8.5(1차) 10.2(2차) 11.11(3차)	6층 회의실(1~2차) 블루몬테(3차)	남북한 관련 제도의 비교분석방향 논의(1차), 분야별 남북법제의 현황 및 특징 비교(2차), 분야별 남북한 법제 비교 및 제도통합 방안 논의(3차)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워크숍	8.8	9층 회의실	패널문항 작성 논의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워크숍(1차), 내부 연구진 워크숍(2차)	8.13(1차) 12.2(2차)	10층 소회의실(1~2차)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개선안 및 국토계획평가제도 역할정립 방안 논의(1차),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및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논의(2차)
국토연구원-세계은행 2014년 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제2차 공동워크숍	8.14	4층 ECOLE	녹색도시, 교통 및 토지 관련 발표 및 공동협력사업 참여 가능성 논의
상시 국토종합계획체제를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시범 구축 설계 워크숍	8.18~19	골드웨미리콘도	플랫폼 개발 전반 및 통합 DB구축 전반에 관한 시스템 설계 진행
유라시아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워크숍	8.21~22	한화리조트 용인	한반도 단일 간선도로망 구축방안 논의
방글라데시 공무원 초청 국토개발정책 워크숍	8.28	9층 회의실	한국의 국토계획 및 정책, 인프라 공급정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택개발정책 논의
2014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사업 도로 부문 워크숍	8.29	8층 회의실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사업 연구부문 중 도로대상 번호 부여를 위한 논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워크숍	9.1	9층 회의실	지능지도 구축방법에 관한 논의
북한 국토 분야 제도실태 워크숍	9.16	6층 회의실	북한의 관련 제도와 특징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국토연구원·베트남 건설부 주최 글로벌개발협력포럼 베트남 워크숍: 2014 KRIHS-MOC Vietnam Construction Law 2014 and Other Regulations in Relation to Foreign Investment in Construction	9.16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베트남건설부 산하기관인 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AMC)와의 MOU 후속조치 이행 및 AMC와 포럼회원 간 국제교류 강화
인도네시아 공공개발부 공무원 방한 워크숍	9.18	4층 ECOLE	한국의 국토·지역·도시개발 정책 및 토지개발 경험·사례 공유
인도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방원 워크숍	9.22	4층 ECOLE	한국의 도시계획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관련 경험사례 공유
코트디부아르 국립기술연구개발원장 방한 워크숍	9.26	4층 ECOLE	코트디부아르에 적용 가능한 한국 개발모델 및 프로젝트 사업 콘텐츠 공유
부산대 주최 R&D과제-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참여기관 합동워크숍(1차),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참여기관 합동워크숍(2차), 참여연구기관 합동워크숍(3차)	10.1~2(1차) 10.29(2차) 12.15(3차)	씨클라우드호텔(1차) 토즈 종로점(2차) 안양 민들레영도(3차)	연구단 운영방안 및 SW개발에 관한 공동이슈 논의, 초청강의(오픈소스 SW개발 방법과 사례), 9개 부문 세부과제별 상세 연구내용의 전 연구진 공유, 연구성과에 대한 각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안)과 연구단 대표성과(안) 등 논의(1차), 연구단 전체 아키텍처 설계검토 및 세부과제 간 연계내용 검토, 세부과제별 상세 연구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2차), 연구단 세부과제별 상세 연구내용 검토 및 1차 평가 보고서 방향 및 성과물 관련 논의(3차)
2014 토지구제이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교육워크숍	10.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 업무담당자 시스템 교육 및 의견청취
2014년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 공간정보 인증제도 마련 워크숍	10.8	10층 소회의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인증제도(안) 검토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주최 Meico-Korea Knowledge Exchange Study Tour 워크숍	10.14	4층 ECOLE	도시재개발, 토지사용, 저소득층 주택정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한국 개발경험 공유 및 현장방문을 통한 관계자 면담
한반도 공동발전을 위한 인프라회랑과 동부연안 프로젝트 추진전략 및 개발효과 공동연구진 워크숍(1차), 연구용역 공동연구진 협동워크숍(2차)	10.14(1차) 11.19~20(2차)	NH 오리사옥(1차) 천안 상록리조트(2차)	북한지역 거점개발의 잠재력 평가(1차),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및 인구추정 방법론 논의(2차)
국토연구원-에과도르 키토시(市) 국제교류 협력 강화 워크숍	10.17	4층 ECOLE	키토시 도시교통, 산업단지 개발 및 KSP사업, 초청연수 연계 관련 논의
국토연구원·세계은행주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TOD) 교통을 활용한 복합 개발 관련 법·제도·사례 워크숍	10.22	4층 ECOLE	TOD 대중교통 이용에 역점을 둔 도시개발 사례, 법, 제도에 관한 강의 및 논의
국토연구원·베트남 주최 한국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개발 정책 워크숍	10.23	4층 ECOLE	한국의 대도시(서울, 부산) 개발 과정을 통한 베트남 대도시(하노이, 호치민)에의 적용방안 논의
제2차 국토연구원-DB 공동워크숍	10.27	IDB 워싱턴본부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메가시티에서의 토지 및 주택 관리정책, 스마트 시티에 관한 발표 및 토론
제3차 국토연구원-WB 정례워크숍 및 협력성과 워크숍	10.28	WB 워싱턴본부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메가시티에서의 토지 및 주택 관리정책, 도시재생에 관한 발표 및 토론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공간정보 관련 7개국 고위급인사 내 원기념 워크숍	10.28	4층 ECOLE	한국의 NSDI 추진현황 및 KSP 정책자문회 사업 소개
기본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10.30	3층 중회의실	업무기반의 기본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간 연계 및 상호협력 방안 논의
통일독일 전문가 초청 제2차 워크숍	10.30	6층 회의실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발전 사례와 시사점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 도시 기술 개발(4차년도) 합동 워 크숍(1차), 워크숍(2차), 합동 워 크숍(3차)	11.5(1차) 12.3(2차) 12.30(3차)	토즈 종로점(1, 3차) 10층 중회의실(2차)	4차년도 연구진행 사항 논의(1차), 연구진행 상황 발표 및 향후 연구방향 자문(2차), 연구기관별 연구진행 상황 보고 및 점검 보완방향 논의(3차)
국토교통부 통일 관련 사업계획 수 립 전문가 워크숍(1~2차)	11.5(1~2차)	6층 회의실(1~2차)	국토분야 주요과제 논의(1차), 각 기관별 역할분담 논 의(2차)
2030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T/ F팀 워크숍	11.6~7	강화군청	T/F팀별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사업 및 정책 반영 후 추 진 중인 시설, 지역 등 현장조사
한-미얀마 한국의 국토개발정책 워크숍	11.11	4층 ECOLE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관련 한국의국 토개발 경험 공유
WB와의 국토 및 지역개발 워크숍	11.13	4층 ECOLE	국토 및 지역개발, 인프라 발전 현황에 관한 지식 공유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 합동워크숍	11.13~14	제주 에코그린리조트	국토위성센터 기본구상(안) 검토, 주요 활용분야 및 기술 검토, 장비 설계 관련 이슈 논의
한-캐나다 지역개발 워크숍	11.14	4층 ECOLE	서울·수도권 개발 관련 워크숍 및 서울역사박물관, 청 계천 등 현장 견학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워크숍	11.17	엘타워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1차 결과 집계 및 2015년도 특 수조사 논의
국토연구원-중국 국토자원부 토지 수용, 보상 및 제도 워크숍	11.20	3층 중회의실	한국의 토지수용 과정, 토지보상 관련 제도, 분쟁 해결 체계, 토지가치 증대 및 분배제도와 토지세제 등에 대 한 지식 공유
2014년도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 리 워크숍	11.27~28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	산업입지 정책 소개, 산업입지정보망을 통한 정보관리 및 지역 산업단지 답사
공간지식플랫폼 유관시스템 연계 및 차년도 과제 추진 워크숍	12.3~4	제주 베레브호텔	공간지식플랫폼에서 KOPSS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연 계·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향후 일정 논의
국토연구원-일본 건설경제연구소 주최 제23차 한일건설경제 워크숍	12.3~5	세종호텔	일본 건설경제연구소와 양국의 건설경제 현안 및 정책 방안 공유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 표 개발연구 워크숍	12.12	10층 소회의실	연구성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및 최종보고서 보완 작업
국토연구원-인도네시아 재정부 공 무원 초청 국토개발정책 워크숍	12.12	4층 ECOLE	한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 정책 경험 공유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실증연구 도시재생 R&D 제1회 전체 워크숍	12.12~13	NH공사 속초연수원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 관련 각 세부별 발표 및 토론, 연구 진행상황 공유 및 조 율, 성과물 도출을 위한 회의
기존도시의 U-City고도화방 안연구 (2차년도) 2세부 워크숍	12.22~23	인천시청	2차년도 연구내용 검토 및 향후 연구방향 협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2014년 기본과제 결산과 2015년 기본과제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워크숍	12.23	뜰안채2	2014년 기본·수시연구과제 정책대안 토론 및 2015년 기본연구과제 연구진 편성을 위한 연구책임자 발표
한-몽골 토지법 및 토지활용정책 워크숍	12.26	4층 ECOLE	한국의 토지개발에 기반한 경제개발경험 관련 지식 공유
2014년 사업결산 및 2015년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12.30	4층 ECOLE	팀별 결산 보고, 전체 평가 및 2015년 사업계획(안) 보고, 토론

2 세미나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부동산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	1.15	강당	부동산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논의
공간정보포럼 세미나	1.16(1차) 2.20(2차) 4.17(3차) 6.19(4차) 10.17(5차) 11.19(6차)	3층 중회의실(1~5차) 강당(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정부3.0과 일자리 창출(1차),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방향(2차), BIM on GIS, Geospatial BIM(3차), 지도와 Info-Graphics의 만남(4차), 파워블로거에게 듣는 공간정보 미래(5차), 2015년 공간정보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6차)
도시재생공론화 정책세미나	1.23~24	한화리조트 경주	국가 및 지자체 도시재생 정책 공유 및 연구원 간 네트워크 구축
교통사고 예측 분석 기법 세미나	1.28	8층 회의실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 교통사고 예측 분석 기법 논의
임대차 수요패턴 분석 & 융합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 세미나	2.4	10층 중회의실	융복합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유 및 융복합 연구 모델 논의
TR808 세미나	2.11(49차) 4.15(51차) 7.8(52차) 7.22(53차) 10.23(54차) 12.17(56차)	8층 회의실(49~56차)	SKT 빅데이터구조 및 활용사례(49차), The New Transportation Planning Paradigm(51차), 미국 캘리포니아 도로 현황 및 관리 전략(52차), 미국 캘리포니아 전기자동차 활성화 전략(53차), 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54차), ITS 발전 및 자율주행 실용화 전망(56차)
빅데이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하둡 및 공간하둡 공개세미나	2.12	10층 중회의실	하둡, 공간하둡 및 크롤링 프로그램 관련 설치 및 특강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전문가 세미나(1~2차), 해외 전문가 세미나(3~4차), 국제세미나(5차)	2.13(1차) 2.19(2차) 6.5(3차) 7.10(4차) 7.29(5차)	8층 회의실(1~2, 4차) 3층 소회의실(3차) 10층 중회의실(5차)	교통사고 위험구간 선정 기법에 대한 논의-Continuous Risk Profile을 중심으로(1차), 주민참여형 교통안전성 향상방안에 대한 논의(2차), Macro-Level Safety Modeling(3차),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통안전 사업(4차), 도로 교통사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OECD 수준의 도로교통안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안전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논의(5차)
한국의 통화정책과 주택시장에 대한 실증 분석 세미나	3.25	8층 회의실	연구 관련 논문 발표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인프라21 세미나	3.25(78차) 7.17(79차) 7.25(80차) 11.17(81차) 12.18(82차) 12.19(83차)	8층 회의실 (78~83차)	교통정책의 방향-과제와 전망(78차), Development of Virginia's HSIP Using Safety Performance Functions (79차),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정책방안(80차), 도로안전 개선 사업의 재정투자 지속효과(81차), Recent Advances in Activity-based Travel Demand Models(82차), Modeling Highway Safety and Simulation in Rainy Weather(83차)
한국개발연구원·국토연구원 주최 2013~2014 북한·통일 분야 연구 성과 공동 세미나	4.4	한국개발연구원	북한·통일 경제, 인프라 분야 2013년 연구성과 발표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
4.1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	4.4	10층 중회의실	부동산 정책발표 이후 시장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논의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세미나	4.8	aT센터	주제1: 미래 국토비전과 실천전략, 주제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활국토(여건변화에 대응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방향,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생활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주제3: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국토(기후변화 및 재해에 안전한 도시구현방안,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도시 구축방안, 재해와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로정책방향, 지역회복력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정책방향), 주제4: 미래지향적 국토경영(미래국토 전망과 대응전략, 문화지향적 국토관리의 과제와 추진전략, 지속가능한 국토창출을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융합방안,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프로젝트 추진전략)
인도 뭉바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연구진 세미나	4.9	10층 중회의실	과제 관련 현황 및 제도, 기존계획 분석 및 외부 전문가 초청 자문
도시재생 세미나	4.17	3층 중회의실	네덜란드의 도시재생과 공간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역할
2014 한반도포럼 세미나	4.25(1차) 7.2(2차) 9.22(3차) 12.12(4차)	10층 중회의실 (1~4차)	최근 평양의 도시개발 동향(1차), 북한 도시연구를 위한 향후 과제, 북한 회령시의 시장화 분석(2차), 최근의 북한 동향과 통일대비 과제(3차), 남북경협의 향후과제(4차)
일본국토교통성 산하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국토연구원 합동 국제 세미나	5.27	일본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NILIM)	국토연구원과 국토정책종합연구소 간 연간 정례 세미나, 한국 발표주제: 한국의 도시재생 정책방향,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인프라 정책방향, 한국의 교통 관련 계획 및 광역기반 정비현황, 일본 발표주제: 일본의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에 관한 최근 전략과 과제, 시가지 환경성능에 근거한 건축기준법의 형태규제 운용에 관한 연구, 일본의 광역교통 기반에 관한 정보 제공
2014 국토연구원-펜실베이니아대학 도시연구소 세미나	7.10	4층 ECOLE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형성에 대한 논의
지역발전 시책으로 인한 인구·산업의 이동 및 파급효과 분석 지역발전 분석모형 세미나	7.16(1차) 7.25(2차) 8.6(3차)	7층 회의실(1차) 6층 회의실(2~3차)	Lowry모형의 적용사례 및 지역발전 시책의 파급효과분석에 대한 적용방안 검토(1차), 신도시 건설이 지역경제 및 인구이동에 미치는 효과-위계선형모형 적용 사례(2차), 국가·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 추정모형 사례 및 적용방안 검토(3차)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최 2014 남북협력사업 발전연구회 세미나	7.24(1차) 11.24(4차)	3층 중회의실 (1, 4차)	국토 분야 통일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1차), 국토 분야의 통일연구 성과(4차)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1~2차)	8.8(1차) 12.12(2차)	4층 ECOLE (1~2차)	도시방재력 및 그린 인프라 활용(1차), Managing Urban Expansion—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도시팽창에 대응하는 전략 및 관리방안(2차)
미국의 공간계획 수립 동향과 국토 계획 개선방향 세미나	8.13	10층 중회의실	국내의 공간계획의 흐름에 관한 발표 및 현 국토종합계획의 개선방향 논의
국토연구원·해외건설협회 공동주최 제7차 해외개발금융포럼-세미나	8.18	국회도서관	해외개발금융의 현황과 미래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초청 세미나	8.26	10층 중회의실	동북아 협력동향과 한반도의 미래
미주개발은행(IDB) 협력방안 세미나	9.24	4층 ECOLE	PSG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다년도 연수프로그램, KRHS-IDB 연례세미나, LAC-Korea Policy and Knowledge Summit 등 향후 협력방안 논의
주택·토지연구본부 2차 힐링 세미나	9.30	Jack & the Beans	커피 문화에 대한 이해
국토연구원 개원 36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10.7	페럼타워	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1부: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정책, 2부: 주거급여 도입과 주택정책)
제8회 도시의날 기념 학술세미나	10.8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교통도시 관련 세미나 및 사진전 사회
도시재생 관련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10.31	7층 회의실	Making Cities in City-중국 심천의 도시재생사업 소개
북한도로회 세미나	11.12	10층 소회의실	북한 건설현황과 과제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 2015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경제기반형 활성화 방안 세미나	11.25	건설공제조합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경제기반형 활성화 방안 논의
국토연구원·서울연구원·서울시립대 주최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융복합 세미나	11.28	서울시립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융복합 연구방향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 도시 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 컨설팅 세미나	12.2	3층 중회의실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국토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제2회 시·도 연구원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12.4~5	제주 컨벤션리조트	도시재생 선도지역 총괄코디네이터 초청 세미나 및 토론, 도시재생 우수사례 답사
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방안 세미나	12.18	건설회관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방안
국토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주최 국토포럼 공동 세미나	12.23	대구경북연구원	시·도연구원과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국토정책 비전과 가치 공유(주제1: 한국의 도시재생 정책 현안과 과제, 주제2: 대구경북의 비전과 발전)

3 간담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국토계획연구본부 제1차 간담회	1.6	6층 회의실	2014년 본부 운영방안 논의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직급별 간담회(2~3차)	1.7(2차) 1.9(3차)	3층 중회의실(2차) 7층 회의실(3차)	연구업무 추진 및 연구수행 관련 건의사항 등에 관한 의견 수렴(2차), 본부 내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팀 그룹화 방안에 대한 토의(3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개선 방안 연구 간담회	1.23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국과 정책 간담회	2.4	정부세종청사	토지정책관실 2014 업무계획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 연구본부 2014 과제 및 향후 연구 등에 대해 논의
2014년도 본부-센터 업무보고 및 간담회	2.5~7	3층 중회의실	2014년 본부-센터 운영방향, 성과목표, 추진계획, 모니터링 방안, 건강한 연구공동체 구축방안 등 보고 및 토론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정책종합연구소(NILIM) 방문 간담회	2.6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과 국토정책종합연구소 간 우호 협력방안 논의
북한 전문가 초청 연구 간담회	2.14	6층 회의실	최근의 북한 정세동향 및 북·중 협력 전망
2014년 국토인프라 분야 OB·YB 신년 간담회	2.24	뜰안채2	본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비전 창출 및 연구 방향성 확립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원내 간담회	3.13	9층 회의실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사전조사 결과 및 조사표 검토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한국정책금융공사 주최 통일인프라 분야 전문가 간담회	3.18	중앙대	한반도 인프라 개발 핵심 프로젝트와 개발협력 방안 토론
위성정보 활용기반 확대 전문가 간담회	3.19	국토교통부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향 검토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할인제도 개편 연구 화물업계 간담회	3.19	3층 소회의실	과업 주요 진행사항 보고 및 업계 건의사항 청취
도시권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정책간담회	3.27	6층 회의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위축직 간담회	3.27	강당	복리후생, 근평 및 급여체계, 세종시 이전 관련 사항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4.1(1차) 10.2(2차)	세종시 (1~2차)	2013년도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1차), 개원 36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및 주요 연구성과 홍보(2차)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사업 간담회	4.3	국토교통부	KOPSS 활용 확산을 위한 논의
미래물류기술포럼 의장단 내원기념 간담회	4.9	8층 회의실	2014년도 미래물류기술포럼과의 공동세미나 개최계획 등 논의
격포-하서도로 확장조사 현장 간담회	4.9	격포-하서 현장사무실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중국연구 전문가 초청 간담회	4.28	6층 회의실	중국의 에너지산업 동향 주제 발표 및 토론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간담회	5.21	8층 회의실	본부 현안에 관한 논의
주택·토지연구본부 OB 간담회	6.9	10층 중회의실	주택·토지연구본부 미래 연구방향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국토연구원-한국도시설계학회 간담회	6.10	3층 중회의실	국토연구원-한국도시설계학회 간 협력방안 논의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한국광해관리공단 간담회	6.13	7층 회의실	양 기관의 업무현황 및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세계도로대회 조직위원회 방문 간담회	6.13	3층 소회의실	세계도로대회 홍보 및 협조요청 등 논의
신임 국토정보정책과장 초청 간담회	7.31	3층 세미나실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정책현황 및 향후 방향 논의
중추도시권 지원사업 추가 발굴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 간담회	8.8	국토교통부	중추도시권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및 특성화사업 발굴, 투자선도지구 연계 방안 등 논의
주거실태조사 전문가·OB 간담회	8.18	9층 회의실	주거실태조사의 정례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논의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료 할인제도 개편 화물업계 간담회(1~2차)	8.28(1차) 10.6(2차)	서울역 회의실(1차)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2차)	개편방향(안) 및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의(1차),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의(2차)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책간담회	10.1	7층 회의실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국토교통부 간 정책 이슈공유 및 신규과제 발굴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실증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10.22	3층 중회의실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실증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기준 마련
미래 북한 도시연구 관련 독일전문가 초청 간담회	10.24	6층 회의실	통일독일의 도시변화와 도시정책 논의
국토교통부-도로분야 연구기관 정책간담회	11.4	한강홍수통제소	2015년 연구과제 및 정책발굴 논의
세종시 이주직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11.6	10층 중회의실	세종시 이주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국토연구원-도로교통연구원 R&D 분야 협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12.8	분당 산내들	국토연구원-한국도로공사 간 연구 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 간담회	12.11	10층 중회의실	국토위성센터 설립 구상(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한반도 공동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동부연안 프로젝트 추진전략 및 개발효과 연구 북한전문가 초청 간담회	12.29	6층 회의실	북한 거점개발에 대한 일본의 투자전망 논의

4 설명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2014년 스마트 국토조사플랫폼 구축사업 설명회	1.16	대한상공회의소	국토조사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과년도 사업성과 공유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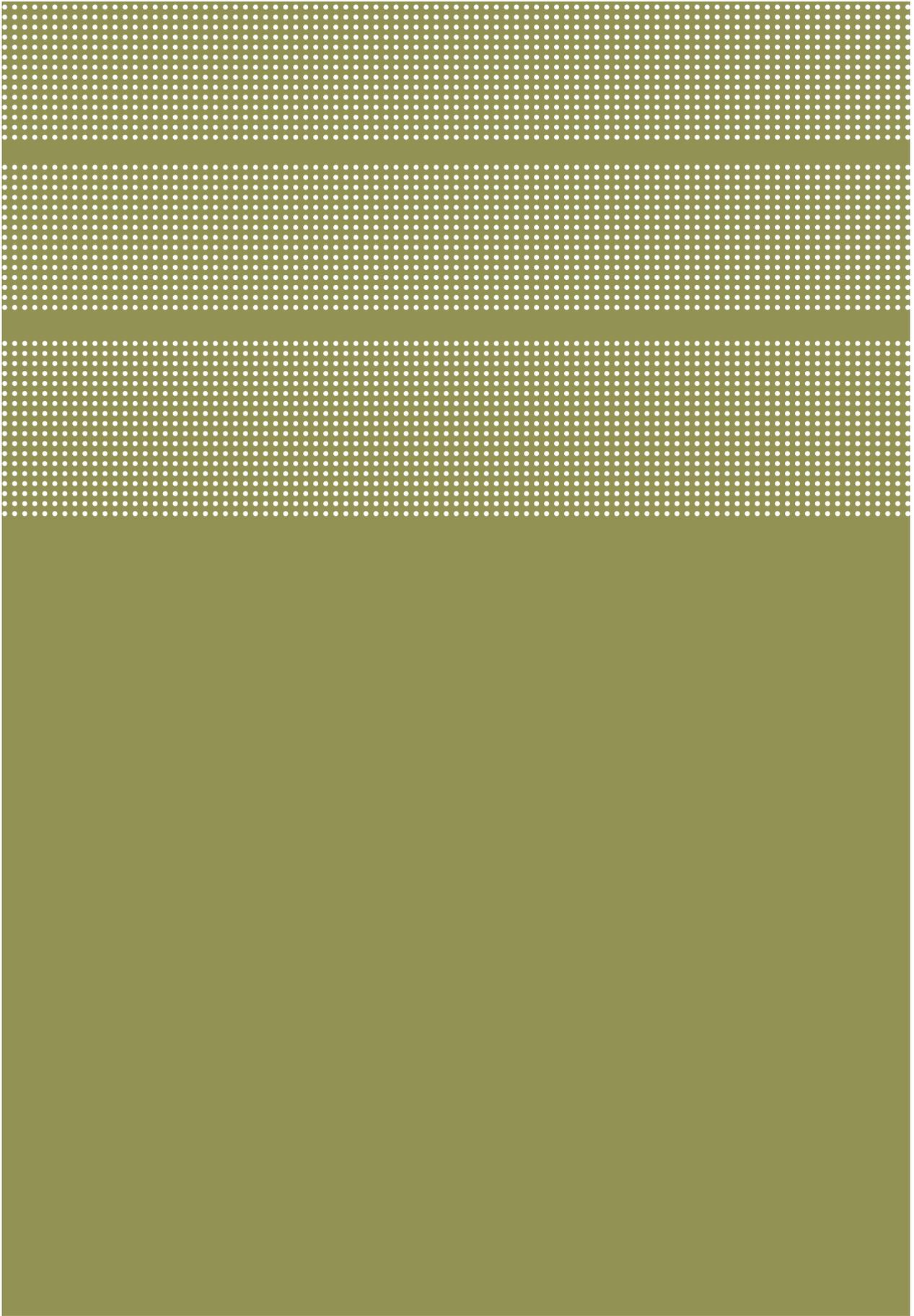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국토연구원 인건비 관련 설명회	1.13	3층 중회의실	2013년 인건비 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설명
연구기관 예·결산제도 개선 설명회	1.21	3층 세미나실	연구기관 예·결산제도 개선사항 등 공유
2013년 귀속연말정산 직원 설명회(1~2차)	1.23(1~2차)	3층 중회의실(1~2차)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개정 세법 및 유의사항 안내(1~2차)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설명회	2.17	대전역 KTX 회의실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소개 및 공간정보 특성화고 전환 희망학교 담당교원 의견 수렴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주민설명회	2.27	태안군청	중장기 종합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사업 업무설명회	2.27	8층 회의실	KOPSS사업 설명 및 2014년 사업추진(안) 논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시행 연구 충청·영남·호남권지자체설명회(1차), 서울·경기·강원권 지자체설명회(2차)	5.8(1차) 5.9(2차)	한국철도시설공단(1차) 강당(2차)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취지 및 방법 설명(1~2차)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도시계획 수립 컨설팅사업 지자체 설명회(1차), 컨설팅용역 설명회(2차)	5.14(1차) 12.23(2차)	강당(1~2차)	재해취약성분석 컨설팅 및 지자체 공모방안 설명(1차),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 대책 컨설팅 설명회(2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 설명회	7.15	건설공제조합	주제1: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과제, 주제2: 대도시 유형별 경제기반 도시재생 전략, 주제3: 중소도시 지역특성에 따른 경제기반 재생전략, 주제4: 향후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추진계획
2014년 귀속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설명회	7.17	10층 중회의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개정 세법 및 유의사항 안내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직원 설명회	8.5	강당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및 근로자 위원 선출 관련 논의
청사매각·신청사건축계획 직원 설명회	9.1	강당	현 청사 매각 및 신청사 건설 추진계획 등 설명
2014년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평가용역 설명회	9.30	강당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 및 요청서 작성방법 교육,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 수렴 등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개선방안 연구 운영평가 개선안 설명회	11.14	경수고속도로	운영평가 개선안 설명 및 질의응답
2015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	11.25	건설공제조합	2015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
정보보호 교육 및 보안강화 정책 설명회(1~2차)	12.11(1차) 12.15(2차)	강당(1차) 10층 중회의실(2차)	보안정책 강화 내용 안내 및 보안프로그램 사용 교육(1~2차)

5 토론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동료로부터 배우는 독서 토론회	1.20	3층 중회의실	총·균·쇠·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제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도시설계연구회 연구토론회 (1~22차)	1.22(1차) 2.5(2차) 2.12(3차) 2.19(4차) 3.7(5차) 3.14(6차) 3.21(7차) 3.28(8차) 4.4(9차) 4.11(10차) 4.18(11차) 4.28(12차) 5.9(13차) 5.30(14차) 6.13(15차) 6.20(16차) 6.27(17차) 7.11(18차) 7.18(19차) 7.25(20차) 8.8(21차) 8.14(22차)	7층 회의실 (1~22차)	연구방법으로서의 사례연구, 사례연구의 설계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준비 단계(1차), 사례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기법, 사례연구보고서 작성기법(2차), Garden Cities(Andres Duany & DPZ 지음)(3~4차), Finding Lost Space(Roger Trancik 지음)(5차), 도시설계의 역사와 사례(Roger Trancik 지음)(6~8차), 도시설계를 통해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있는가(Charles Montgomery 지음)(9차), Happy City(Charles Montgomery 지음)(10~13차),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도심가로와 보행활성화(오성훈·남궁지희 지음)(14~17차), 도시설계 연구방법론 및 향후 도시정책, 연구과제 관련 상호 토론(18차),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사람과 환경을 위한 도시설계(더글러스 파르 지음)(19~21차), 지속가능한 도시의 다양한 기준-밀도, 통로, 소셜네트워크, 에코시스템, 건물과 기반시설(22차)
주택·토지연구본부독서토론회 (1~8차)	3.4(1차) 3.11(2차) 4.23(3차) 5.14(4차) 5.20(5차) 8.13(6차) 9.19(7차) 12.3(8차)	9층 회의실(1~8차)	주택 관련 자료 구조 및 마이크로자료 분석방법(1차), 3차산업혁명(제레미리프킨 지음), 새로운 금융시대(로버트실러 지음)(2차), 주택시장 지역 설정에 관한 논의와 방법론(3차),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짐로저스 지음)(4차), 집짓기 바이블(조남호 외 지음)(5차),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박종훈 지음)(6차), 왜 모두 미국에서 탄생했을까(이케다 준이치 지음)(7차), 상권 분석의 기초와 이해(8차)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연구 제1차 전문가 토론회	5.22	3층 중회의실	새만금 MP변경 방향과 추진전략 관련 전문가 자문
기본과제 이슈 논의를 위한 내부 토론회	6.17	10층 중회의실	기본과제 이슈사항 논의를 위한 내부토론회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 방안 연구 미래국토포럼 공개 토론회	12.9	강당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발표 및 토론
서민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12.19	강당	주제1: 임대차시장 행태 및 인식변화와 시사점, 주제2: 임대차시장 구조분석과 서민임차가구 주거안정 방안

6 공청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 장소	주요 내용
K-2 공군기지 이전방안 연구 공청회	5.14	한국폴리텍대학	군 공항 이전건의(안) 발표 및 토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7.22	강당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발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 연구 공청회	8.29	경북대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광주 군 공항 이전방안 연구 용역 공청회	9.2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안) 설명 및 시민 의견 청취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10.23	강당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ARCHITECTURE

AND

DESIGN

Chapter

V

정기간행물 발간

1. 국토(387호~398호)	132
2. 국토연구(80권~83권)	138
3. 국토정책Brief(448호~495호)	139
4. 도로정책Brief(75호~86호)	141
5. 건설경제(76권~78권)	142
6. SPACE & ENVIRONMENT(58호~60호)	143

1. 국토(387호~398호)

387호 2014. 01

국토시론

정부3.0 시대의 국민대통합 과제 한광욱

특집 | 정부3.0 시대의 국토정책방향

- 1. 소통·협력 중심 공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문정호
- 2. 정부3.0 구현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의 실현 이영은
- 3. 정부3.0 시대 교통부문의 정책방향과 과제 오재학
- 4. 정부3.0 시대의 ICT기반 통합형 재난관리 추진방향 이치현, 심재현
- 5. 정부3.0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 김대중
- 6. 정부3.0 시대의 지역발전 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김재홍

영어표이 185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천정운

도시재생 현장을 가다 5

골목길로 떠나는 근대로(路)의 여행, 대구시 중구 류태희

국토 옴부즈만

이슈와 사람 110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국민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은선

우리 옛길 걷기 5

쇠들레 평화누리길에서 한탄강의 한숨을 듣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67

제천시 장락동(長樂洞) 칠층모전석탑(七層模塼石塔) 박영순

e-interview

피터 타이러(Peter Tyler): 영국 도시재생사업과 모니터링 평가체계 양도식

영화와 도시 1 |

 시티 오브 갓(City of God)

희망과 미래를 꿈꾸는 ‘신이 버린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강병국

해외리포트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후쿠오카 캐널시티와 오이타현 유후인을 중심으로 유선철

자료회원 가입안내

글로벌정보 | 새로운 행정자치 단위 코원연합체, 첫 직접선거 시행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제22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주요 내용 배유진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도교대학교 공동 한일 공간분석 세미나’ 개최 외

KRIHS 보고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건강장수도시 실태진단 연구(김태환 외 지음) 이희연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왕광익 외 지음) 이주일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정부3.0과 스마트 직접민주제 이민화

388호 2014. 02

국토시론

문화적 국토를 생각한다 최승담

특집 | 문화융성과 국토발전

- 1.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지역문화진흥 방향 정광렬
- 2.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문화권 정책 개선과제 한상욱
- 3. 문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라도삼
- 4. 문화를 활용한 농어촌지역 발전방안 강신겸
- 5.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방안 이병민
- 6. 도시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대구시 남구 맛둘레길 사례 홍경구
- 7. 문화요소가 도시발전에 기여한 해외 도시사례 오동훈

영어표이 186 | 문화기본법 외 김남희

이슈와 사람 111 |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아름다운 국토를 가진 나라가 문화적으로도 융성합니다” 채미옥

우리 옛길 걷기 6

산이 나인가, 내가 산인가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68

월악산 덕주산성(德周山城)과 제천명승(堤川名勝) 박영순

도시재생 현장을 가다 6

좁은 골목길이 낭만의 공간으로, 춘천시 효자1동 강승진

국토 옴부즈만

e-interview

말론 보아넷(Marlon Boarnet): 건조환경이 통행형태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안용진, 홍익석

영화와 도시 2

전쟁을 기억하는 도시 호치민,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다 최지훈

해외리포트

일본의 산림테라피 기지(基地) 운영사례와 시사점 박중순, 이종화
글로벌정보 | 그랑리옹, 새 도시연합을 만들어줄 다양한 문화행사들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부동산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 최진

시·도 연구원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권혁일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조사 성과보고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의회’ 개최 외

KRIHS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박세훈 외 지음) 김현수

한·중 항만지역간 협력과제 도출 연구(임영태 외 지음) 정태원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도시경쟁력의 기본은 ‘사람’이다 한형용

389호 2014. 03

국토시론
과학적 정책의 화두, 빅데이터 장광수

특집 | 공간빅데이터와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

1. 공간빅데이터체계 구축·활용 정책방향 김희수
2. 복지·안전국토 실현과 공간빅데이터 활용 이영주, 김미정, 임은선
3. 기업의 공간빅데이터 활용사례 김한국, 황선영
4. 국내외 공간빅데이터 정책 및 기술동향 김민수
5. 정부3.0과 창조경제를 위한 공간빅데이터 개방방안 김대중

영어플이 187 | 소셜 분석(Social Analytics) 외 박재희

이슈와 사람 112 | 오재인 한국빅데이터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방치된 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핵심입니다” 이영주

우리 옛길 걷기 7
시간이 퇴적한 계곡산성에서 인생을 돌아보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69
단양 신라적성비(新羅赤城碑)와 적성산성(赤城山城) 박영순

도시재생 현장을 가다 7
주민참여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 동구를 꿈꾸다, 광주광역시 동구 양진철

국토 옴부즈만

e-interview
칼 리드(Carl Reed): 정부3.0 시대의 빅데이터 기술 황명화

영화와 도시 3
역사가 된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지금 여기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심승희

해외리포트
도시 및 광역계획지원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 미국 유타주 와사치 초이스 2040 사례 김근태

글로벌정보 | 빅데이터와 도시의 변화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도시재생컨퍼런스: 도시재생네트워크 세미나 김영빈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 도쿄대학교 도시안전국제연구센터' 업무협약 체결 외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1) (이백진 외 지음) 정진혁
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강호제 외 지음) 조혜영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세상을 읽는 나침반, 빅데이터 김성태

390호 2014. 04

국토시론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도시재생으로 황희연

특집 | 도시재생의 통합적 추진전략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의 배경과 주요 내용 박승기, 김태형
2.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사업추진 유형과 성공전략 김주진
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전략 유재운
4. 지역재생과 로컬 거버넌스 구축: 진안군마을만들기 10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자인
5.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 김효정
6. 도시재생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과제 김진

영어플이 188 | 도시재생전략계획 외 권혁일

이슈와 사람 113 |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도시재생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맞춤형 해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소양

우리 옛길 걷기 8
제주올레 10코스: 화순 모슬포 올레 굽이굽이 전설 따라 제주의 속살을 걷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70
단양 온달산성(溫達山城)과 다누리 명승유적 박영순

도시재생 현장을 가다 8
개항창조문화도시 재생사업으로 진화하는 인천광역시 민경희

국토 옴부즈만

e-interview
이안 바이젤(Ilan Wiesel): 호주 도시재생의 주요 이슈-대면접촉, 주거경로 그리고 KDR 한정훈, 김준형

영화와 도시 4
이민과 조계의 도시, 상하이 임춘성

해외리포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본의 제한속도 개선사례 최소림
글로벌정보 | 선도적 도시재생 컨설팅 공기업, 세마파(SEMAPA)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생활·안전·미래국토 세미나 전성애, 박새롬, 이건민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 2주년 기념세미나 윤초롱
국토연구원 단신 | '방글라데시 국토지리원장 내원 기념 워크숍' 개최 외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김혜승 외 지음) 남원석
지역산업의 고용파급효과 모형 구축 및 활용: 지역계량경제 - 투입산출모형을 중심으로(남기찬 외 지음) 박헌수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마음으로 계획하는 국토 이연숙

391호 2014. 05

국토시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자연적 경제영역(NET) 유장희

특집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초국경적 국토경영

- 1. 유라시아 협력비전과 전략 이재영
- 2. 동북아 극동지역 물류동향과 유라시아철도 협력 나희승
- 3. 동북아 북방물류의 부상과 복합물류체계 중요성 이성우
- 4.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방향 서종원
- 5.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구상 이성규
- 6. 유라시아 성장거점의 산업클러스터 전략 임영태, 조진철

용어풀이 189 | 초국경 협력(Cross-Border Cooperation) 외 이미영

이슈와 사람 114 |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북한교통물류네트워크와 SRX 구축을 통해 '하나의 대륙'을 실현하겠습니다"
 임영태

우리 옛길 걷기 9
 단양 온달산성에서 남한강을 내려다보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71
 문경새재를 지켜온 문화유적들 박영순

e-interview
 리드 유잉(Reid Ewing): 스프롤의 정량적 평가모델 개발
 - 스프롤에 따른 비용과 혜택 및 주요 이슈 김근태

도시재생 현장을 가다 9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군산 원도심 재생 김영중

국토 옴부즈만
 영화와 도시 5
 도쿄, 너와 나 사이의 거리를 묻는다 박세훈

해외리포트
 일본 다치카와(立川) 비행장 종전부지 활용계획 및 개발현황 이승욱

글로벌정보 |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서울 메트로랩 국제협력포럼 조진철, 박현주

2014년 제1차 한반도포럼 배은지
 국토연구원 단신 | '세계은행 도시화지식플랫폼(UKP) 아카데미' 개최 외

KRIHS 보고서
 압록강유역에서의 남·북·중 초국경협력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김찬규 외 지음) 원동욱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 투자정책 방향
 - 정책 시나리오별 교통비용 추정을 중심으로(김종학 외 지음) 정성봉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김영운

통일을 위한, 돌아가지만 가장 빠른 길

392호 2014. 06

국토시론

국민행복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정병운

특집 |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전략

- 1. 중추도시생활권의 의의와 추진과제 이원섭
- 2. 중추도시생활권의 발전전략과 지원체계 박정수
- 3. 중추도시생활권 구성현황과 특징 윤영모
- 4. 부산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방안 강성권
- 5.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추진전략 장성화
- 6. 일본의 정주자립권 추진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이현우

용어풀이 190 | 지역행복생활권과 중추도시생활권 외 이정민

이슈와 사람 115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이 주체가 되는 연계와 협력의 장입니다" 이원섭

우리 옛길 걷기 10
 산은 더 깊고 강은 더 푸르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72
 고모산성(姑母山城)과 문경팔경 박영순

e-interview
 마이크 더글라스(Mike Douglas):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본 도시재난 신성희

도시재생 현장을 가다 10
 통합마스터플랜과 총괄조직 그리고 협력시스템으로 접근한 영주 구 도심 재생 6년 조준배

영화와 도시 6
 구로, 가리봉의 새 거주자들 신혜란

해외리포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영국 밀턴케인즈의 변화와 노력 김동근

글로벌정보 | 그랑파리 사업: 코원연합과 국가 간 지역개발계약(CDT) 체결 추진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제3차 공동세미나 임상연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 지자체 설명회 김형수

국토 옴부즈만
 KRIHS 보고서

글로벌시대의 창조적 국토경영전략(김동주 외 지음) 한경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방안 연구(한우석 외 지음) 김병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정읍-고창-부안의 오손도손 행복마을 만들기

393호 2014. 07

국토시론

안전한 국토, 행복한 국민 김경환

특집 | 안전한 국토와 국민행복 실현

- 1. 위험사회의 국토안전관리방안 최충익
- 2.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 최임락, 이병민
- 3. 자연재해에 대한 커뮤니티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향후 과제 강상준
- 4. SOC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조혜진
- 5.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 방안 황이숙
- 6. 선진교통안전 의식 제고 방안 이수범
- 7. 범죄에 강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방안 문태현
- 8.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동향 한우석

용어풀이 191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제도 윤초롱

국토 옴부즈만

이슈와 사람 116 |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병재

우리 옛길 걷기 11 차 향기 그윽한 남해의 한자락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73 상주(尙州) 임란북천전적지(壬亂北川戰跡地) 박영순

e-interview

네기 라파엘(Nagui M. Roupail):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공학적 그리고 문화적 접근법 김상기

영화와 도시 7

순수함을 간직한 아름다운 녹색도시, 뉴질랜드 인버카길 김광석

도시재생 현장을 가다 11

옛 연초제조창을 활용한 청주시 도시재생전략 김승용

해외리포트

영국의 사회주택 정책 변화와 시사점 오도영
글로벌정보 | 재난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부처 간 공동 사이트 운영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에티오피아 정책연구소(PSRC) 도시개발 정책 워크숍' 개최 외

여름휴가 고민인가? '농촌으로 떠나는 힐링여행'

KRIHS 보고서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 (I):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김태환 외 지음) 이시철
환경과 조화로운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위한 광역생태축 적용 방안 연구(박중순 외 지음) 이상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안전이 행복이다 이윤호

394호 2014. 08

국토시론

산림으로 국민복지 3.0 실현 윤영균

특집 | 산림의 현명한 이용과 국민복지

- 1.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추진 동향 최병암
- 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통한 국토가치 향상 방안 심재현
- 3. 산림복지를 위한 산림자원의 현명한 이용조건 유명민
- 4. 독일의 산림교육 현장, 프라이부르크 숲유치원 김은란
- 5. 산림을 이용한 여가활동 현황과 기대효과 윤소영
- 6. 산림치유공간의 조성 현황과 기대효과 박중순
- 7. 수목장림의 조성과 산림자원의 보전 김갑열

용어풀이 192 | 숲길 외 홍성희

이슈와 사람 117 | 신원섭 산림청장
"국민 모두 숲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손학기

우리 옛길 걷기 12 바람과 구름을 벗삼아 걷는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74 상주(尙州) 견훤산성(甄萱山城)과 관련 유적들 박영순

e-interview

코니 오자와(Connie Ozawa): 환경계획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홍창유

영화와 도시 8

르완다의 꿈과 미래 정옥주

해외리포트

유럽의 '제5세대 도로(FOR)' 개발동향 및 시사점 조남건
글로벌정보 | 산림과 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외

국토 옴부즈만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 설명회 박소영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 김다윗, 이윤석
국토연구원 단신 | '2013년도 우수 연구보고서 및 정책기여과제 포상식' 실시 외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교통카드 1장으로!

KRIHS 보고서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윤하중 외 지음) 김명수
해의 공간정보시장 진출전략 연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전략과 정책과제(최병남 외 지음) 조영동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산을 즐기는 데도 예의가 있다 정민호

395호 2014. 09

국토시론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하성규

특집 | 부동산시장 구조 전환과 정책방향

- 1. 주택시장 변화 특성과 정책과제 김현아
- 2. 주택수요 변화와 공급체계 개선방향 김태환, 전성제
- 3.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이창무
- 4. 주택금융시장의 역할 정립과 발전방안 유승동
- 5. 저소득기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남원석
- 6.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진창하

영어풀이 193 |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외 최진

이슈와 사람 118 | 서중대 한국감정원장
 “정확하고 체계적인 부동산시장 진단 및 분석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박천규

우리 옛길 걷기 13
 백제의 미소로 해탈의 즐거움을 얻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75
 영주(榮州)와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 박영순

e-interview
 댄 임머글럭(Dan Immergluck): 미국 주택 및 모기지 시장과 커뮤니티 개발 계획 왕경순

영화와 도시 9
 다리(Bridge),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되다 문정호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마을의 재발견 1 류태희

창조적 커뮤니티, 현장에서 배우는 도시재생의 지혜

해외리포트
 전략환경평가(SEA)의 현황과 시사점: 영국과 네덜란드 사례 민성희

글로벌정보 | 사회복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공유지 제공정책 추진 외

자료회원 가입안내
 국토 옴부즈만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제7차 해외개발금융포럼 김현석
 스마트국토 엑스포: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 황명화
 국토연구원 단신 | 아시아태평양 지역계획 및 주택기구 주최 ‘2014 EAROPH 세계대회’ 참석 외

KRIHS 보고서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이재용 외 지음) 신동빈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변필성 외 지음) 이동수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누구나 할 말 많은 집값 이야기 이휘정

396호 2014. 10

국토시론

건설산업 제도약을 위한 변화 김경식

특집 |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 정책의 재정립 방안

- 1.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김정희
- 2.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 권혁진
- 3. 생활밀착형 SOC 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윤하중
- 4. 건설 분야의 IT 융·복합 촉진 방안 김재영
- 5. 시설물 유지관리체계의 정비 및 건설기술정책 표준화 방안 오상근, 안상로
- 6. 북한 건설수요와 건설산업의 대응과제 박용석
- 7. 해외건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정창구

영어풀이 194 | 분리발주와 분할발주 외 배유진

이슈와 사람 119 |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건설기술의 융·복합 및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윤하중

우리 옛길 걷기 14
 아름다움에 취해 천천히 걷는 길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76
 선비의 고장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과 선비촌 박영순

e-interview
 벤 스틸(Ben Still): 영국의 지역발전과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의 역할 양도식

영화와 도시 10
 뉴욕, 시간과 공간의 압축도시 홍성용

국토 옴부즈만
 마을의 재발견 2
 도시를 이야기하는 몇 가지 방법: 대구 북성로 공구거리를 중심으로 정유진, 류태희

해외리포트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활성화 전략: 나오시마섬과 심천 OCT 사례 이범현, 김유란

글로벌정보 | 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설계획 수립 외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제2차 미래국토포럼 박재희
 국토연구원 단신 | ‘2014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 연수’ 실시 외

KRIHS 보고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정책반응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예측방안(김대중 외 지음) 최봉문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과제 및 계획수립 방안 연구(왕광익 외 지음) 권태정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흥하는 건설산업의 조건 윤영선

397호 2014. 11

국토시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광역교통 정책방향 김광식

특집 |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 1.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방안 배석주
- 2.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의 환승서비스 개선방안 이광훈
- 3. 수도권 광역버스 승객의 안전을 디자인한다 김채만
- 4.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체계 개선방향 이춘용
-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체계 개선방향 정진규
- 6.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김황배

영어풀이 195 | 광역교통시설 박종일

이슈와 사람 120 | 김희경 경기도 행정2부지사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석

우리 옛길 걷기 15
세월은 흘러도 길은 변하지 않는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77
봉화군(奉化郡) 달실마을 충재(冲齋) 권벌(權穰) 유적 박영순

e-interview
앤드류 그린리(Andrew Greenlee): 미국의 주택바우처 프로그램과 주거이동성 이성원, 김우락

영화와 도시 11
동경의 시대, 환상의 공간, 낭만적 파리 예찬-미드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 이병민

마을의 재발견 3
배움, 마을을 품다: 마을에서 배우기, 마을에서 살아가기 김미윤

해외리포트
일본의 국토관측을 위한 위성정보활용 동향 이호상, 조재일
스마트코드(Smart Code)와 미국 페탈루마의 사례 정우성, 민보경
글로벌정보 | 그랑파리(Grand Paris)의 대중교통 개선계획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개원 36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이수암, 제갈영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36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외

국토 옴부즈만
제19회 전국 초등학교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수상작 및 입상자 발표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도농교류시대의 농촌지역의 특성과 정책 방안(김창현 외 지음) 황한철
新 성장동력을 위한 전국도로망 재편(오성호 외 지음) 이용재

KRIHS 신간
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 1980년대 공공사업 개혁(조남건 외 역) 장수은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길 유정복

398호 2014. 12

국토시론

고령화시대, 지역개발의 새로운 인식과 접근 손경환

특집 | 고령화사회와 국토·도시발전

- 1. 고령화시대의 국가발전전략 광노성
- 2. 고령화시대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토·지역정책과제 이동우
- 3. 고령화시대의 세대맞춤형 도시·공간정책 전환과 실천과제 이상대
- 4.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중산층 고령자를 중심으로 김현아
- 5. 고령자 통행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이신해
- 6. 도시의 고령화와 ICTs의 역할: U-Health 임윤택

영어풀이 196 |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조윤지

이슈와 사람 121 |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차미숙

우리 옛길 걷기 16
가슴속에 신라인의 흔적이 남아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78
봉화의 자랑, 도립공원 청량산의 문화유적 박영순

e-interview
룩 안셀린(Luc Anselin): 증거기반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계량분석 접근법 황명화

영화와 도시 12
욕망의 도시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명과 암-미션 임파서블 & 섹스 앤 더 시티 2 김소은

국토 옴부즈만
마을의 재발견 4
마을과 사람을 잇는 마을미디어 김희영

해외리포트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요코하마 록카쿠바시 상점가의 개성과 공정일지 아мага료코
글로벌정보 | 22개 지역에 '지역 실버경제 발전위원회' 창설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2015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경제기반형 활성화 방안 세미나 정은진
국토연구원 단신 | '제19회 전국 초등학교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 개최 외

KRIHS 보고서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조판기 외 지음) 문재
국토이용 제한지역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개발 연구(손학기 외 지음) 김용관

2014년 국토 총목차(통권 387~398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지역경제 공동화, 선행 대처로 극복해야 이지평

2. 국토연구(80권~83권)

80권 2014. 03

운전 시뮬레이터 기반의 교통안전 평가기준 개선 연구 이항숙, 주재홍, 추상호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 김상조, 김동근, 이선용
 가구통행 분석을 통한 도시 중심성 변화 연구
 :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중심으로 주미진, 김성연
 주택 PF사업의 리스크 측정과 최적 자본구조 결정에 관한 연구
 이경민, 안지하, 정창무
 시차공적분을 통해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시장의 특성 강임호, 조영진
 하천 수질개선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박중석, 이경훈
 도시농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서울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사례 박인권, 이민주

81권 2014. 06

토지이용 특성과 침수피해면적 간의 관계 분석: 서울시를 사례로 신상영, 박창열
 토지의 수직적·수평적 과세평가 형평성에 관한 연구 노민지, 유선중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한 선거구 특성과 정당 선호 결정요인 분석
 황재희, 이상우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에 대한 선호분석: 명시선호를 중심으로 유승동
 주관적 사전확률을 반영한 부동산 대량평가모형 개발 이창로, 박기호
 지역 낙후도 유형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과 이동 요인
 : 충북 시·군을 사례로 채성주, 배민기, 백기영
 국제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구조적 변화
 권현진, 유정석
 수도권 역세권 토지이용패턴과 철도이용 수요와의 연관성 성현곤, 천상현
 지역노동시장의 직종별 학력수준으로 측정된 인적자본의 외부효과 분석
 이희연, 박유진
 가구 부문의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구조 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
 안에 관한 연구 노승철
 도시환경의 건강친화도와 지역주민 건강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김태환, 김은정

82권 2014. 09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역 간 전이효과
 : 일반화 예측오차 분산분해를 이용한 7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항용, 이진
 조선시대 서울 경관명소 분포와 인식의 비교연구
 : 팔경시, 진경산수화, 풍속지를 중심으로 박수지, 김한배, 이승희
 수요추정을 위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통행시간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김철주, 정창용, 손의영, 김재영, 고준수
 The Linked Movement of House Prices and GDP in the G7 Countries
 윤재호, 이주형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의 공사비 예측에 관한 연구 이진규
 매칭 방법을 이용한 대구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측정 정태훈, 김병조, 정창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한 헤지비율과 헤지효율성 류강민, 이창무

83권 2014. 12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와 정량적 지표 분석을 통한 서비스 수준 분석
 김민석, 박선영, 김정미, 김진희, 정진혁
 기업 입지유형 및 규모가 신생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신혜원, 김의준
 주민참여가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김해숙, 정복환, 김갑열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지구정책 거버넌스 연구
 : 부산광역시 도따따가를 사례로 박세훈, 주유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역전세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박상우, 박환용
 여수공항의 KTX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최창호, 임영태
 기상상황이 관광지 유입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손철, 김건후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동체주의 이론적 해석
 : 델파이 방법을 통한 적용가능성 탐색 김진아
 혼합적 다단계 접근을 통한 충북 산업클러스터의 집적과 연계성 확인 조철주
 도시지역의 자가점유율과 투표율의 관계에 관한 연구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이소정, 우윤석

3. 국토정책Brief(448호~495호)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448	1.6	선형 공원 조성을 통한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	박근현, 김재철, 이태웅
449	1.20	2014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박천규, 전성제, 황관석, 김태환, 최진
450	1.27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취약지역 증가와 대응방향	한우석
451	2.3	건설경기 동향 및 2014년 건설투자 전망	김민철, 김성일
452	2.10	압록강유역의 남·북·중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김천규
453	2.17	국토 생활공간 미래전망과 대응전략	이용우
454	2.24	주택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을 위한 기반구축: 주택시장권역 구분과 활용방안	박천규, 김태환, 전성애, 김영미, 전성제
455	3.3	도농교류시대의 농촌지역 유형별 정책대응방안	김창현, 구형수
456	3.10	국민행복을 위한 생활인프라 정비방향	조판기, 이승욱
457	3.17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구온난화대책과 지역재생	김선희
458	3.24	지속가능한 국토 창출을 위한 광역생태축 적용 방안	박종순, 김선희, 최영국
459	3.31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네덜란드 주택협회 사례를 중심으로	김혜승
460	4.7	4·1대책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방향	박천규, 김근용, 전성제
461	4.14	복지와 공간의 융합을 통한 고령자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이영주, 임은선
462	4.21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정책과제 및 전략계획 수립방향	왕광익, 유선철, 노경식
463	4.28	교통사고에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김준기, 최소림
464	5.7	우리나라 건강장수도시의 특성과 시사점	김은정, 김태환
465	5.1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방안	천현숙
466	5.19	창조산업 집적과 지역발전의 시사점	박경현, 박정호
467	5.26	저성장시대의 통합적 수자원 관리방안	김종원, 김창현, 구형수
468	6.9	범죄발생의 공간특성을 고려한 도시안전망 구축방안	이재용, 김길
469	6.16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의 도입과 활용	임은선, 이호상, 이영주, 조재일
470	6.23	도시홍수 방재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정책방향	한우석, 박태선
471	6.30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계획 체계 개선방향	정진규, 김중학
472	7.7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	김은란, 박근현
473	7.14	공간정보와 침수정보의 융합을 통한 침수재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김미정, 김민철
474	7.21	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윤하중, 배유진
475	7.28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강호제, 류승한, 서연미, 이윤석, 이석희
476	8.4	도시계획 관점의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실천과제	김태환, 김은정, 전혜선
477	8.11	저성장기의 교통투자 방향	김중학
478	8.18	네덜란드 공공개발사업의 특성과 시사점	정희남, 강빛나래, 박준, 이형찬
479	9.1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입지·행위제한 정비방향	김동근, 김상조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480	9.15	선제적 국토정책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 환경과 조화로운 국토개발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예측	김대중, 구형수
481	9.22	역모기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의 발전방향	이태리, 박천규, 전성애
482	9.29	미국의 PBPP(Performance-Based Planning and Program)를 활용한 성과관리체계 개선방향	김호정, 이찬영
483	10.6	복합환승센터와 주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역세권 재생 활성화 전략	서민호, 김영하
484	10.1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을 위한 공간정보 정책과제	강혜경, 사공호상
485	10.20	고령화시대의 공간정책 방향과 실천전략	이왕건, 이영주, 김준기
486	10.27	주거급여제도의 확대 개편과 향후 과제 : 임차가구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김혜승, 강미나, 박미선, 제갈영
487	11.3	창조경제 시대의 비도시지역 산업입지전략	강호제
488	11.10	원도심 쇠퇴현황 및 도시재생 추진방향	정소양, 유재윤, 김태영, 김용환
489	11.17	출산과 도시주거환경의 연관성과 시사점	천현숙, 오민준
490	11.24	U-city 고도화정책 추진방향	이재용, 사공호상
491	12.1	주택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박미선, 강미나, 손학기
492	12.8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 - 작은 거점 만들기와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임상연, 변필성
493	12.15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분석결과 및 시사점	김상조, 김동근, 이선용, 강우석
494	12.22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김승중, 정희남
495	12.29	활동기반 교통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미래국토 교통수요 예측방안	윤서연, 이백진

4. 도로정책Brief(75호~86호)

75호 2014. 01

칼럼 | SOC 투자 정책 방향의 모색
해외정책동향
 네덜란드의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동향
 해외 주요 도시의 택시요금체계
 영국의 교통안전정책 추진동향
지역소식 | 울산광역시 도로교통 정책 및 연구동향

76호 2014. 02

칼럼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개발협력방안
해외정책동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속도로교통안전정책
 도로화물 수송 효율성 증진 방안과 효과
지역소식 | 캘리포니아대학교 첨단교통시설연구센터

77호 2014. 03

칼럼 | 통일 대박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해외정책동향
 미국과 영국의 대규모 행사 교통관리제도
 체코의 교통부문 전략계획
 영국의 대중교통과 Door-to-Door 정책
지역소식 | 미국 클리블랜드지역 광역교통계획기구 |

78호 2014. 04

칼럼 | 글로벌 인프라 컨설팅 시장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제언
해외정책동향
 운전행태 개선 프로그램과 사고감소효과
 통계로 본 미국 도로정책 변화
 EU의 지속가능 도시교통비전: CIMTAS
지역소식 | 미국 클리블랜드지역 광역교통계획기구 ||

79호 2014. 05

칼럼 | 도로정책: 효율과 안전 중심으로
해외정책동향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개선
 美, 경기부양법을 활용한 교통투자 방향
 외주 교통 데이터의 활성화 사례
지역소식 | Nexttrans 센터

80호 2013. 06

칼럼 | 국민행복과 성숙사회를 지향하는 인본주의 도로정책
해외정책동향
 교통 현안과제에 대응하는 FHWA의 연구 및 기술 방향
 미국의 대체 교차로 개발 및 도입
 뉴욕시 지속가능 교통정책
지역소식 | Nexttrans 센터: 드라이빙시뮬레이터 연구실

81호 2014. 07

칼럼 |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이제 계층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필요
해외정책동향
 긴급재난대응가이드북 사례로 본 초동대응의 중요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로
 미국의 Non-motorized Transportation 현황 및 정책동향
지역소식 | 생태교통도시수원의교통정책방향

82호 2014. 08

칼럼 | 미리 가보는 서울 세계도로대회
해외정책동향
 교통 SOC 투자에서의 교통수요 예측 오차 현황 및 개선방향
 카세어링 해외사례 및 시사점
 런던 혼잡통행료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지역소식 | Larson 펜실베이니아 교통연구소

83호 2014. 09

칼럼 | 한국형 잠재적 위험도로 판단 기법 필요
해외정책동향
 캘리포니아 교통국의 사고 다발지역 선정방법론 소개
 미국 고속도로 다인승차로제의 정책목표 변천
 호주의화물차정책: HVSP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소식 | 미국 버지니아 교통국(VDOT) |

84호 2014. 10

칼럼 | 빠른도로, 바른도로
해외정책동향
 일본의 도로 지하공간 조사를 통한 도로함몰 방지 및 유지관리 방안
 통행시간 신뢰도 지표 적용 해외사례
 독일의 교통인프라 중합계획 2015
지역소식 | 미국 버지니아 교통국(VDOT) ||

85호 2014. 11

칼럼 | 선진화 사회 진입에 적합한 선진화 도로정책
해외정책동향
 암스테르담시(市)의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국 연방도로청의 새로운 제안
 네덜란드 발광형 도로정보 시스템 개발 및 시사업
지역소식 | 벨기에 하셀트대학 교통연구소(IMOB)

86호 2014. 12

칼럼 |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적단속 체계의 다변화
해외정책동향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승용차 이용 감소와 원인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의 교통정책
 미국 위스콘신주의 도로기상안전진단 프로그램 개발 사례
지역소식 | UC Berkelay 도로안전연구센터

5. 건설경제(76권~78권)

76권 2014. 봄호

건설경기 진단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윤하중, 배유진, 이승훈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소비심리 진단 박찬규, 황관석, 문지희
특집: 건설시장별 실태 및 경쟁력 확보방안
 건설산업 위기 극복과 활로 모색 방안 이종렬
 전문건설시장의 실태 및 경쟁력 확보방안 이원규
 기계설비 건설시장의 실태 및 경쟁력 확보방안 김경희
칼럼
 실적공사비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소고 김재영
지상중계
 건설인과의 KRIHS 연찬회(2014-1차)
외국의 건설정보
 협업적 지식 경영: 건설산업 사례 최기환
주요 건설통계

77권 2014. 여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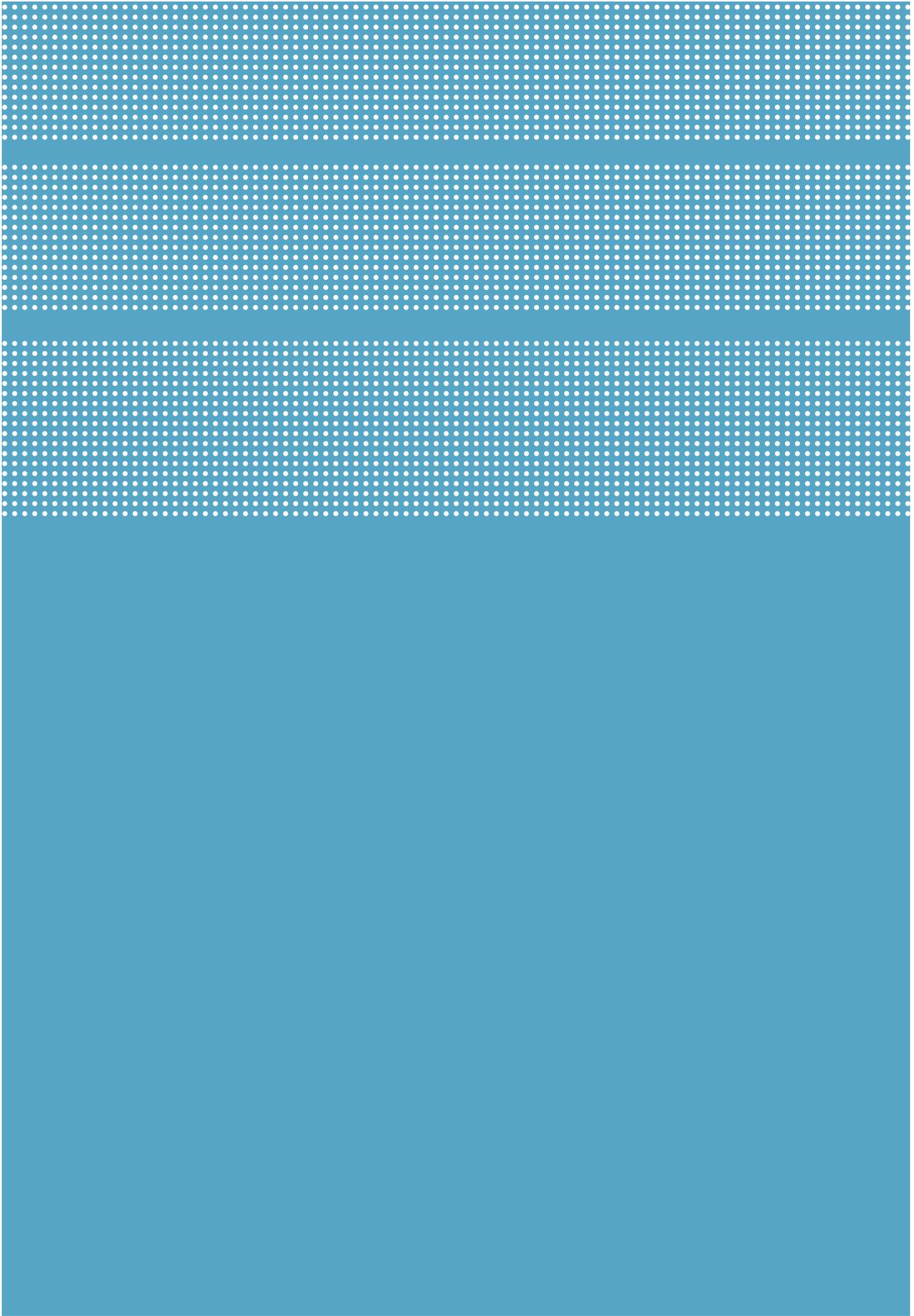
건설경기 진단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윤하중, 배유진, 이승훈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소비심리 진단 박찬규, 황관석, 문지희
 최근의 해외건설 동향 및 전망 정창구
논단
 중소건설업 정책금융지원 실태와 개선방향 김명수
 인프라 투자재원 분석을 통한 해외건설 시장 전략 모색 최중석
칼럼
 정부3.0과 건설 산업정보 및 활성화 방안 김재영
외국의 건설정보
 신중국 인프라 산업 동향과 시사점 김광석, 윤지호
주요 건설통계

78권 2014. 가을 · 겨울호

건설경기 진단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윤하중, 배유진, 이승훈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소비심리 진단 박찬규, 문지희, 황관석
 최근의 해외건설 동향 및 전망 정창구
논단
 2015년 건설업계의 비정화의 정상 과제 강해성
 공공시설물 안전제고를 위한 최근 정부정책과 제언 이영환
 공공건설공사 입찰담합관련 제재 개선방안 권혁진
지상중계
 제23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외국의 건설정보
 글로벌 E&C 기업의 4대 전략 키워드 김훈상
주요 건설통계

6. SPACE & ENVIRONMENT(58호~60호)

	Title	Author
58호 2014. 03	Practical Strategies for Trans-border Cooperation in Amnok River Region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김천규
	New Industrial Location Policy for Job Creation	강호제
	Introduction of Ecological Network for Spatial Plans Aiming to Balance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in Korea	박종순
	Center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tudies	이상준
59호 2014. 07	Cooperation in Eurasia: Korea's Vision and Strategy	이재영
	Silk Road Express: For the Success of the Eurasia Initiative	서종원
	Strategies to Develop Industrial Clusters in Primorsky	조진철, 임영태
	Korea Explores Strategy at Eurasian Knowledge Network Forum	정일호, 강혜경, 박지우
60호 2014. 10	National Guidance to Promote Korean Urban Regeneration	박정은
	Urban Regeneration: Two-Pronged Project	이왕건
	Financing Urban Regeneration: Challenge and Opportunity	유재윤, 정소양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Built on Cultural Heritage	김효정





Chapter

VI

부서소개

1. 부서별 업무소개	146
2. 부서별 인원현황	149

1. 부서별 업무소개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는 국토 · 지역정책, 국토계획평가, 지역경제, 산업입지, 국토환경 및 수자원, 한반도 · 동북아 등 국토계획과 국토 및 지역발전 관련 장단기 정책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국토 · 지역정책, 수도권정책 및 계획, 국토환경 및 수자원 관련 연구, 둘째, 국토계획평가, 국토계획체계, 미래국토 및 국토모니터링 관련 연구, 셋째, 지역경제분석, 공간계량분석, 국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관련 연구, 넷째, 국가 산업입지정책 및 계획, 산업입지 수요분석, 지역산업 입지계획 관련 연구, 다섯째, 통일한반도 및 북한지역계획, 동북아 공간전략, 접경지역 개발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시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시생활환경의 효율적 정비 등에 관한 도시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국내외의 각종 연구 및 정책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풍요롭고 편리한 정주환경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문화 및 관광, 건강장수도시 연구, 둘째, 활력 있고 경쟁력 높은 국토 및 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 및 개발 연구, 셋째, 기후변화 및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방재 연구, 넷째, ICT와 융복합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스마트 도시 및 녹색 도시 연구 등이며,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택 · 토지 연구본부

주택 · 토지연구본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주거복지, 부동산, 토지 및 건설경제와 관련된 정책개발, 시장분석 및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평가 등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연구, 둘째, 부동산 시장분석 및 전망, 부동산 정책개발 및 정책효과 분석 등 부동산시장 연구, 셋째, 토지정책의 평가 및 개발, 토지이용 및 개발제도, 토지수급 및 관리 등 토지정책 연구, 넷째, 건설경기 동향 및 정책평가, 건설산업 및 제도 등 건설경제 및 민간투자 연구다.

국토인프라 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국도로망·철도망계획, 광역대도시권 종합교통정책,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가 및 권역, 도시 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국가 및 권역발전 지원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연계교통 기반 중장기 교통투자계획 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둘째, 도로·철도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관련한 국제물류교통계획 및 녹색물류정책, 셋째,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정보 연구본부

국토정보연구본부는 국토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활용·분석 등을 위한 방법·정책·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정책 및 지자체 공간정보 추진전략 연구, 국가공간정보 중장기 계획 수립, 공간정보 산업 및 시장동향 분석, 둘째, 국토 관련 데이터 수집, 생산 및 분석방법 연구, ICT 등 유관기술과의 융복합 활용방법, 공간정보 분석 및 활용 기술, 원격탐사,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KOPSS), 공간빅데이터, 동적인 시공간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이 있다.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세계경제의 동반발전과 개발도상국 등 저소득 국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12월에 설립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37년간 축적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세계의 우수한 연구기관·대학과 학술 및 정책연구 교류를 확대하여 보다 성숙한 국제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문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획 및 개발컨설팅은 개발도상국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주택건설, 인프라개발 등 국토개발 관련 정책과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본부에서는 연구원 전체의 연구기획 및 융복합 정책연구 지원, 직원의 역량 개발 및 인재채용, 연구원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지원센터는 연구원의 예산편성, 대외기관과의 교류협력, 출판물 기획·편집 및 홍보, 문헌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경영지원센터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연구원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청사시설 관리, 정보기술 및 경영정보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청사건축이전추진단은 연구원의 세종시 이전 및 신청사 건설 업무를 담당한다.

2. 부서별 인원현황

원장

김동주 | University of Pennsylvania 지역경제학 박사

부원장

김종원 | West Virginia University at Morgantown 자원경제학 박사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이용우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Bonn 지리학 박사 | 국토계획, 국토계획평가, 미래국토

서태성 | 선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공학 석사 |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제도

이동우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sukub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지역정책, 수도권정책

김선희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공학 박사 | 환경계획, 갈등관리

이상준 | 선임연구위원 |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공학 박사 | 동북아, 통일한반도

권영섭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경제개발정책, 산업입지 및 클러스터

장철순 |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 산업입지, 지역계획

김광익 | 연구위원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 박사 | 도시정책, 지역정책

김천규 | 연구위원 | Renmin University of China 경제학(자원 및 환경경제) 박사 | 동북아, 통일한반도, 중국지역연구

문정호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계획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 · 광역계획, 국토관광 · 문화

류승한 | 연구위원 | 동국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 산업입지, 경제지리

차미숙 |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 지역정책, 지역계획

박태선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 | 댐, 하천, 수자원정책

양진홍 | 연구위원 |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 국토계획,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안흥기 | 연구위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 도시경제학, 공공투자정책

이순자 | 연구위원 | Colorado State University 정치학(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박사 | 국토계획, 지역 · 광역계획, 국토관광 · 문화

변필성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Arizona 지리학(도시계획 부전공) 박사 | 지역발전정책, 낙후지역 발전, 지역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강호제 | 연구위원 | 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GIS 공간분석

김진범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Tsukub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도시 · 지역계획

이미영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 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지역교통물류

김동한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College London 계획학 박사 | 도시모형, 공간분석

서연미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 기업조직 및 입지, 지역산업정책, 도시의 서비스 경제화

- 박경현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 도시지리, 지역정책
- 하수정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지역경제, 지역 계획
- 한우석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Utah 토목공학(수자원) 박사 | 방재, 수자원
- 장은교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조경학 석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도시설계
- 민성희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경제분석
- 남기찬 | 책임연구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계획, 지역경제분석, 도시경제
- 이현주 | 책임연구원 | Renmin University of China 경제학 박사 | 중국경제, 중국지역개발 및 정책, 중국에너지 자원, 동북아지역
- 정우성 | 책임연구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 도시 및 지방행정 및 정책, 지방재정, 지방자치, 조직관리 | 도시행정 및 정책, 지방재정
- 박정일 | 책임연구원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지속가능한 도시경제발전계획, 공간분석 | 지속가능한 도시경제발전계획, 공간분석
- 홍시흠 | 책임연구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과학 박사 | 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 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 이윤석 | 연구원 |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학 석사 | 산업입지, 도시계획
- 임지영 |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 박사 | 국토 및 지역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 및 주거

도시연구본부

- 김태환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지리학 박사 | 건강장수도시, 지역계획
- 유재운 | 선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경제학 박사 | 도시재생, 경제기반활력
- 이왕건 | 선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 박은관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 | 도시개발, 도시제도
- 김창현 | 연구위원 | 경상대학교 경제학 박사 | 농어촌정주, 수자원(방재), 하천
- 김상조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 | 도시정책, 도시제도
- 조판기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 | 도시정책, 인구저성장, 생활인프라/도시복지
- 박세훈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학(도시계획) 박사 | 도시정책, 인구저성장, 도시문화(다문화)
- 김명수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 도시개발, 환경계획, 경관계획 및 정책
- 왕광익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도시정책, 기후변화, 해외도시개발
- 이재용 | 연구위원 | 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정책, 시공간분석
- 김성수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공학 석사 | 도시계획 및 설계, 건강도시, 도시범죄/안전
- 김은란 | 책임연구원 | Cornell University 지역과학 박사 | 창의성에 기반한 도시성장, 경제기반활력, 스마트성장
- 이범현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박사 |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디자인/경관
- 김중은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임상연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 박정은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공학(도시계획) 박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디자인/경관
- 김동근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공학(도시설계) 박사 |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도시제도

박중순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Cambridge 지리학 박사 | 국토환경, 산림, 연안지역관리
 이승욱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정책
 정소양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문화
 이병재 | 책임연구원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 | 도시방재, GIS, 기후변화, 공간계획
 박소영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 도시재생, 도시계획
 이상은 | 책임연구원 |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박사 | 수자원관리, 기후변화 적응, 재난위험도 분석
 구형수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계획, 공간분석
 김수진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College London 개발계획학 박사 | 도시설계, 도시개발, 도시정책
 박 찬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 도시환경 및 에너지계획, 미래도시 연구
 배유진 | 연구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 도시 및 지역경제, 도시재생, 공공투자
 송지은 | 연구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경제
 차은혜 | 연구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석사 | 도시네트워크, 공간분석

주택·토지연구본부

천현숙 |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정희남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정치학 박사 | 토지정책, 부동산금융, 부동산정책
 김근용 | 선임연구위원 | KAIST 경영공학 박사 | 주택정책, 주택금융 및 세제, 부동산시장 분석
 이수욱 | 선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문학 석사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김혜승 | 연구위원 | 경희대학교 이학(주거정책)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윤하중 | 연구위원 | 가천대학교 공학 박사 | 민간투자, 건설산업, 교통정책
 최현재 |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행정학(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 | 토지이용 및 개발, 농촌지역 개발
 김성일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건설산업정책, 건설보증·금융
 이승복 | 연구위원 | 단국대학교 경영학(자원환경관리) 박사 | 민간투자, 건설산업, 교통정책
 최 수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 토지정책,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조진철 | 연구위원 | 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글로벌개발협력, 동북아지역연구, 도시 및 지역계획, 해외 도시개발
 박천규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이형찬 | 책임연구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주택정책, 토지(택지)정책
 김민철 | 책임연구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 건설산업, 주택정책
 김승종 | 책임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 법, 토지정책
 변세일 | 책임연구원 | 경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 부동산시장, 지역경제
 전성제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박 준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 박사 | 토지정책, 부동산경제
 이태리 | 책임연구원 | The University of Sydney 경제학 박사 |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이윤상 | 책임연구원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조정희 | 연구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건설산업, 부동산산업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이상건 | 선임연구위원 | Virginia Tech 교통공학 박사 | 스마트시티 설계, 교통시스템 계획
 조남건 |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교통기술사 | 교통계획, 고속철도, 교통사업 사전 및 사후평가
 이춘용 | 선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교통기술사 | 도시교통계획, 지역계획,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김호정 | 선임연구위원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도로계획, 교통계획
 김흥석 | 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 교통계획, 생활교통
 정진규 | 연구위원 | 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학 박사 | 교통 및 토지이용, 도시·광역교통정책, 계획이론
 오성호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 ITS, 교통계획
 임영태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지역교통, 물류계획
 이백진 | 연구위원 | Hiroshima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 ITS, 교통계획
 고용석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교통공학 박사과정 수료 | 도로 및 교통계획, SOC 정책
 김종학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 교통서비스 가치 연구, 교통망 구축효과, 교통수요예측
 김준기 | 연구위원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교통시스템공학 박사 | 교통안전, 통행행태, ITS 등
 김혜란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교통기술사 | 활동기반 통행행태분석, 인프라 투자
 윤서연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지리학(교통) 박사 | 교통수요 시뮬레이션, 행동 모델, 시공간분석
 배운경 | 책임연구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교통계획, 교통정책, 통행행태
 육동형 | 책임연구원 | Utah State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 Traffic, Transit Assignment, 대중교통요금산정
 김광호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통공학 박사 | 지능형교통체계(ITS)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박종일 | 연구원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교통계획, ITS
 김상록 | 연구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 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국토정보연구본부

사공호상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GIS, RS, 공간정보 정책, 그린&스마트 시티
 정문섭 | 연구위원 |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 박사 | 국토정보화, GIS정책
 박종택 | 연구위원 |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 공간정보정책, 공간정보인프라
 한선희 | 연구위원 | 동국대학교 전자계산학 학사 | 공간정보정책, 시스템사고
 김미정 |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 토지관리 및 규제 정보화, 정보화전략계획, 국가공간정보인프라
 임은선 |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 GIS 및 공간정보분석, 지역연구, 인재양성
 김대중 | 연구위원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 |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공간통계, 도시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이영주 | 연구위원 | Keio University 미디어·거버넌스학 박사 |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 유통, 공간정보 관련 일본사례연구
 조춘만 | 책임연구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학 박사 | 공간정보인프라정책, 도시계획을 위한

GIS/IT 응용전략

강해경 | 책임연구원 | 부산대학교 지형정보공학 박사 | 공간정보정책, 개방형 공간정보 기술, 공간정보플랫폼, 공간 정보표준,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분석

황명화 | 책임연구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공간분석용 시스템 개발 및 통합, 공간 빅데이터 프로세싱, 공간분석

강민조 | 책임연구원 | Florid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GIS 및 원격탐사, 도시환경

임용호 | 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석사 | 공간정보분석, 공간구조탐색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정일호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Leeds 교통계획학 박사, 교통기술사 | SOC투자정책,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 분석

박미선 | 책임연구원 | 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 주택바우처, 주거복지, 주택정책

송하승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 도시계획, 토지개발

유희연 | 연구원 | 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석사

기획경영본부

이원섭 | 선임연구위원, 기획경영본부장 | Michigan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제도

연구지원센터

오경근 1급관리원, 연구지원센터장 겸 출판문헌팀장 | 이성식 2급관리원, 예산기획팀장 | 박순업 책임전문원, 대외협력팀장 | 이호창 2급관리원 | 정진우 3급관리원 | 윤정근 3급관리원 | 김은주 3급관리원 | 김상규 전문원
한여정 전문원 | 김서영 전문원 | 김문정 전문원 | 노지영 사무원 | 이인희 사무원 | 민상준 사무원

경영지원센터

김경동 1급관리원, 경영지원센터장 겸 지식정보팀장 | 이강식 2급관리원, 총무관리팀장 | 김성태 2급관리원, 재무회계팀장 | 양용태 1급관리원 | 김형표 2급관리원 | 박정기 3급관리원 | 허지인 3급관리원 | 송정현 전문원
양승국 전문원 | 임은지 사무원 | 이동훈 사무원

연구조정팀

김충은 책임연구원, 연구조정팀장 | 김지형 연구원 | 김다윗 연구원

인재개발팀

박동신 2급관리원, 인재개발팀장 | 김진배 2급관리원 | 오희정 3급관리원

청사이전추진단

전준호 1급관리원, 청사이전추진단장 | 이판식 2급관리원 | 임정천 2급관리원 | 김용언 3급관리원

감사실

장인용 1급관리원, 감사실장

2014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발행인 김동주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94-2
인쇄일 2015. 10. 30
발행일 2015. 11. 5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14067)
전 화 031-380-0114(대표)
팩 스 031-380-0470
ISBN 979-11-5898-004-7

www.krihs.re.kr

©2015, 국토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 없습니다.